

# 동독 승인의 열가지 이유

Zehn Gründe  
für  
die Anerkennung der DDR

Peter Bender



1969. 11



## 목 차

|        |     |
|--------|-----|
| 서 문    | 1   |
| 첫째 이유  | 29  |
| 둘째 이유  | 39  |
| 세째 이유  | 45  |
| 네째 이유  | 59  |
| 다섯째 이유 | 101 |
| 여섯째 이유 | 111 |
| 일곱째 이유 | 127 |
| 여덟째 이유 | 135 |
| 아홉째 이유 | 145 |
| 열째 이유  | 177 |





## 독일 민주공화국승인의 열가지 이유

### 세월 속의 각축

서독의 대서방정치사는 실례의 상실과 감소를 막기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을 취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관한 교과서를 읽는 느낌이 있다.

1966년까지 "본" 정부는 동구와의 외교관계수립을 거부하여 왔었다. 그 이후로 외교관계수립을 하려고 하면 동구제국은 "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락하기 어려운 선행조건을 앞세워 사실상 거부되고 말았던 것이다 (단 루마니아는 제외).

과거에 "본" 정부는 동서 양군사동맹체 사이에서 불가침조약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반대입장을 취하여 왔었다.

1966년 봄이 지날 즈음 "본" 정부는 폭력포기선언을 교환할 것을 제안한바 있었는데 바르샤바 동맹제국은 "본" 정부로서는 도저히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1952년과 1955년 사이에 소련은 통일문제와 자유선거에 관한 협상을 제안하여 왔을때 "아테나워"수상은 동맹국들이 그 각서내용을 고려해 주지 말기를 종용하였다.

"아테나워"수상의 후임자 "키징거"수상은 "국제적 관리밑에 시행되는 비밀국민투표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 "본" 정부로서는 여기서 통일이 미구에 실현성이 가능한 목표로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50년대 초기에 의회에서

몇몇 의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소련이 안보문제를 요구하  
 면 어느 정도의 양보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59년 헬타,  
 안에서 통일문제를 "모스크바의 군사적 권익과 결부시켰을 때 (비록  
 불충분한 것이었지만)" 모로토프는 회화벽두에서 서방측의 안을 각하  
 시켜 버렸다. 다년간의 대동방 정책에서 "아테나우워" 정권은 그들의  
 정치적 희생에 관한 문제는 되도록이면 회피하고 다만 통일에 관  
 한 권리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힐슈타인" 외무부상은 1952  
 년 봄 "우리들이 우리들의 권리에 대하여 배가를 치루어야 한다  
 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라는 말을 하였다. "에아할트" 정부도  
 연방정부는 "희생"은 작오하고 있다는 아리송한 말을 한일이 있  
 었다. 괴난민문제상 "그라들"은 1966년 모호한 시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희생이란 국경문제나 군사상의 지위와 안보제도등에 국한  
 되어야 한다" 고 말을 하였지만 통일을 위한 희생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년이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들"의 언행은 대단하고 주목할만한 발언이었다. 전  
 주소대사 "한스 크롤"은 본국에 대한 보고에서 "호르시초프가 50년  
 대 말기에 "본" 정부측에서 전반적인 사태해결을 시급히 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알려왔다. 비록 허풍이 많은 "호르시초프"의 말에  
 의심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가 독일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이 경우 분할의 원칙위에서 해  
 결방도를 강구할 것이었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두개의 국가라는 사실을 용납할 때 우리가 얻는 소  
 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사

이에 조정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될 수 있을가 하는 것이다. 더욱이 장벽의 폭력해결을 포기할가 하는 것도 있다.

1961년 6월 31일, 동백림시장 "에베르트"는 서백림시장인 "빌리 브란트"에게 최후로 서한을 보내면서, "국경통과인문제(동백림지구에서 거주하면서 서백림지구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반대의 사람들)"를 조절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청해 왔다. 이때 "브란트"시장은 전 백림시에 관한 4국협정에 교통의 자유와 서한 교환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요청을 받아 드리지 않았다. 1967년 가을 "브란트"의 후임시장인 슈츠는 "에베르트" 후임자인 "페허나"에게 서한을 보내어 동서백림간의 제반문제 특히 통과증에 관한 협상을 제안하였을 때, "페허나는 그는 자기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절하였다. 서백림회의의 협상대상은 아직껏 독일민주공화국 정부에 있는 셈이다.

1954년 소련의 모로토프는 "전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제안해 왔고, 이를 위하여는 점령군 4개국은 "동서독기구"를 이를 수 있도록 알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때에 "모로토프"는 제안이유로서 이 위원회의 사명은 "독일국민의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제, 문화, 체육의 여러 면의 관계를 확장하여 원활하게 하도록 있다고 하였다. 60년대 중반기에 들어서서 동독의 각료인 "멘데"는 4체국의 위임아래 동일한 문제를 취급할 "전독위원회" 구성을 수차 제안한바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본"에서 기독교민주당의 반대에 부딪쳐 수포로 돌아갔으며 독일통일사회당(그들에게는 독일의 단일문화란 것은 그

봉안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도 4개국 주최  
하의 회담이란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거절해 왔다.

1967년 서독정부가 이와 같은 문제를 4개국의 위임없이 정부  
수준에서 회합할 용의가 있음을 비쳤을 때, 동백림에서는 대국가  
적 상호관계 수립을 그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1964년 1월, “울브리히트”는 “에하르트”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공화국과 민주공화국사이의 대국가적 상호관계라는 선택이 포함  
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치적 협상을 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였  
다. “키진저”가 1968년, 다른협상에서 동백림에 대하여 상호간  
의 폭력 포기를 제안하였을 때, “울브리히트”는 그 전제로서 동  
독의 승인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정치가들에게도 의식되고 있었다.

1962년 “빌리 브란트”는 “우리가 오로지 단호한 자세에서  
우리의 이상만 잃지 않는다면 시간은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1966년 그는, “이 20년 사이에 독일문제 해결은 확실히 어려워  
졌다. 또 독일정책분야에서도 그 대가는 끝없이 높아져가고 있  
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러한 실례들을 열거함으로써 이미 놓쳐  
버린 기회에 대하여 새로운 논의를 벌여보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어느 사태가 그 자체속에 있을 때보다 사후에 판단한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법이다. 과거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교훈을  
남겨준다. 즉 독일에 있어서의 사태는 과거 15년동안에 차차로  
변화되었다는 점, 그러나 현실에 관한 인식이 “본”에서는 언제

나 그 사실을 뒤쫓기에 수년간을 허비했다는 점등이다.

서독정분수립후 정부의 대동방정책은 한번도 사태를 앞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본" 정부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고 할 때면 이미 그 사이에 환경은 변천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부와 정당이 간신히 사태를 파악해 놓았을 즈음에는, 이미 시기를 놓친 때였고 아니면 미급한 사태가 벌어지곤 하였다. 만사가 불충분하였고, 도로에 그쳤다.

이와 같은 실패는 대부분 동방측에서 합의하기를 기피하거나, 수락하지 못할 요구조건을 내세우는데에서 기인하였다.

가령 현재로서 가장 큰 두통꺼리인 "폴란드" 문제만 하더라도

1950년 당시에는 "오벨나이세국경과 동독의 승인이란 조건없이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모스크바"가 오늘날 전독의 중립화를 조건으로 자유선거와 이에 의한 통일을 더 이상 제안해 오지 않는 것은, "본" 정부와 서방측으로서 1952년 때와는 다른 조치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측의 정치분야에서 확고한 요소로서 등장하게 된 제2의 독일을 더욱 견고히 만드려는데 있는 것이다.

연방독일의 견해차이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을 적어도 50년대 후기이래 -연합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자.

1959년 "털레스"와 그 후의 "드폴"과, 그리고 1963년 여름의 "캐베디"는 서독에게 다음과 같이 권해 왔다. 즉, 동독과의 사실상의 협조를 할 것 (털레스), 교통·체신·경제·문화의 특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독일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 (드폴), 동독과 이룰수 있는 모든 접촉점과 연결가능성을 이용하여, 서방측

의 안보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의 통상관계를 최대한으로 이용할 것(케네디) 등이다.

서독정부는 이것들을 들은척 만척 하든지, 아니면 꼭살해 버렸다. 1967년 이래 “본”에서는 이 모든 공식적 안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실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또한 서독정부는 독일정책은 전 “유럽” 정치의 테두리안에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사실상 “존슨”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견해를 표명하면서, 1966년 가을, 자결권과 4개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때에, “본”정부는 하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965년 초에 “드골”이 독일문제 해결은 인접한 동서방축국가들의 합의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단호히 선언하였을 때에, “본”과 “파리” 사이에는 약간의 불화들이 야기시킨적이 있었다.

“케네디”이래 서방측은 독일에서의 진보는 일종의 해빙을 전제로 하였지만, “게하르트”정부는 반대방향을 교수하여 오히려 서독정부로 하여금 해빙(解氷)의 방해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품게 하였다. 대연립정부가 수립되고서야 비로소 연합국들과의 견해접근을 보게 된 것이다.

#### “본”에서의 견해변천

1966년이래 수도 “본”에서의 견해변천과 기본전환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일찌기 있었던 견해들을 적절히 체계화시켜 놓은 것을 상기하여 본다면 이것이 명백하여 진다.

1945년 4개국 공동책임하에 1930년 당시의 국경내에 있었던  
독일을 점령한 4개국은 독일통일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독일통일에 관하여 협상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4개국뿐인 것이다. 이 원칙을 깨트린다는 것은 바로 동방측의  
두개의 국가론을 지지한다는 것이 된다.

독일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라 소련이 점령한 지역일 뿐인 것  
이다. 왜냐하면 공산정부는 민주적 인정을 결하고 있으며, 다만  
소련 점령군의 도움으로서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공산당과 협상한다는 것은 국내외를 통하여, 특히 “크레프  
린”에게 서독은 독일분할을 자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  
든 서독의 정치분야에서는 동독의 승인과 그에 대한 어떠한 평가  
도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규율이 개제되고 있는 것이다.

독일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선택된 유일한 정부로서의 서독정부는  
모든 독일국민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누구  
든 이 권리를 무시하고 동백림정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본”정부는 소위 “할슈타인원칙”에 의하여 이미 있었던 1957  
년 “벨그라드”와의 관계, 또는 1962년 “하바나”와의 경우와  
같이 어떠한 관계도 파기한다는 것을 각오하여야 한다.

“오텔나이세” 동방측의 이전의 독일 영토에 관하여는 1945년  
3개국에 의한 “포즈담” 회담이후 아직 하등의 최후적인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동부국경에 관한 조정은 전독  
일정부에 의하여 체결될 평화조약까지 보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일부분 오늘날에도 역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은 좀 완화된 것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이미 소멸된 것도 있다. 이것이 이렇게 끈질기게 효력을 지속하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

다음 선거에 대한 고려도 있어 왔고, 소련이 그 내부적 변화로 말미암아 혹은 중국의 압력으로 동독을 단념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환상도 있었고, 또 기독교적인 “유렵”의 사상적 배경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를 방어할 때가 오리라는 것, 동독의 국민들이 공산주의정부와의 협상을 “반역”으로서 자각하게 되리라는 심산, 그리고 법적지위의 상실은 정치적 가능성의 상실을 자초하리라는 확신들이 그것이다.

합리적인 불안보다는 합법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동방측에 대한 안보문제는 60년대초까지 가장 인기있는 정치적 구호였다. 오히려 통일문제보다도 더 인기가 있었다. 서독국민들은 동방측의 폭력조치의 영향밑에서 세번이나 선거를 하였다. 7월 17일의 격동이 있던 1953년, 헝가리혁명사건의 기억속에 있었던 1957년, 장벽의 그늘에서 치루었던 1961년의 선거들이 그것이다. 소련으로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사건의 모두가 서방측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권력을 보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서독에서는 음해하기도 하고 또 잘못 알기도 하였다.

“볼프강·뢰링”이 1961년 사석에서 말하기를 “공산주의자들을 좀 안다고 하면 연령이 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신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자들과 정치한다는 것은 — 비록 그것은 “본”에서  
간접적으로 표명된 견해이긴 하지만— 자신이 이미 공산주의자가  
아닐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제 더 협상할 수 없다고 믿을  
때 사람이란 더욱 더 형식에 얽매이는 법이다.

이러한 일은 최근에 와서 많이 완화되었다. 가능성보다도 위험  
할 경우를 더 생각하는 경향은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전 독일에 대한 요구를 취소한다는 것을 두렵게 여기는  
것은 이 요구가 독일이 패전국이라는 사실을 덮어 두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더욱 더 한 것이다. 중부구라파에 관한 동서  
협정, 이를테면 협상가능한 평화조약구상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본” 정책은 “히틀러”의 패배가 냉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서로  
상쇄되리라는 환상을 재빨리 종결지어야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제한된 기한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더 오래 계속될 수 없으리라는 느낌이 국내정치  
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주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허버트 베에나가 1965년 12월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바  
를 말한적이 있다.

“우리들은 국민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독일정책이 필요하다. 왜  
냐하면 그것을 지지해 줄 국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말  
이 바로 그것이다. 원칙의 약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본”정부가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스스로 처해하고 있다는 경험에서이다.

“결정적인 요소로서는 연방정부의 독일문제정책이 승인-예방규정으로 인하여 약화되거나 또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상불능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앞으로 더욱 약화된다면 이것은 공산전영인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을 도와 그들이 원하는대로 행동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되고마는 것이다.”

“허버트 베어나”의 이러한 말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동서간의 신문교환을 “올브리히트”가 제안해 왔을 때 “본”정부가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한 것은 국내법으로 공산치의 구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청년단체·체육단체·노동단체 때로는 예술가·과학자들 상호간의 접촉도 금지되어 왔다는 것은 동독 각 기관의 표지·깃발·선천이 거기에 따르기 마련이었기 때문이다. 동독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야기시킨 협상들은 동독정부각료사이의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구실밑에 언제나 유회되고 말았던 것이다. 동독지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쾌감을 야기시킨 협상들은 동독정부각료사이의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구실밑에 언제나 유회되고 말았던 것이다.

8월 13일의 사건은 그 영향이 계속했다. 장벽이 가겨 온 최초의 분노는 사라지고 현실의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여보워야 할 때까

지의 정책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다. 이제 한 도시를 극단적으로 분할시켜 놓고 보니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원칙에서 후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1963년에 있었던 통과협정은 연방국내에서의 여론조성을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전독문제에 관한 한 다년간 오직 반격만 있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상하고 서방측은 방관하다가 항의하고 하였다. 분열은 더욱 더 심각해져만 갔다. 협정에 의한 사태진전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지만 오래동안에 처음 있었던 진전이었다. 이 진전은 원칙준수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와의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였다. 그리하여 "작은 진전이라도 기대하는 정치"란 새로운 모델이 생겼다.

그동안의 입장이 어떻게 변하였는가 하는 것은 달라진 구호들에서 짐작할 수가 있다. 즉 "장벽을 철거하라"하다가 "브란트" 경우는 "장벽을 통하게 하라"고 한 것은 그 실례이다.

장벽의 철거를 상호접근의 조건으로 삼자는 사람들은 (1966년 봄의 독일노동자동맹위원장 처럼) 상호접근을 기피하기 위한 구실을 만든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다.

\* 독일정책변경의 가장 큰 동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는 인식이다. 즉 동방측에서의 공산주의와 서방측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그것이다. 연합국들이 항전의 봉쇄라든가

“해방”이라는가 하는 것을 부르짖지 않고 협조와 구주통일등을 목표로 세우게 된 뒤부터 “본”정부는 이 시류(時流)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슈뢰더”외무상은 동방측과의 통상 확대와 동구 제 국에 대한 통상사절단 파견, 1966년 3월의 평화각서등과 같은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러한 서로 모순되고 무질서한 신·구원칙들이 존재하여 왔었다. 그러나 1965년의 광범위한 의견일치속에서 진행된 의회선거전이 끝나자 다시 정당들 사이에는 독일정책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었다. (1966년은 새로운 정책이 탄생하는 해이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사민당과 사회주의통일당(SPD)과의 서신교환이 있다. 통과중회담은 하나의 기술적인 접촉으로서 어느정도 파소평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사민당과 사회주의통일당의 서신교환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의 정치적 접촉이었다. 이것은 동방측에서는 소련만이 유일한 당사자들일 수 있었던 15년간의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 되었다. 서신교환을 시작하고 강연초청을 수락한다는 것으로서 사회주의통일당은 “본”정부내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소련의 괴뢰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서 올라선 셈이다. 사민당은 대중앞에서의 공개토론을 통해 절대적인 인기를 일차 용기를 얻어 1966년 전당대회에서 그들의 업적을 공개하였다.

중·4국 의무는 지극히 상대화되어 있고 사회주의동일장은 독일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정치주체로서 나타났으며, 발전된 위성국은 이제 "모스크바"의 동료라는 것이 틀림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누구든 주체적인 정치력을 갖게 되면 그를 아무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브란트"는 말하기를 불승인원칙은 장차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나 분단된 한쪽의 외국이며 위성자들이 민주적으로 합법적이라는 것은 아직 승인될 성질이 안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상시는 동백림에서 임명된 각료급인사와 회담과 협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정치적주체를 갖는자와 싸움을 벌리서는 안될뿐 아니라 되도록이면 협조하여야 하는 법이다. 독일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베나"가 한 적이 있었는데 "브란트"는 말하기를 "만일 국제적인 결정으로서 유화조치가 취해지고 독일의 한쪽 부분에서 자유스러운 여론조성이 용납될 수 있다면 양지역에 있어서의 시기적으로는 제한되나 잘 규제되고 권능있는 병존을 지향할 수 있을른지도 모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이며 불굴의 의지로서 서로 협조하는 방법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말들은 "게어하르드 슈뢰더"가 한 이전의 말들과 비교된다. "재통일의 실천은 경위의 어떤 부분에도 불분명한 때가 없고, 합의된 사항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가 취하여졌을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K "브란트"는 "의지"라는 말을, "슈뢰더"는 "보안"이라는 말을 썼다.  
H "헬무트 슈미트"는 자기의 당수보다 더욱 분명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가는 앞길에 어떠한 사태가 생길런지 미리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북표를 실정해 나가면서 한발자욱 한발자욱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시민당과 평행해서 자민당도 비슷하게 발전시켜 나갔고 대부분이 똑같은 발상이었다.

적어도 결론에서는 상기 양당은 기독교 사회주의 동맹과 합치하고 있다. 특히 "프란츠·요셉·슈트라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은 재통일이 만일이라도 실현된다고 한다면은 독일에서가 아니라 전구라파의 테두리 안에서 만이 생각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동맹은 과거의 독일정책에 어느정도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시인하고 약간의 불만은 있었으나 강연초청 계획을 받아드리게 된 것이다.

1966년 12월 대연립정부가 수립됨과 더불어 사회당정책은 물론 제한적으로 정부정책이 되었던 것이다. "키징거"정부 선언은 확실히 그들의 전임자의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여기서는 "에아할트"정부에서 흔히 사용한 분단에 대한 비애, 부정, "나토"에 있어서의 본정부의 공격등과 같은 말은 없었다. 새 수상은 자유와 긴장해소와 국민경제의 중지등에 관한 말을 하였다. 그의 연설요지는 옛날처럼 동방측에 대한 안보가 아니라 동방측과의 상호이해에 관한 것이었다. "키징거"는 재통일은 아직 기대할 수 없으며 4국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경고하는 일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는 고립된 독일문제 해결이라는 환상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의 진척의 가능성은 다만 범구라파적인 협정안에서 만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긴장완화를 저해하는 어떠한 요구도 이를 철회하고 군비축소와 해빙(解氷)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재통일추진과 직

결사키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키징저"는 "분헨협정" 무효를 선언하고 1937년의 국경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에아할트"와 마찬가지로 동구라파제국에게 경제적 문화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관계까지도 원하였다. 그는 그의 정부선언문속의 외교분야에서 독소관계를 개선하고 동독으로 하여금 폭력포기선언에 서명하도록 "노력할" 용의도 있음을 밝혔다. 그는 "소련지역"이라든가 "단독대표"라든가 혹은 "평가인상"이라든가 하는 상투구는 이를 피하였다.

이러한 안은 비록 사민당보다도 불분명하고 소극적이며 과감한 것이 없지만 절대로 실천을 수반하지 않는 이론으로 그치지 아니했다. "루마니아"와는 즉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바르샤바" 조약국가들은 "본"정부는 동독과 "오멜 · 나이세" 국경을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뒤에 "벨그라드"하고는 대사교환을 하여도 승인문제 같은 것은 들고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이 증명되자 "키징저"는 곧 대사교환을 결심하게 되었다. 동독에 대하여 "본"정부는 많은 통상 장벽을 제거시켰다. "라이프치히"박람회장에 대한 "본"정부태도의 변화는 극단적인데가 있었다. 장벽 구축후 장벽구성은 서독상인들에 의하여 엄금되었거나, 뒤에 허용되었거나 암암리에 환영받거나 하였고 1967 여름 경제상 "월러"는 분명히 그렇게 하기를 종용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는 초청강연정책이 이제 국가적수준에서 계속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사회당뿐만이 아니라 연방정부도 4월에 사회통일당 제7차 선당대회앞으로 접촉안을 제시하게끔

되었고, 수상 "슈토프가, "키징거에게 서한을 보냈을적에 옛날처럼  
복살당하여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한을 보내게끔 되었다. "키  
징거는 (둘째번 서한에서) 자기의 서기관장을 연방정부의 대동독접  
측안 교섭대표로 임명하였고, 또 앞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때는 즉시 "슈토프와 직접면담할 용의가 있음을 언명하  
였다.

( 이 모든것을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연립정부  
가 수립된 이래 대동방측정책과 독일정책에 있어서는 이 모든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정부와 세개의 의회정당이 넘어  
서지 못할 한계가 존재한다. 그 한계란 세계 2차대전의 결과이고  
동방측이 말하는것 들의 합법화인 것이다. 즉 동독의 승인,  
"오벨 · 나이세" 국경문제 그리고 하나의 정치적 독립단위로서의  
서백림문제의 것이다. 이제 "오벨 · 나이세" 분쟁은 두개의 국가  
의 형식적 인정으로서 자연히 처리되고 "본" 정부와 동백림관계가 조  
정이 되면 서백림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동독의 승인인 것이다. 연방정  
부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단독대표 요구라는 말이 어  
떤때는 애매하게 처리되어 버리고 마는것도 그 본보기가 된다.  
수상은 이 말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게통일의 요구는 동독국민들의 자결주장으로 말미암아 후퇴할 것이  
다. 그리고 "브란트"와 "베나"와 "그라들"이 막연한 표현으로서 동독간  
의 민주화과정은 승인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사민당이 기민당보다 이런 점에서 더 앞지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양당이 1967년과 1968년의 전환기에 공포한 정강안은 그말의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시사적이다.

기민당은 "쑤련지역"이라는 말을 이제 하지 않았고 사회당은 "독일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기민당은 승인을 분명히 부인하였고 사회당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기민당은 비록 미약하지만 단독대표권요구가 있는데 반하여 사회당은 이것을 "독일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독일인들 자체의 문제"라는 말로서 요약하고 그리고나서 사회주의통일당도 포함한 모든 독일인은 전체 독일의 위하여 걱정할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기민당은 피안에 있는 "집권층"들과 정치적 접촉을 갖는것은 장차의 통일기초를 확보하고 이것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상당히 수비적인 정강에 대해서 사회당은 여전히 공세적인 표현이다. 즉 "독일 민족의 재통일이란 독일국토에서 두개의 상반된 질서의 투쟁대책이다"라고 하였다. 이 표현은 두개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동독도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치적 질서라는 것, 괴뢰가 아니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다른 제도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다. 사회당에 의하면 이것은 아무도 남에게 자기의견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이해"와 "규제된 공존"이란 뜻이 되며 옛날처럼 그리고 사회주의통일당에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만 "병존"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공세적으로 취해진 타협안, 적극적인 협조(후진국원조와 같은 것) 등은 사민당이 택하려하는 길이다. 사민당은 50년말기

이때 이러한 방법을 비록 중단은 있었지만 주장하고 왔다. 이것은 동서독양측에게 사태진전의 기회를 보증하고 자체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비호하여 준다. 그러나 사람이란 가능성보다도 위험성을 너무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주의통일당과 기민당내의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그러한 생각도 항상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어린 사태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거의 바랄 수 없다. 기민당이나 사회당이나 동독승인을 불찬하는 사람은 아직도 많다. 비록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대연립정부로서는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키징거"의 자주 인용된 언명속에서 명백한 것과 같이 분쟁이 어떤 타협상에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취급하지 않던지 한다는 것이다.

수상과 그의 소속정당의 승인문제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분명하게 밝혀진 두 기회가 있었다. 즉 동독과의 국가법적인 관계수립을 제안한 "빌헬름·볼포강·슈츠"에 대한 예리한 비판을 할 때이고, "키징거"가 "승인과"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이다. 이러한 불법한 형제가 내포하는 목적이 누구나 연방공화국의 정치상류사회에서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한계선이다. "키징거"가 그의 연립내각각료들로 부터 받는 모든 비판들도 "키징거"가 적어도 수도"본"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다.

마치 50년대에 아무도 중립론자로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듯 수도"본"에서의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오늘날 자기가 "승인과"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받기 싫어한다. 이것은 수상으로 부터 나온 비방때문이 아니고 스스로 많은 사람이 비난받는것 처럼 느끼게 되고 정부가

새운 원칙에 다시 충실하려고 하는에서 기인한다. 불칙(不測)의 일이 생기지 아니한 대연립정부는 동독을 승인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구정책의 법적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사민당이 참가하지 않는 정권은 장차에도 옛날 그대로의 위험속에서 머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스스로 이러한 가능성을 보류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법적입장의 옹호에서 보수적 제세력위 동기가 된다.

이때까지 현정권에 계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성공도 드물었다. 이것은 모두 불가피한 일들이었을까? 우리는 대동방정책에서 신속하고도 팔복할만한 진척이란 기대하지 않는다. "본" 정부는 1966년 이래 보다 더 현실적인 접근으로 상당히 큰 수확을 올렸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잃었던것을 모두 되찾았다는 말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연방공화국내의 거물급 정치가들은 모두 일치하여 동독승인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15년간의 경험은 오늘은 생각할수도 없었던 일이 내일이면 생각할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가르켜 준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과거에 항상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다.

승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루드비히 에바라인은 그의 저서 "백림실험"속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승인"이란 단어는 세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객관적인 것이고 이것은 한 사실의 단순한 기록을 뜻하며, 하나는 주관적인 것으로, 이것은 그러한 행동이 하나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도

할 때이며, 마지막으로 국제간의 왕래에서 볼 수 있는 법적인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뜻이 빈번히 혼돈하여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정치적, 법적, 이념적 사고가 뒤섞인 서독의 승인에 대한 토론이 얼마나 무질서 했든가를 말하여 준다. 독일민주공화국이 하나의 국가라는 것은 이제 더 논쟁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확인은 하나의 사실의 기록화 이상의 것이다. 이러한 확인은 독일민주공화국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또 국제법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를 국제법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한 정부가 한 국가를 승인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 이유에서 내려야 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결정이다. 만일, 승인하기로 결정을 본다면 이것은 두가지 의의를 가지게 된다. 하나는 국제법으로 통제로 되어있는 규범에 따라 승인된 국가와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과 승인된 국가는 국제법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그것으로부터 수반되는 여러가지 권리를 함께 갖는다는 명백한 확인인 것이다. 그러나 승인은 절대로 승인된 국가와 정부와 정책의 긍정적인 평가와 결부하지는 못한다. "울브리히트"정권이 독일의 분할된 지역에서 원칙적으로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대표가 아니기때문에 동독을 승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가령 독일노동자동맹) 이념과 국제법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의 불승인은 이에 반하여 정치적인 토론에 있어서의 하나의 법적인 수단인 것이다. 그 목적은 언제나 같다. 승인되지 못한 국가는 국제법적인 주체로서의 권리, 이를테면 국제적 제기관의 일원으로

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정치적 고립과 불신을 받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불승인을 통하여 국내적인 공요화를 약화시키게 한다. 이렇게 하나의 국가를 불승인 함으로써 약화시키고 과소평가하겠다는 목적은 흔히 표면화 되지 않고 법척이며 이념적인 논쟁으로서 분식(粉飾)되는 법이다. 동독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들은 "국제법상으로는 주권국가"가 아니며 그들의 정부는 민주적 성분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동독승인문제와 함께 토의대상으로서 정치적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동서독사이의 법적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고 또 바람직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제법적인 승인은 "본" 정부와 동백림당국을 마치 "일본과 알제틴"처럼 법적으로 동등한 관계로 한다. 동독을 형식적으로나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중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다만 대사교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주저하게 된다. 양독사이에 법적으로 기록상으로 형성될 간격은 참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동독이 그것으로서 "외국"이 되는 결과를 두려워 한다. "빌헬름·볼프강·슈츠는 그의 회상록에서 독일의 "연방간의 지방" 논을 펴고 이들 사이에 국제법적이 아닌 국가법적인 관계성립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이때까지의 양국사이에서 통제가 되어있던 관계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 혹은 성립시킴으로써 "특수관계"를 모색하고자 한다.

법적으로 독일통일의 방해요소를 되도록이면 많이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망들은 동방측에서도 많은 공명자를 얻고 있다. 이리하여 동백림의 동맹국가들은 동독의 국제법적인 승인은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본 정부가 제 2의 독일국의 존재를 승인할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동백림에서의 정의(定義)에는 흔히 “동등권원칙위에서” 라는 말을 부가하여 “정상적인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슈토프가 “키징거에게 보낸 조약초안에 의하면 이 “정상적관계”에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였다. “울브리히트”로서는(1968년 3월 13일) 이러한 관계는 “사태의 당면한 “총결로서 국제법적인 관계”가 된다고 하였다. 수차 되풀이한 선언문속에서 동독은 연방공화국을 절대로 “외국”으로 보지도 않으며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제한선을 긋고 있다. 신독일(新獨逸)의 법제원칙론 논문속에서는 “외국”이란 이민국가(移民國家)를 뜻 하고 연방공화국은 민주통일공화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민족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동백림당국은 국제법적인 승인은 원하나 이것이 불가결한 조건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법률적으로 불분명한 “정상적” “평등한 권리”의 “국가적”관계와 같은 표현들은 즐겨 사용한다는 것은 확고한 개념의 결핍과 행동의 범위와 당위(當為)에 대한 불일치를 시인하게 하는 것들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일부의 사회주의 통일당지도층은 그의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엘베강 양변에 독일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든 독일인이 갖는 국가적 통일목표를 지지하는 사람이면 양독관계에서 이민국가간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성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독정부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일이 또 하나 있다. 제

로마조약에 의하면 //양지역간통상//은 명백히 독일국 통상으로서 간주되고 이로서 민주공화국은 사실상 구라파경제공동체에 포함되는 것이 된다. “본” 정부와 동백림당국 사이의 이러한 국제법적인 관계는 다른 구라파 경제공동체가맹국들과의 불화를 더욱 더 야기시킬 사태를 자동적으로 종결하게 하고 구라파경제공동체의 관세장벽내의 서독의 통로가 동독경제를 도울 것이다.

연방공화국이 동독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공식화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도의 활동범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활동범위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독일민주공화국과의 관계정리를 위한 설치는 동등권이다. 승인문제에 언급할 적에는 그것으로서 동독을 하나의 국가로서, 그들의 정부를 정부로서 형식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동등권을 부여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다

1. 동독인들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는 한 동독인을 위한 발언권을 갖는다는 것은 권리의 포기이다. 동백림측 역시 단독대표권요구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항의는 동독정부가 그들의 주장을 그들이 독일민족의 진정한 권익대표라는 것에서 도출하였기 때문에 세계에서 독일을 유일하게 대표한다는 법적요구를 자르지는 못한다.

또 한편으로 독일에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수립된 유일한 정부는 연방정부라는 주장은 동독을 승인하였다고 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아니며 연방공화국이 점진적으로 민주화되어가는 독일민주공화국과 합친다고 해서 후퇴당하는 것이 아니다.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원칙//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공갈과 폭력

사용과 폭력협박이 수반되지 않는한 정치적으로 간섭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불간섭”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국제적정치의 태반은 타국의 내정에 대한 영원한 간섭일 것이다. 동독도 연방 공화국내에 사회주의적조건의 조성을 요구할 것이고 통일된 독일 국가의 목표속에 새로운 사회적내용을 담으려 하는 의도를 두개의 독일이라는 여건속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의 지도 부나 독일민주공화국의 원수도 연방공화국의 국민들에게 직접 연설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고 “울브리히트”는 “포츠담”협정을 미끼로 서독연방공화국의 “민주적인 평화 애호세력들을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원하는것”은 동독정부의 “의무”라고 날조한 일이 있다.

2. 독일민주공화국의 승인은 “할슈타인” 원칙의 포기일뿐만 아니라 독일민주공화국이 제3국에 의하여 승인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포기하는 것이다.

3. 독일민주공화국의 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포기한다. 지방법원에서 의회의장에 이르기까지.

4. “오델 . 나이제” 국경문제는 불문에 부친다. 동독은 이 국경을 “포란드”에 대한 조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독의 승인은 동독의 국경도 포함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동백림의 승인이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을 갖는다면 그것의 법적 형식을 규정할 때는 아마도 타협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정부와 동백림당국과의 국제법적인 관계는 이미 말한 “본측의” 몇가지 포기를 자동적으로 전제로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제한



없는 동등권이 보증만 된다면, 연방정부와 민주공화국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여러가지 형식이 협상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두개의 독일국가의 특수한 친근성이 표면화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다.

“본”에서 국제법적인 법률상의 승인은 거부한다고 강조한 것은 만일 그런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만 사실상의 승인만을 고려하겠다는 풀이가 된다. 이때에 의면상으로 주는 인상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 “사실상”의 승인이란 그 존재를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그냥 받아드리는 감이 있다. 이것은 국제법적이라는 말과 같이 분리하지도 않고 더 평가 하지도 않으면서 실제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동시에 사실상의 승인이란 법적으로 조금 약화된 승인형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게 된다. 어디에 약화된 점이 있는가 하는것은 법률학자들도 분명하게 지적 못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승인이란 그 폐지를 쉽게 할 수 있고 피승인체의 국가적자격에 대한 류보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이 표현에는 어느정도의 불신과 가치격하가 숨어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승인도 하나의 승인이고 법률상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같은 국제법인 효과를 갖는다는 것은 장차에도 확실하다. 사실 사실적인 승인을 했다고 해서 새로운 국면을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중요한 것은 비우호적인 형식을 갖고 동독과의 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있으며 그런고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찬성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빌헬름·볼프강·슈츠”가 제의한 “국가법”적인 관계라는 것도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그는 상위의 국제법적주체를 전제하고 그의 지언으로서 혹은 부분국가로서의 연방정부와 민주공화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츠”의 논리대로 가면 독일국의 계속존립은 동백림에서나 동방제국에서 심한 논란을 받고 있다. 하나의 연방은 존재할 수 없고 곧 성립되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것은 영연방에서처럼 어떤 관계영역에서 서로 국가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대사대신 “전권사절”을 교환하든지 공동위원회(과거에 제안된바 있는 전독위원회의 방식에 따라)를 형성할 수도 있다. 혹은 상의기구를 설치해도 된다. 상호간에 정식성명을 통해서 서로 외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과 법적관계에서 거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을 밝힌다면 또 유익할 것이다. 만일 합의만 된다면 법률적인 정치적인 환상은 끝이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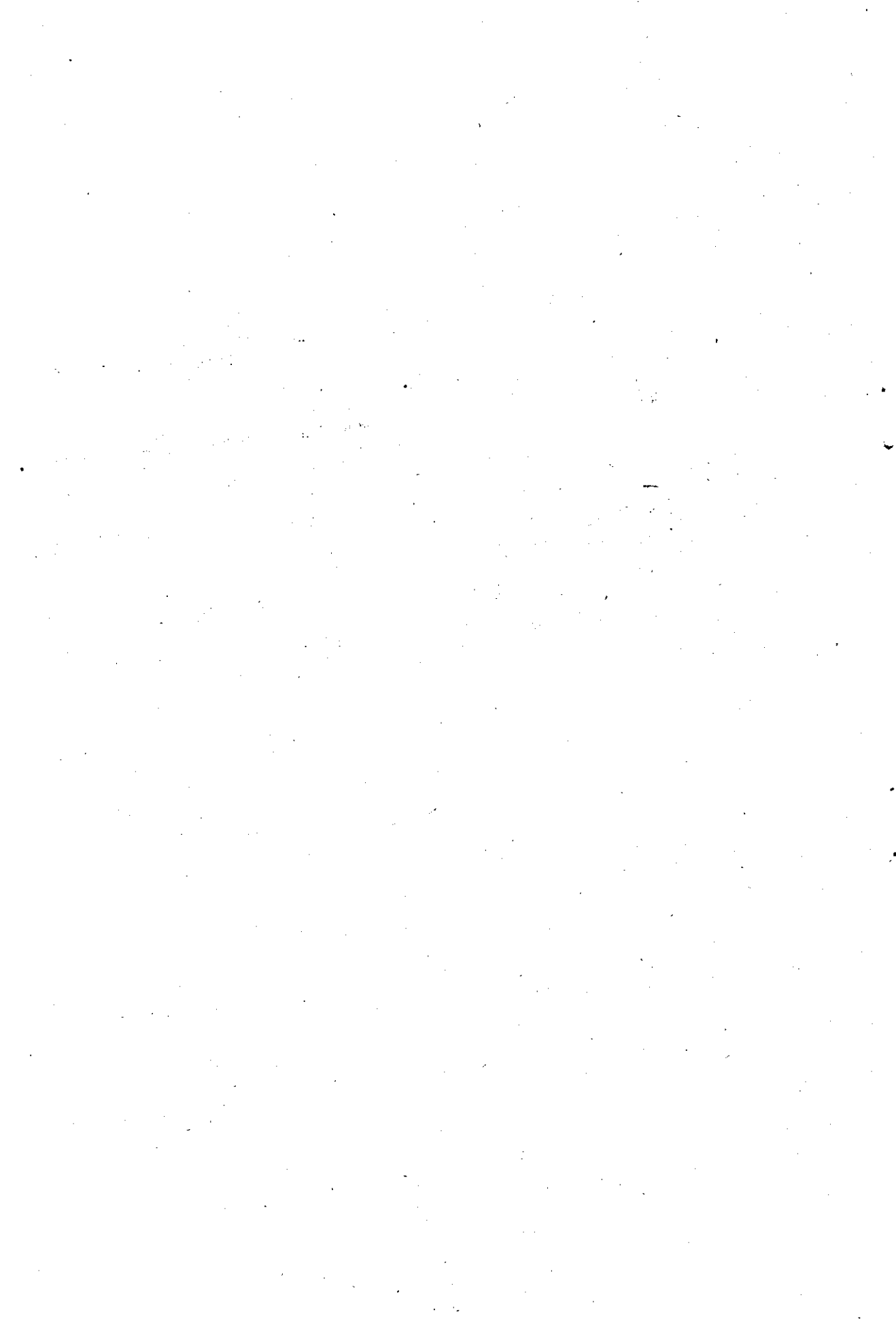
정치가들이 가끔 말하는 공화국이라는 모델은 원칙면에서 교환을 주는데 그것은 국제법적 국가법적인 관계사이에 존재하는 통례적인 차별은 강제적인 자유선택이 없는 반면에 중간 혹은 과도적 규제가 용납된다는 것이다. 독일분단은 그 선택이 없고 분단된 부분사이의 각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의 선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본 청부나 동백림당국은 다 같이 재통일의 목적에 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비록 그들이 국제적인 방식에 의한 항례적인 명칭과 국제법적인 기준에 따라 방향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관계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국가법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것은 어떠한 것이 있

것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슈프"의 제안은 아마도 여기에 비  
익되는바가 크다 할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중에서 한가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형식의 완화와 형식을 독일사정에 적용시킨다는 것이며 특  
히 유익한 것은 국제법상의 승인에 대한 보류를 극복한다는 것이  
다.

동등이 완전한 동등권을 인정 받아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정  
치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로서 열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첫째 이유

독일의 국가적 통일은 가까운 장래에 그 실현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리고 독일민주공화국은 국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제2의 독일국가라고 되풀이하여 주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공화국은 현실적인 문제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정책 속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 재통일 가망의 희박성

거의 20년 동안 독일민족은 두 개의 국가 속에서 생활해 왔고, 이러한 현실을 변경하기란 당분간 예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오히려 두 개의 나라와 주민들 사이의 소원감은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다. 양반된 독일은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공통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서독은 서방측과, 동독은 동유럽측과 그 공통성을 더 많이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외종적으로 합의된 형식적 사항도 역시 소멸되었다. 1967년 이래 양측에서 인정된 국적(國籍)이란 이더 존재하지 않으며, 양측에서 공동으로 인정하는 형법도 이제는 소멸되었다.

1968년 초봄부터 독일민주공화국은 다른 "사회주의적 헌법"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족적 유대는 허물어진 셈이 된다. 동서독인 사이의

결혼은 이제 그 가망성이 없어졌으며, 재통일이란 말은 그 참뜻을 상실하게끔 되었다.

비록 국제적 전제(前提)로서 국가적 합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자주적인 형태를 갖춘 두 나라의 새로운 통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적 전제조건외의 결핍에 따라, 분명하고도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분단상태의 계속을 오히려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가. 통일된 독일은 (그것이 서방측에서는 동방측에서는 간에) 동서 양진영 사이의 균형을 크게 깨뜨릴 것이므로, 흡수당할 입장에 설 진영측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일에 대해 찬성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전독일의 중립화도 역시 양진영이나 혹은 최소한 한쪽 진영의 불신을 사게 되어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하든 관철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도저히 지탱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약 8천만의 독일 국민과 동서독의 통일된 경제적 힘은 양진영 어느 쪽에든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 될 것이다. 인구수와 경제적, 정치적 잠재력으로 보아 서독은 서유럽에게, 특히 유럽경제공동체에게 그다지 큰 짐이라 할 수 없다. 동방측 진영 내에서의 동독도 역시 같다고 할 수 있다. 공산국가로서의 전체 독일을 생각한다면, 소득 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더 클 것이므로,

아마도 소련 역시 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다. 만일 통일된 독일이 하나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분단상태는 양진영으로 보아 이득이 아닐 수 없다. 서독은 서방측에게, 동독은 동방측에게 각각 불가피한 존재가 되어 버린다. 만일 "본" 정부가 태평양조약에서 탈퇴한다면, 미국 사람은 아마도 유럽대륙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륙에서의 철수에 대하여 불안을 품지 않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구 방위를 위한 서독 재무장에 대하여 생각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구 방위를 위하여 차지할 서독군의 역할은 극히 클 것이기 때문이다. 꼭 같은 점을 경계면에서도 들 수 있겠다.

유럽공동시장과 후진국 원조에 있어서 차지하는 서독의 힘은 크다.

꼭 같은 역할을 동방측에 대하여 발휘하고 있는 것도 동독인 셈이다. 동독은 공산권 경제회의(COMECON)안에서 제 2의 공업국가이며, 소련의 첫째도 손꼽히는 거래 상대국이기도 하다.

동독은 군사적으로 소련의 전초방위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폴랜드"를 서방측으로 부터 격리시키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측면을 엄호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혹은 이념적으로 보아 동독을 잃는다면, 그것은 소련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운 계기를 마련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들 스스로가 만들었고, 그 존립을 굳게 보증하여 준 한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 진영의 두목인 소련으로 부터 자본주의 진영으로 넘어 간다면, 동유럽에 있어서의 소련 세력의 전구조가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만일 동독이 서방측에 접근한다면, 적어도 폴란드·헝가리·체코·루우마니아 등 여러 나라는 동서 양진영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게 될지 모른다. 또 소련은 북경에 있는 경쟁자들에게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 내에서의 사회주의의 퇴패는 소련의 지도부가 “시민적”이라고 비난하는 중공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되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면 중공이 혁명사업에 있어서의 유일한 선구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는 혁명의 성지로서 간주될 것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의 어떠한 나라도 분단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쏟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독일의 분단상태의 계속화는 걸잡을 수 없는 발전으로 야기될 위험성과 전쟁의 공포를 면하게 해 주리라는 주장은 가끔 연합국 사이에서도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란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자주 거론되었을 때, “본파 동백림의 양정부는 그들의 동맹국가들보다 더 현상 유지에 급급함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이다. 이는 동서 양진영의 어느 한 쪽에서든지 ‘히트러시대의 악몽을 아직껏 가지고 있는 증좌인 것이리라. 동서 양진영에서는 독일의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강요를 민족주의로서 받아드릴지도 모르고, 또 오해할지도 모른다.

동서 양진영은 애당초 그들의 관심 밖에 있는 독일 통일이 성



취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느니 보다, 차라리 옛 전쟁원병으로 돌아  
아가 독일에게 대항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써 "본"의 연방정부와 정당들은 독일의  
통일은 유럽의 평화적 질서란 테두리 속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아직도 있음을 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가능성으로서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통일이 아  
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정도로 동서의 대립 상태가 해소되고, 그  
리하여 이웃나라들에 비하여 견줄 수 없도록 비대한 나라로서 출  
현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독일의 통일이란 하나의 희망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  
고, 그의 실현성이란 유럽의 통일과 마찬가지로 먼 장래에나 이루  
어질 수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세계가 두개의 독일에만 성화한다는 것  
이러하여 독일은 양분간 두 개의 국가 속에서 분단되어 살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존속  
될 상태를 사실상으로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그대로 받아 드  
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에서도 이미 두  
개의 국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듦으로써, 더욱 더 긴박성을 띄게  
하는 것이다.

「할슈타인 원칙」의 두말할 나위도 없는 성공도 이러한 사태를 도의

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비공산국가들이 동독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사실 성공한 셈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서독의 독일정책에 있어서의 그들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피난민상인 "본 하셀"은 1967년에서 68년으로 해가 바뀔 무렵, "여러 국민들의 대다수가 우리 편에 서 있다"고 하고 그러나 여러 국민들의 대다수는, 특히 제3세계의 국가들은 독일정책에 있어서는 아무 편도 아니라는 주장을 한 일이 있다. 그들이 "본" 정부를 전독일의 대표로서 보고, 동독을 국가로서 보지 않기 때문에, 동백림과 외교관계를 거부 안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에게는 서독이 민주적이든 동독이 민주적이든 아니든 간에, 하등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또 민족 자결이란 인기적인 요구도 효과가 적다. 이러한 구호는 아시아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으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므로 동서 분쟁에 휘둘려 들어가자 않으려는 경제참을 불러일으킨다. 비동맹국가들이 동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별로 소득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본" 정부가 1965년 "이스라엘"과 "태사블" 교환하였을 때, 대부분의 "아라브"국가들은 서독정부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그렇다고 동독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지는 않았다.

서독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동방국들이 수행한 후진국 원조 총액의 두 배 이상을 단독으로 해 왔다. 그러므로 동독을 승인한다는 것은 제3국가들에게는 큼직한 원조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본정부와는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독과는 통상 관계를 맺는 식의 유동적인 처신은 중립국들로서는 가장 실리있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양측으로부터 모두 관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의 통일이 먼 나라들의 관심을 얻는다 해서 성취되리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이다. 여러 나라 국민들이 입으로 만이라도 통일을 도우리라는 것도 그리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유우엔”에서 제 3 국가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래 “본” 정부는 독일문제에 관한 토의를 되도록이면 피하려 하였다. 왜냐하면 투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독은 미국과 영국의 밀접한 우방국가로서 “신식민주의”에 대한 동방국들의 가장 좋은 선전적 사격 목표로서 안성맞춤이 되기 쉬운 것이다. 또한 서독은 “유우엔”의 회원국이 못되고 “오브서어버”이기 때문에 서독의 권익을 원외활동으로서만이 대표할 수 있을 뿐이며, 따라서 적극적인 참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유우엔”에 있어서의 동맹국들이 서독을 위하여 움직일 때에는 동독의 동맹국들이 동독을 위하여 정식으로 어떤 활동을 유우엔에서 시작할 때에만 한한다. 서방측은 독일문제로 말미암아 소련과 필요 이상의 알력을 피하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로, 독일문제에서 어떤 성공적인 기대를 갖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고, 또 두째로는 서방측 자신이 두 개의 독일을 하나의 기정 사실로서 간주하

고 있기 때문이다.

서방측이 동독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아래 세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① 동맹국에게 대한 충성

② 서방 3국이 연방공화국에게 전독일을 대표하는 권리를 인정할  
독일조약에 대한 신의

③ 연방공화국과의 상호 관심사에 대한 근심

각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의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이며 결정적인 동기는 “본”정부에 대한 정치적 배려에 있다.

만일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려고 결심만 한다면, 다른 부태평양조약기구 회원들도 지체없이 이에 따를 것이다.

세계가 두 개의 독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통일에 대한  
가망이 없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동독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이  
유에도 있다는 이유에도 있다. 지구상에서 공업국가로서 제 8위를  
차지하는 나라를 지도에서 말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경  
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그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소  
결과 그의 동맹국들로부터 동독 승인을 위한 강력한 외교적 지원  
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하다.

물론 이러한 지원도 그들의 권익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한도 내  
에서 이행된다. 오는 동독측의 국제정치무대에 침투하려는 노력  
뒤에는 한 강대국의 집중적인 힘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또한 부인  
할 수는 없다.

이 활동의 결과는 오늘날 주목할만큼 비대해졌다. 동독은 “이스

외  
3 라엘"에 독일민주공화국 대표를 파견하여 대사 역할을 시키고 있으며, "캄보디아"에는 외교대표단 것을 두어 총영사와 공사 중간물 같은 불분명한 것을 두었다. 또한 동독은 열개 나라에 총영사를 두고 있는데, 알제리아, 기니아, 인도 (뉴델리, 뭄바이, 마드라스, 칼컷타), 레바논, 마리, 모로코, 수단, 시리아, 통일아랍공화국 그리고 핀란드 등에 상주하고 있다. 쿠바에 대사를 파견한 것 이외에는 "라틴 아메리카"에는 거의 없고, 검은 "아프리카"대륙에는 다만 지역적으로만 외교대표 같은 것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유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에는 대표단을 강화하고 있다. 가장 강화된 곳은 "아랍"세계이며,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버어마" 그리고 "인도네시아" 제국 등이다.

통상사절단도 대부분 영사권을 가지고 있어, 그 단원들에게는 외교관의 신분을 부여해 주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동독대표를 문서상으로도 대사와 구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동독이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제3세계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동독의 인사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해외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둘째 이유

동독승인은 서독의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부담을 면제해 줄 것이다. 서독정부는 이로서 제3제국과 동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행동자유와 광범위한 협조의 가능성을 얻게 될 것이다.

동독 승인으로 인한 연방공화국 외교정책상의 손실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도처에는 서독의 대표자들이 동등권이 있는 동독의 대표자들과 대립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동독을 무시하고 그들의 발언권의 가능성을 탈취하여 왔기 때문에 서방측과 많은 중립국들은 동독의 주장에 일관된 가치도 두지 않았던 것이지만 승인후에는 이러한 단순한 사태에 중지부를 적게 될 것이다.

서독 대사들은 라이벌의 방해공작에 대하여 대처할 필요가 없는 한에서만 안면과 평온한 사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이점을 과소평가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서독이 그의 동맹국이나 다른 국가에게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동독 대표자가 그에 대해 작용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연방공화국의 입장이 약화되고 동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시기나 장소에는 동독의 대표자가 주재하는 많은 저개발국가에서 처럼 오히려 동독과의 마찰을

외하므로서 당분간의 현상유지를 해야 할 것이다.

2. 서독과 동독은 항상 경쟁자로 있어서는 안된다. 동독 승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뒤에 밝히겠지만 경쟁을 점점 협동으로 변화시키자는 데 있다.

3. 승인으로 인한 손실은 서독 외교정책에 가져 올 이점을 고려해 본다면 그렇게 크게 평가될 것이 아니다.

“할슈타인” 원칙을 엄격하게 주의하므로서 과거에 발생한 손실에 관해서는 이제 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제3세계의 제국가가 동독과 외교적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서독의 행동자유를 구속해 왔던 것이다. 즉 1965년에 와서 바로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것, 1966년 말에 '바르샤바' (Warschau) 조약의 국가들과 대사교환을 제의했다는 것, 1967년 말에 10년 전에 단절되었던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를 재개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부자유를 서독은 극복해 나왔다. 그러나 유엔에서 소련이 양 독일을 동시에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공화국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동독을 인정하므로서 서독 외교정책을 위해 가져오는 첫번째 이익이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큰 기쁨이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독의 대표는 동독의 대표와 싸움을 해야 할뿐만 아니라 지금은 연방공화국이 피할 수 있는 많은 국제적 분쟁에 개입을 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그렇지만 세계정치에 대한 야망을 갖지 않는 국가라 할지라도 마침내 가장 중요한 세계기구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단념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다.

### 제 3 세계와의 관계

불승인 정책이 후진국원조라는 엉뚱한 결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날 동독의 중립국에 대한 진출을 막고, 그들의 외교적 가치평가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서독은 그 나라의 경제적 발전의 기여를 고려하지 않고 그 나라 정부나 대표들의 소망에만 따라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추진시켜 주어 왔다. 몇 나라에 대규모의 가치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대신에 서독은 도처에서 소위 단독 대표권을 확립시키기 위하여 대부분 "물뿌리개식(Watering-can System)법"에 따라 원조를 분배했다. 이려고 보니 손실은 결국 피원조국에서 보게 되는 것이다. 저개발국가들은 실지로 필요한 것을 받지 못했다. 연방공화국은 이익이 없는 기업에서 신용대부한 것을 되들려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돈만 잃고 만다. "에집트"는 1967년 연방공화국으로부터 10억 "마르크"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유에서 촉진된 계획들은 정치적 불화를 유발시키는 무서운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비경제적이며 현실적으로 하등의 가치없는 공장들은 그 공장설립을 도운 자의 체면만 꺾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발전상인 "셸" (Schell) 주도하에 특히 그 다음

‘키징거’ (Kiesinger) 와 ‘브란트’ (Brandt) 정부하에서 많은 것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가능성은 오늘날 정치적으로 고려보다는 경제적 타산을 위주로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데서 부터 시작한다. 후진국일조는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면 비로소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이 나타난다는 경험에 입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연방공화국이 불인정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취해야 하는 여러가지 본의아닌 행동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서독은 공갈에 넘어가지도 않으며, 금전으로 사람을 ‘사려고’ 하는 의사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신사행위에는 얼마든지 담례할 각오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적어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신사행위를 취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러한 태도가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에 모든 결정에서 50% 정도의 역할을 한 독일식 관점은 사실상 의미를 잃었지만 여전히 그 영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정당과 외무성에서는 아직도 보수적인 세력이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0년이상 ‘할슈타인’ 정책에 입각하여 설치되었던 기구가 어렵기는 하지만 점점 변화하고 있다. 이 변동은 두가지 사정에 의해 저해되고 있다. 하나는 만일 다음 선거 후에 사민당 국무위원들이 다시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과도적인 정책변경이 문제되고 옛 로선이 다시 살아 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동독을 승인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서독 외교정책의 항구적이며 확고한 목적이란 사실에서 이다.

승인문제에 관하여 이미 세계는 독일의 분단을 기정적인 것으로서, 독일통일의 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 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세계여론에서 독일사정의 개선을 위해 거의 혹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하나의 국가에서가 아니라 2개의 국가에서라도 긴밀한 공동체로서 있고 싶어 하는 독일인의 심정은 이해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이해는 동독을 승인하므로써 용이한 것이지만 현재상황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제3국내에서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양독일의 대표의 공존은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알력만 생길 뿐인 것이다. 승인은 양독간의 관계를 항상 중립적으로 만들 것이지만 불승인은 적대감만을 낳게 하는 것이다. 불승인은 독일통일이라는 명칭 밑에 연출되는 여러가지 수치극을 자꾸만 연장시킬 뿐이고, 전세계에 독일 불화라는 셋을 수 없는 관용어를 퍼지게 할 것이다.

#### 동맹국과의 관계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서독의 불승인정책은 여러가지의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들은 동독 운동선수가 그들의 국가나 국가기장을 어떤 NATO가맹국에서 나타내려 한다거나, 어떤 동방측 국가가 국제연합에 동독의 가입 동의를 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부탁을 해야만 한다는 딱한 입장이 그 한 예이다. 그러나 독일정치의 본질에 관한 동맹국가간의 의견차이는 그들이 독일을 귀찮게 생각할 지도 모른다는 위구감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존 포스터 딜레스" 시대 이래 서독의 재통일

원칙은 여러번 미국인과 서구인의 긴장해소 의도와 갈등을 겪어왔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개방은 동맹국가와 정치적으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필연성에서 실시된 것이다. 대연립정부는 동맹국가간에서 고립화될 위험을 해소시킨 것은 대동방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이점이라고 자랑했다.

서독의 대동독정책과 전독일정책은 동맹국가들이 얼마나 보조를 맞추어 주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나타나는 것이다. 동독승인을 하고 나면 서독의 대동방정책은 서방측의 전구라파정책에 기탄없이 협조할 수 있는 전망을 처음으로 갖게 될 것이다.

## 세 째 이 유

동독에 대한 승인은 연방공화국내에 존재하는 환상들을 없애 줄 것이고, 내정에 있어서 신뢰도와 행동력을 증가시키며 동독인에게 갖는 서독인의 소외감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여론정치와 민주주의 혼돈

연방수상 "키징거"는 동독에 대한 그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증명되듯이, 우리 국민은 동독승인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 하였다. 이러한 말은 여론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는만큼 이론의 여지가 없다. 1967년 가을까지는 서독국민의 60% 이상이라는 절대다수가 동독승인을 거부하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이라는 것은 성서나 통계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여론으로서 모든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알다싶이 묻는 방법이 어떠 했느냐 하는 것이다. (암시적 질문도 그중의 하나) "오벨 나이세" 국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세곳에서 하였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상당히 계몽적인 본보기를 보여 주고 있다. 1967년 6월 "엘미드" 조사는 설문에서 "만일 연방공화국에서 "오벨·나이세"를 독·파(獨·波)국경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혹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찬성이 19% 반대가 51% 였다.

1967년 9월 "인파스" 조사는 설문에서 "포란드"는 우리가 "오벨 나이세" 국경을 인정할 때 까지는 우리와의 외교관계수 협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조건을 수락하여야 되겠습니까 혹은 차라리 외교관계수립을 단념해야겠습니까? ” 하고 물었다. 19%가 승인하자는 쪽이요 52%가 반대이었다.

1967년 10월 알렌스박하조사는 설문에서 “우리가 “오벨 나이세” 선으로서 타협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35%가 타협에 찬성하고 43%가 타협을 반대했다. “엔미드”조사와 “인파스”조사가 거의 흡사한 결과를 나타낸데 반하여 “알렌스박하”조사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그 원인은 순전히 묻는 말이 어땠느냐에 있다. 앞에 두 조사질문에는 “승인”이라는 말을 썼고 뒤 조사에서는 “타협”이라는 말을 썼던 것이 그러한 차이를 낳게 했던 것이다. 승인이라는 말은 단념의 연상을 이르기 쉽고, 타협이라는 물음을 일종의 체념적인 수락과 소망의 포기를 내포하는 말이다. 정치적 사실로서는 국경수정요구의 포기라는 같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지만, 질문형식에 따라 여론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결과의 표현력이 약한 것은 대개 여론의 밑바닥에 정치적 통찰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만일 누군가가 통일에 찬성한다거나, 승인을 반대한다거나 할 적에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는 통일의 조건과 승인이 가져올 여러가지 유리한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966년 “알렌스박하”조사는 현상태의 정치적 여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서 동독과의 합작을 성취시킬 것이냐고 물었을때, 질문을 받은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이에 찬성을 표하고 네 사람중 한 사람은 반대를 표명하였

다. 또 우리가 "오벨 나이세" 국경을 인정하고 그 대신 동방측  
 판의 관계개선을 시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제법 현실적인 질문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53%가 찬성이고 33%가 동부국경  
 의 정식인정에 반대 하였다. 만일 여기에 14%의 무대답을 가산  
 한다면, 연방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명백한 기준이 나오게 되  
 는 셈이다. 1967년에 행한 엔미드조사는 "동독정부가 그의 통  
 치지역의 주민에게 부담을 줄게 하고 보다 많은 자유를 보장하  
 겠다고 약속한다면 동독을 승인해도 좋으냐"라는 물음에 58%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했고, 25%가 찬성을 보여 주었다. 무조  
 건 승인이 7%나 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1967년말 까지 계속되  
 었다. "알렌스박하"조사는 동독의 승인에 대한 추상적 질문을 하여  
 61%의 승인반대측과 21%의 찬성측을 나타내었다. 같은 조사소  
 에서 두번째는 "엔미드"조사 처럼 보장약속이 아니라 협상으로 "부  
 담의 경감"을 전제로 한다면, 승인을 해도 좋으냐 하는 질문에  
 찬성 수가 29%로 올라갔고, 반대가 50%로 내려갔다. 1968년  
 정월의 "인파스"조사에서는 29%가 찬성이고 51%가 반대라는 여전  
 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약간 국민의 태도가 완화되어가는 듯  
 이 보인 것은 묻는 말의 형식에서 오는 영향일 것이다. 즉, 우  
 리에게 외국이 아닌 독립국으로서의 동독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변동을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  
 나는 승인을 찬성하는 수가 증가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  
 민의 파반수가 제2독일을 국가로 승인하느냐 하는 물음에 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의 부정적경향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치적 비중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못된다. 동독이 생긴 이래 "승인"이라는 말은 금기되었고 대부분의 정치가와 여론인들은 법적개념을 가치개념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승인이라는 것을 국가법적 국제법적 관계로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울브리히트라는 전제자요 민족반역자요, 발포명령자, 장벽과 철창 구축자, 동포를 부정하고, 분할을 영구화하고, 소련에게 항복한 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상징하는 말로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승인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주장일 수도 없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은 아니다. 1967년 6월 14일 "키징거" 연방수상은 (바로 이 시기에 "엔미드" 조사가 여론을 조사하고 있었다) "제2독일의 국제법적 승인은 우리의 역사와 민족의 과거와 장래에 대한 배반행위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승인에 찬성한다는 것이 정치적근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적다. "엔미드"조사에도 그의 질문에서 한가지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찬성을 조사하였다. 즉 동독주민의 부담경감이라는 것이다. 두개의 독일국가를 승인할 때 전제가 되는 서백림의 상구적인 안보, 구라파의 평화체제, 이것으로서 초래될 수 있는 통일문제해결 등은 이때까지 서독의 정치가들에 의해서 한번도 공개적으로 거론되어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수상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만 토대로 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귀신이 있다고 아이에게 가르쳐 놓고 귀신을 겁내는 아이를 나무라는 아버지의 행동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다. 일방적인 정보와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동독인에게 이롭다는 전제가 서면 동독을 승인해



도 좋다는 서독인의 네사람중의 하나는 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승인의 가능성이 전연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점에서 참고가 될만한 것은 1967년 11월에 행한 "알렌스박하" 조사이다. 이에 따르면 51%라는 절대다수가 "우리로서는 결국 어느때는 동독을 제2의 국가로서 승인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여론이다. 서독인은 아마도 그들의 정부가 생각하는 것 보다 정치적으로는 훨씬 성숙하고 현실적인 것이다.

연방공화국 국민들이 동독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하는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 여론에도 국민들이 방위문제와 승인문제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1965년에 실시한 "디보쥔"사는 "전반적인 화해와 동독동포들의 생활향상을 위해서 동독과의 접촉을 제외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하고서 30%의 절대반대와, 55%의 고려가능성도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2년 후에 와서는 "키징거"와 "슈토프"의 정상회담이라는 여론이 대두되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자유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연방수상과 판코프집권층에 속하며, "장벽과 철조망"의 총책임자인 사람과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통례적인 규범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때의 현장을 좀더 자유스럽게 상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승인을 논하는 편이 훨씬 낫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렌스박하"와 "인파스쥔"사는 63%에서 74%까지 회담을 찬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키징거"와 "슈토프"사이에서 서신교환이 있기 전이요 "울브리히트"에 의해서 정상회담의 제외만 받았을 때인 1967년 4월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란 그렇게 곤란한 것이 아니다. 원하지 않는 "승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협상이라는 말에는 긍정적일 뿐이다. 승인한다는 것은 단념해 버린다는 것이겠으나 협상한다고 하면 상대가 적일지라도 손득이 있으리라는 심리가 숨어있는 것이다. 협상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리라는 여론동향은 "오델 나이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동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 "키징거"와 "슈토프워" 회담이라는 "주상적인" 물음에 대하여도 응답자의 3 분지 1에서 2 분지 1까지 이 비율을 찬성하고 있다.

1967년 "알렌스박"조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호왕래와 통과증 실행"이라는 개인적인 편리라는 목적을 설정시키면서 물었을 때 90%가 찬성했고 4%가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한 정책에 대한 찬반동향은 정부와 정당에 의한 선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서독과 동독의 수뇌인사들의 개인적 접촉이란 이제 서독인에게는 1966년 사민당과 사회주의 통일당의 "신뢰완전 연사교환"이란 사건이 일종의 환상을 야기시킨 이래로 별로 산가한 착상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다. "키징거"의 수상유임, "브란트"와 "박예너"의 당주도권 장약은 대동독협상의 기운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르게 하였다고 대동구관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공산정권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기는 50년간 말기에 와서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아메나우어" 수상도 고위 정권말기에 혹여는 차츰 협상용의에 대한 여론을 듣고 있었다. 이 편파만본부의 지도자 까지도 물론 여러가지 "유브조건"을 내걸었지만 화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다. 에르하르트 정부에서도 대동구협상이 정책축에 포함되었었고, 언론계에서

1950-1960년대 동독에 대한 여론 동향

도 원칙상의 지지를 표명한 일이 있다. "키징겨 정부에 관해서는 이 점이 특히 강조되었고," 알렌 박하의 1967년 9월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9%가 동방측과의 관계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21%가 동구제국이 "우리를 방해하는" 한 그들의 공무니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이러한 여론결과란 별것이 없다. 진척이 있어 보이는 것은 환영하고, 소득없는 포기는 거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신있게 하는 것이면 국민들도 지지하고 나선다. 정부나, 정당이냐, 언론계가 반대하고 반역자로 까지 모라게치면 국민들도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나선다. 그렇다고 여론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나 정당이 여론조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뿐이다.

만일 이러한 현실을 잘못 알면 여론정치(민중정치)와 민주주의를 혼돈하게 마련이다. 헌법기초자들이 의식적으로 국민투표조항을 헌법에 삽입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결정을 국민의 대표들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인 것이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민주정권이 아쉽다. "아메나우위가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고 있을때 여론의 뒤흔침이 있었다. 그러나 그로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상이었기 때문에 소신사항을 원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던 것이다. 국민의 대다수가 승인을 반대한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다만 그것만의 이유로서 소신을 철회시킨다면, 그것으로서 정부와 의회는 소임된 "의무를 완수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승인이 미칠 국내 정치적인 위험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여론을 항상 업무에 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만일 "승인"이 현실적으로 논란되었을 때 민중속에서 새로운 환상이 옛 환상에 대치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대한 기대는 실망을 야기하고, 희망과 실망은 시계추 처럼 이동한다.

승인이 내정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승인" 조치에 완고한 반대를 갖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독의 승인은 "오벨, 나이제" 국경선을 승인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진 피난민연맹은 그 내포적인 것이다. 서독의 정책중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점을 그들은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때의 치료방법은 두가지 뿐이다. 현실과 환상사이를 왕래하는 곡예사적인 용변을 농(弄)하는 것 보다, 참을수 있는 태도로 솔직하게 우리 독일이 최소의 희생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이것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적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성 있게 말하여 준다라는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단체가 끝끝내 반대의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남은것은 간단하나 효과적인 조치로서 정부의 개정적인 뒷바침을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내정면에서 막대한 제약을 받더라도 외교정책을 과감히 수행해야 할 정부는 그것 만큼의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 여기서 국내 극우파들이 동독의 승인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자파세력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갈 것이라는 점이다. 승인이 가져올 혜택이 조속히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혹은 사소한 불리라도 노출되면, 승인을 하므로써 "독일통일에 대한 반역행위"를 했다고 떠들

이 별 것이다. 동독승인을 반대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또 여기에  
기에도 있는 것이다. 독일민족당의 팽창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서독에 있어서의 극우파의 독재는 외국에 있어서 서독내의 민주  
적 역량을 의심받는 계기가 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하  
여 다만 서독정부로서는 합리적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책  
으로서 소신있게 그 실현에 노력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에  
따를 것이고 결국 민주주의의 적은 궁지에 몰리고 말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고려해야 할 일은 외교정책상의 위협성을, 국내정책의  
악화를 가져온다는 점 뿐만이 아니라, 국내정책상의 취약점이 외교  
정책상의 우유부단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다. 현재도 극우당인 민족  
당은 구원을 국민간에 되살리면서 서독정부와 서방동맹국 간의 긴  
밀한 협조를 반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만일 서독정부가 동  
독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서방측동맹국들의 참여가 부득이한 경우  
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 결과란 아마도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부  
절서상태를 야기시킬런지도 모른다.

여하튼 서독내에서의 민족주의는 국제적인 고립을 뜻한다. 서독  
외교정책의 기초가 되는 서방측과의 정치적 동맹은 차등으로 난과  
에 부착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 뿐이다. 연  
방정부와 정당은 외부에서 서독민주주의의 광범위한 패배를 기도하  
는 어떠한 압력이 오드라도 차주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독일인으로  
서의 권익을 항상 안중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민족당의 세력확대  
문제는 동독의 승인을 반대하는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경우에 생길 분계인 것이다.

승인이 수반할 국내정치적인 이점

승인이 안겨줄 이점을 외교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 그 이점이란 무엇보다도 불승인으로서 초래되었든 불리한 상황이 제거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 첫째 이점이란 연립정부와 당내의 의견대립이 해소되는 점이다. 동독이 승인되지 않는 한 보수주의자들은 "판코프도당"을 승인하는 길을 트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많은 국내정책적 문제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기민당과 사민당의 제휴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한번 승인문제가 결정만 되면, 이를 반대한 사람이라든지 우유부단한 사람들도 기정사실로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견대립은 없어지고, 정부는 행동자유를 얻게되고 동방정책은 형식적인 견해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이점은 정치가들이 자기해방감을 얻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적극적인 대동방 정책을 원하는 "키징거", "보란트", "베에나"와 기타인사들에게는 이때까지 그들이 고민하고 오던 외교적 포현상의 액로가 해소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정치면에서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을 들수 있다.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가를 - 대연립정부의 많은 공과에도 불구하고 - "헬무트", "슈미트"는 1968년의 연초에 강조한 일이 있다. "작으나 기회상실로서 변명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시일이 가면 길 수록 더욱

해명하지 못하는 일인데 그것이란 정치서 진실에 대한 용기의 결  
핍인 것이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진실을 공개할 의무를 갖는다.  
만일 그들이 이 의무를 망각하고 선거민들의 기회주의적인 경솔한  
경향에 영합하기 위하여 실현성 없는 약속과 공허한 계획만 남발  
한다면 결국 선거민에게 신뢰를 얻을 기반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본질적으로 우리국민은 저속한 잡지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현실적인 국민인 것이다. 대연립정부의 역사적사명은 진리성  
이다. 이 진리성의 발취야 바로 사명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서독의 정당들이 또 입두에 두어야 할 일은 동독의 승인이 허  
은 보수층들에게는 실망을 가져다 주었으나, 젊은 층에게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대정당들의 청년층에게는 승인문제가  
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민당, 사민당, 자유당에 속  
하는 학생단체는 적어도 동독과의 "국가법"적인 관계는 찬성하고  
있다. 독일총학생연맹은 1968년 3월 동독의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청년단의 일부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사민  
당의 청년의원들도 1967년 "오델 나이세" 국경의 승인을 공언하였  
다. 그리고 동독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는 협정을 제안하면서 소  
란을 피운일이 있었다. 청년동맹에서 까지도 소수파가 동독을 정  
식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승인정책은 양독의 화  
동자유 뿐만 아니라 동구제국의 활동마저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은 정당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 뿐만이 아니라  
1966년과 1967년 여름에 행한 "알렌스박하"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괄호안은 1966년

의 조사수자)

○'호텔 나이세'국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57% (46)가 찬성, 32%

(47)가 반대

○동독승인을 찬성하는 학생은 38% (34)이고 반대는 53%

(56)

○전독대 표견이 합법하다고 찬성하는 측이 52% (37), 불법이라고

하는측이 48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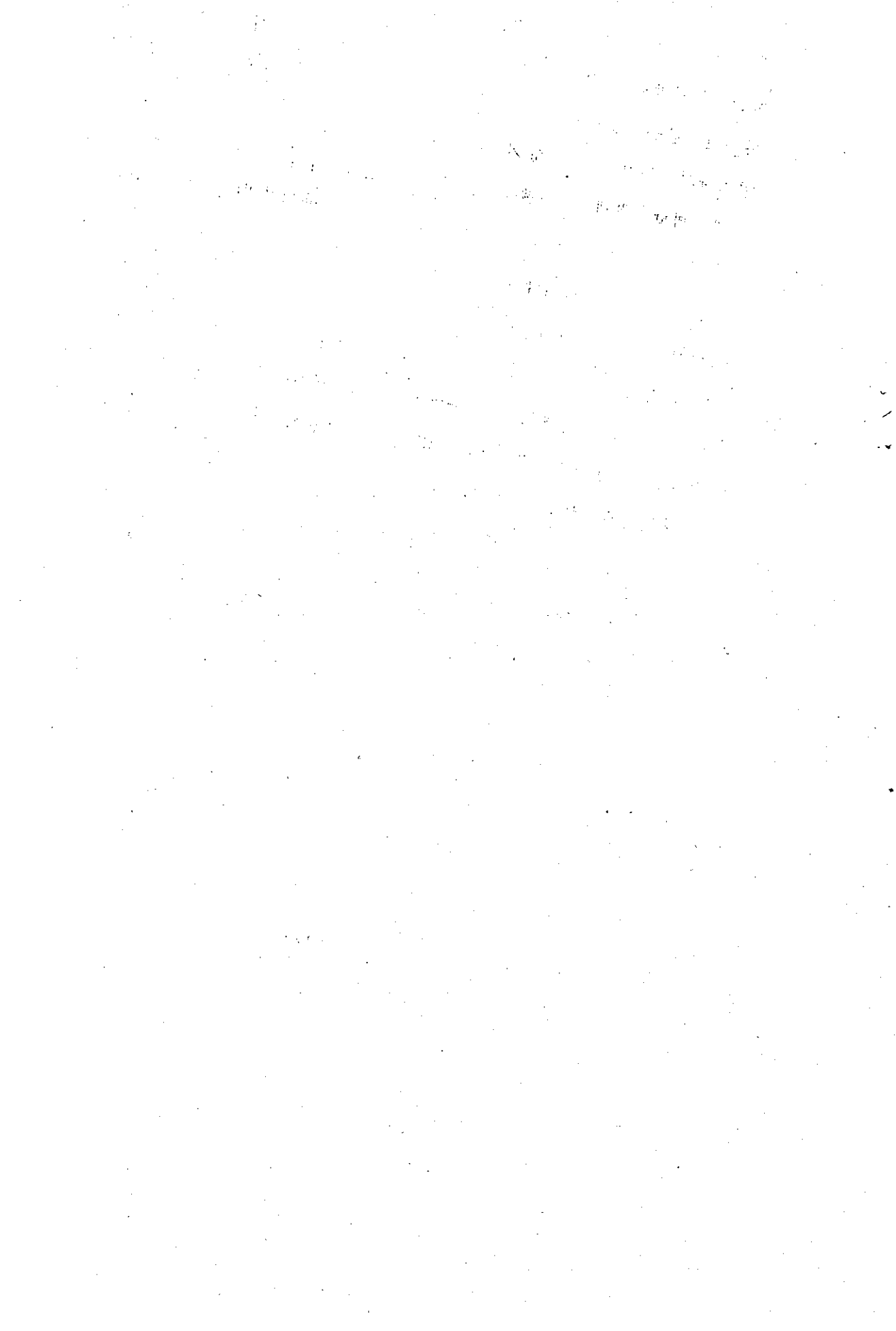
우리는 여기서도 "키징거"와 "브란트"정권의 새 정책이 미친 영향을 볼 수 있으나, 그러나 항상 학생들은 정부를 앞지르고 왔다. 이 모든 학생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속하는 당파나 종교를 초월하여 승인분제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그 수는 증가일로를 걷고 있다.

그림 테스트와 선언테스트로서 자기의 조사한 바를 발표한 "페터 호프슈테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소련공화국측에 서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피안의 독일인 상을 반대상으로서 항상 그린다. "서독인을 전형적인 독일인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 반대상은 확실히 비독일인이어야 한다. 적어도 그러한 인간상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일을 맡기지 못할 사람일 것이다."

다른 곳에서 "호프슈테더"는 또 더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서독에서 획일적으로 생각하는 동독인은 심리학적 용어에서 '홍분부'라는 것에 해당 한다. 정치적상황의 예비지식 없이 이 조사를 시행한 과학자면 동독인이란 연방주민의 대적이며, 심리적공세의 집속적 대상물이라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편견을 해소시키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형제자매"라는 다정스러운 호칭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취한 업적을 입에 발린 말로 칭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입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을 힐난하고 동독을 소련의 식민지라고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권에 대한 견해가 그 주민에 대한 견해에 영향을 준다. 상호의 의욕된 선전과 사고가 소의를 조장하고 무의식적인 적대감정으로 발전시킨다. 그러므로 동독을 하나의 독일국가로서 우리들의 의식속에 부식하는 것만이 이러한 현상을 지양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절대조건이 되는 것이 동독의 정식 승인인 것이다. 동독인이 서독인과 동등한 국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서독인은 소련식민지라는 혐오감을 그안에 사는 사람에게까지 연장시키고 마는 것이다.



## 네 짜 이 유

동독의 차별대우는 그 정부와 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

제2독일국가의 동등권은 이 점에서 원한을 없애줄 것이며 그 국가와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서독으로부터의 동독의 소외를 저지해 줄 것이다.

### I. 지 도 총

#### 1. 여러가지 징표

1967년 봄에 나는 동독의 한 관리에게 동독의 목적의 본질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다음과 같이 물은 일이 있다. "제2독일국가로서 존중되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는 다음과 같이 화를 내면서 부인했다. "제2독일국가 이 말은 마치 서독이 제1국가인 것처럼 부차적 등급의 여운을 풍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종의 동등권을 지닌 독일국가이다" 이러한 대답은 법률상 정치적 관념적인 배려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되어 있지만 적지않게 중요한 승인문제의 일면을 명시한 것이다.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마음의 충격은 (인봉한 대답에서와 같이) 지나치게 감정적이며 자명한 것으로 강조되어 나타나 있다. 1967년 봄 "라이프치히" 박람회에 갔던 사람은 고속도로 연변에서부터 벌써 뇌졸이 되는 다음과 같은 말의 내용을 볼 수 있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 말 밑에 넓고 검붉은 금빛 들보 위에 동독의 국가분장과 또 그 아래 "세계무역 파트너인 동독"이라고 훨씬 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세계" 혹은 "국제적"이란 말을 꺼낼 수 있는  
 어느 곳이든 이와 비슷한 표현이 수년 이래 도처에서 부글대고  
 있다. "라이프치히" 박람회 경우, 약 60개 참가국을 가진  
 이 박람회의 국제성이 도외시되는 한 그것은 무스탕스런 인상  
 을 주고 있다. 동독에서도 외부에 대한 체면에 관하는 것이라면  
 누구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항만을 게시하는 것이다. 얼마동안  
 거의 의례적인 반복형식이 되어 버린 "주권국"인 동독이란 상투  
 어에서와 같이, 그 주장이 모든 사람의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장관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순전히 선전물만 담긴 책자들을 추천받더라도 별로 의외로 생각하  
 지 않을 것이다. 증거물이 얼마든지 있더라도 항상 그 배후에는  
 선전적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예에  
 서도 보듯이 그것만으로서 모든 것을 해명해 주고 있는 것은 아  
 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월성에 대한 되풀이되는 강조는 좋지  
 않은 선전이며, 그것은 확증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자아내게 하기  
 때문이다. 실지로 내부적인 우월성을 갖지 못하는 자가 그의 외  
 부적 우월성만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것이며 "우월성의 침해"까  
 지도 형법조항속에 끼어 넣는다. 충분히 안정을 느끼지 못한 사  
 람만이 이상한 확증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이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개인에까지 미쳐 있는가 하는 것은 "울브  
 리히트"외 부인 "롯데"가 내각회의 의장에게 제출한 "에집트"  
 방문(1965)에 관한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다. 존경을 받았다는  
 말과 서독정부가 이에 대해 갖는 일종의 실망이 주제가 되

이 일관해 있다. 그러나 그것뿐만은 아니다. 동시에 비공산주의 세계를 보며 그곳에서 대우받았던 것에 대한 소박하고 거의 감동적인 즐거움을 엿볼 수 있다.

2월21일 나는 즐거운 감격을 경험하였다. 처음으로 비동맹국 각층의 환 나라로 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구나 학교시절부터 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적 보고(寶庫)가 있는 나라로서 배워왔고, 우리 품의 피안에 존재하는 대상으로서 간주되었는"에 짚"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가슴이 부풀대로 부풀었다. 서독정부는 이 여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 했고, 심지어는 어느 국왕의 조력까지도 빌렸든 것이다. 그것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을 때, 서독정부는 정치적 예언자들까지 등장시켜, "볼브리히트"가 방문할 때에는 영접양탄자가 국가원수들에게 잘아 주는 보충 길이 보다 짧을 것이며, 예포는 몇발 모자라게 발포될 것이고, 의례히 외국원수면 거처하게 될 "쿠베"궁전에도 거처하지는 못할 것이리라는 말까지 퍼지게 했다. 그러나 독일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민족을 자의로 판단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간지 오래인 것이다.

2월26일 비행기에서 나는 처음으로 황야라는 개념을 실감하기에 이르렀다. 늘 없는 모래, 갯빛 석회석, 바위, 모래언덕, 갈짜기 모양의 이상한 구멍이늘 등등... "룩솔"에서는 부인들이 나에게 키쓰를 보내 주면서 인사도 하여 주었다. 서독에서 온 몇몇의 여행인들은 이와 같은 소란속에서 얼굴을 들처럼 굳히고 바보처럼 지 있었다. "룩솔" 시민의 그러한 환영은 그들에게는 이해

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양쪽신문의 사진사들이 우리들 앞으로 언  
신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기진맥진한 초최한 "올브리히트"의 사진을  
찍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셈이었지만 사실 소용없는 일이었다.

3월 1일 시간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는 않았다. 내일 고국으로 되돌아 가려면 집을 꾸리지 않  
면 안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매우 아름다운 공원을 안  
을 산책하러 나갔던 것이다.

쿠베중전 전면에는 매일 저녁 총려나 무가지에 하얗고 빨간 등불을  
매역 놓고 마치 등화세계속에 있는것 처럼 꾸며 놓고 있었다.

이러한 글을 읽고 어떠한 사람은 한 늙은 여자공산당원의 낭만  
주의와 그녀의 남편의 성공을 좋은 인상으로 보여주려는 그녀의  
노골적인 의도를 비웃을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까닭에  
이 보고는 몇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라고도 할수 있다. 즉 무  
시로 말미암아 입은 깊은 자존심의 상처,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로 부터 융숭한 대우를 받게 될때에 느끼는 승리감,  
그리고 이 세계의 체험가능성에 참여할 수 있는 일개 노동자 출  
선의 딸이 갖는 즐거움등이 이것이다. 그러한 감정이 특히 사회적  
여론형성에 작용을 하게되면 역시 정책의 수립과정에도 영향을 미  
치게 할 것이며 흔히 입법에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  
가들이 시인하고 있는 경험인것이다.

연방공화국의 역사에 있어서 1960이래의 사민당의 정책이 이러  
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집권하고 있는 소위 "시민"의

정당에 접근한다든지 때로는 동화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테나우워"에 의해 주도된 몇 가지 사실들을 무조건 수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견해를 낳게 하였다. 빨갱이라든지, 파 괴분자라든지, 조국이 없는 동무 집단이라는 혐오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생각이 결정적 동기를 준 것이다. 사민당은 사회의 존경과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뜻에서 정권유지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고 싶었다.

1967년 11월에 아미 "헬버트·베어너"는 선거전에서 사민당이 거두는 승리는 독일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아테나우워"의 선거전에서의 그릇된 구호를 상기시켰다. "베어너"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민주동맹과 기독교사회주의동맹은 사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지 아니하면 안되게 되었다" 그러나 사민당의 당수로서는 사민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조차도 불만스러웠던 것이다. 그는 연방수상인 "키징거"에게 1967년 1월 대 연립정부일주년기념일을 맞이하여 연방의회와 전독일국민앞에서 정부의 대내외정책수행에 있어서 사민당의 존재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또 "베어너"가 기독교민주동맹이나 기독교사회주의동맹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단독으로 보다는 제휴가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적인 수법이며, 그러한 음모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말하였을때, 이것은 기민당이 갖는 내정단독처리권에 대한 반발과 같은 인상을 품겨주었던 것이다.

"베어너"가 사민당은 자기들이 받는 제 2 당적인 부당한 취급에 늘

불만을 갖는 태도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은 타당의 교만을 편협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자당  
에 대한 경고라 할수 있다。

1947년 이래 많은 연방지역내에서 집권도 하였고, 제헌작업에 결  
정적인 역할도 담당하였으며, 반공활동에 있어서도, 특히 백림에  
있어서 눈부신 공헌을 한바 있는 정당이, 더 많은 자신이 있어  
야 하겠다든가 명예회복과 인정과 동등권이 필요하다고 하는것  
은 도무지 어불성설이라 아나할 수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확장되었다든지 잘못생각하고 있는것이 아  
닐지도 모른다는지 하는 감정이 더욱 더 반항심을 자극하게 하  
는 것이며, 이것이 정치의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는것이다。

사민당원들이 그러 할진대 공산당원들에게서 끄러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사회  
주의통일당을—특히 그의 정권을—사회적붕괴와 민족적 반항의 화  
산으로 간주하고 있는것이다。 이를테면 사회주의 통일당은—당사로  
서는 공산당—1945년 소련으로부터 도입되었고 얼마 안되어 조선  
의 지지로서 집권하게 되었으며, 6월 17일에는 소련의 힘으로 안  
정을 보게되어, 줄곧 소련에 의해 권력을 유지하고 독일분단정책  
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론은 동백림의 집권층에게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동독내부에서는 이러한 유보감정  
은 감소되었지만, 서독내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란—존경 받을만한



사람이라든지, 서독에서도 (비록 다른 상황에서 이겠지만) 필요로 하는 개혁사업들이 동독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이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한하는 것이다. 독일공산주의자들도 역시 (사실 수단이란 뜻에서 만이 아니고) 독일인이고 싶어하는 것이다.

'울브리히트'가 그의 1967년 연말연설에서 사회주의통일당은 독일역사에서 올바른 교훈을 받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을때 그것은 이념이나 권력의지의 민족적 장식 이상의 것이다. "나와 모든 선배들에게는 이것이 모두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닐 수 없다"라고 그는 말했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줄곧—나에게는 60년이 되었교—우리는 우리독일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독일제국주의 군국주의 나치스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도했다. 그렇지만 우리는 쓰라린 패배의 교배도 마시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많은것을 배웠다. 그래서 부지런한 우리 국민은 어려운 시련에서 결국 승리자로 나타난 것이다. 독일과 세계의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다.

전체독일에 이러한 꿈을 품는다는것은 공산주의자로서의 고난에 찬 생활이 결국은 보상을 받을것이며 어릴적부터 갖고온 사회주의 이념을 적어도 독일의 일부에서라도 실현시켜 보겠다는 그들 나름의 자위적행위인것으로서 절대로 소홀히 볼것이 아닌 것이다.

「울브리히트」의 방법과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이란 평생의 사업과 내면적으로 깊이 연관되고 있는 법이다。

투쟁을 한다는 것은 정치가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나 무시를 해 버린다는 것은 개인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울브리히트」도 적과 투쟁만 한 것이 아니라 모욕도 주고 하였다。 자기 자신도 많은 모욕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아무리 동독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은 새로운 것과 진보와 미래를 대표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연스런 자신을 갖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동구제국의 당동지들과 비교하면 잘 알 수 있다。 그들 동구동지들은 내부적으로 자유롭고 외부적으로 독립하고 주체적이기 때문에, 행동에서 관대하고 자신의 강점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며, 따라서 훨씬 융통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 보다 더 부유하고 매력적인 독일지역이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독의 약점을 더욱더 노출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이 받는 악평은 스스로가 초래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야무튼 사회주의통일당은 현재로서 집권을 하고있고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들을 알기위할 필요는 없다。 그들과 함께 정치를 해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용만이 중요하다。

그들이 갖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불안정성이 과도한 방위욕구나 공격적인 허세로 변질되어 이것이 경직상태가 되면 교섭상대로서 지극히 취약하기에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독과 함께 대화의 길을 트는 것은 오늘날 정치적인 문제일뿐아니라 일종의 심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 서독에서 항상 무시되었던 것은 역시 많은 훌륭한 의도가 햇빛을 보지 못했다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 서독의 실책

1966년 사회주의통일당은 (동독의 연사들에게 처벌 소추에 대한 안전을 부여할 예정이었던) 수감(手匣) 법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는 이유로 연사교환을 거절했다. 서독에서는 이것은 순전히 하나의 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그것은 단지 구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와 같은 법률의 보호아래 독일연방공화국으로 들어 온다는 것은 동독공산주의자들에게는 범죄자로서 휴가를 얻어 그들의 청중앞에 나선다는 것을 뜻하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이 세상 어느곳에서 결국 자기와 협상하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정치가들을 (대화의 목적이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범죄자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키진저"와 "슈토프"가 1967년 서한교환을 한 이래 양독정부수뇌들이 직접 회담을 갖는다는 사실이 전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서독정부에서 수감(手匣) 법의 애매성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 법을 폐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떤 검사가 합법의 원리에 의해 행동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기 쉽다는 위험이 이론상으로도 성립된다는 것이 많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의심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독측에서 발한 서한형식은 성공의 전망을 증대시키는데 공헌하지는 못했다. 동독측의 서한도 역시 서독측의 화해무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지는 않았었다. 상대방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나도 같은 잘못을 저질러야 한다는것은 아무런 변명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키징거'의 상냥함이 이전의 '본'정부가 늘 채택한 표현형식과 뚜렷하게 대조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서한은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서식에 속하는 것이다. 정중하지만 모욕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다.

'키징거'는 "독일 민주공화국 내각회의의장"이란 '슈토프'의 정식 직함을 서한속에 넣는다는 것을 하지 않았었다.

(기민당내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도 모른다)

그는 동독을 완전히 국가로서 무시한 것이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호칭이나마 쓰여진 것은 봉투에만 제한되었고 그러한 호칭이 공식으로 불려지기만 관리들중에서도 한번도 없었다.

'키징거'와 그의 자료들로서는 이 서한교환은 "연방수상"과 개인 "슈토프"라는 사람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서독기자들 까지도 서독의 수뇌들과의 회견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표현법에 이미 반성이 되고 있었다. 동독측에서도 자기들은 "동독 내각회의의장"이라하고 서독쪽을 단지 한 개인으로만 취급한다고 해서 놀랄것은 하나도 없다.

수상으로서는 조금이라도 공손함을 보인다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첫째번 서한에 대한 설명연설에서 그는 연방의회에서 다시 "Pankou의 사람들"이란 옛상투어를 사용하였다. 그가 교양인의 자부심에 가득찬 태도로 이 서한을 규정짓기를 무어라고 했는가 하면, 이 서한은 동서독의 일반대중들이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하였든 것이다.

즉 "키징거"는 "슈토프"에게뿐만 아니라 역시 동독의 국민을 향하여서도 썼든 것이다.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서한에서는 그러한 선전적인 부차적 목적도 따르는 법이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그것을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서한의 수신인에게서 자기가 속한 영역의 대표권을 이쪽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즉 서한속에서 단독대표권을 강조한다든지, 외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자유선거에 의거하지 않는 동독정부라고 정식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두번째 서한에서 수상은 상투적인 민족자결권을 주장하였다.

그는 텔레비에서 만일 상대방에서 이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것은 "자유로운 국민투표"인것이다라고 설명하였든 것이다.

어떠한 사람도 "울브리히트"와 "슈토프"가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협의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와같은 감정을 건드린다는 것은 국내정치에서 자주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니면 정치심리학의 기본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입증해주고 있는것이다.

동독정부는 서독측에서 자기들을 합법정부라고 인정하여 줄 것  
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차별대우를 하지않을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다.

“울브리히트”는 서독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우리가 장관을 ~~본~~으로 파견 한다면 그는 장관으로서 대  
우를 받아야만 한다. 서독정부가 이 경우에 어떠한 해석을 하든  
지 그것은 우리로서 상관없는 일이다.”

“울브리히트”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세계어느곳이든 인간이  
로 왕래하는 곳이면 반드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만일 어떤 회사의 구매 혹은 판매대표인이 상대편과의 교섭에  
서 “키징거”와 “슈토프” 사이에서 있었던 식의 교섭을 하였다면 당  
장 해고 당할 것이다. 만일 어떤 서독의 교관이 어떤 외국 대표  
와 “키징거”와 “슈토프” 사이에서 하는 식으로 외교를 했다면 수상자  
신이 솔선해서 그에게 해직사령을 내렸을 것이다. “슈토프”를 대할때  
“키징거” 수상이 “드골” 대통령을 대하듯이 했더라면 그의 소속당은  
그의 사임을 즉시 중용했을 것이다.

서방측에서 요구되는 예절과 외교방법은 동방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되는 것이며 특히 불신과 적대감정이 지배하는 곳에는 더욱  
더 하는 법이다.

서독이 이제 외교적관계를 취하고 있는 “루마니아”에 대해서는 정  
치가들의 언사는 정중하고 대부분 오히려 우의적이라 할수 있고

신문의 보도기사에 있었어도 훨씬 객관적이다. 부마니아, 정부가 동독 정부보다 조금도 민주적인 것이 아니며 동독은 독일 연방공화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도 이성적인 교제의 확고한 근본원리가 동독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경험과 가능성

달리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드문 경험들로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동독의 대표들과의 왕래에서 대부분 특히 외국에서 이쪽에서 취하는 태도여하에 따라 저쪽 태도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첫인사를 할적에 화제를 백림장벽에 관한 문제에 돌린다는지 동독정부가 연사교환의 계획을 잘때 처럼 서로 약속을 해야 할 것인가 해도 좋을것인가를 긍정하기 시작한다면 격의없는 객관적인 대화가 교환되기란 실로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만 하게 되면 서로 솔직한 교섭이 성립될수 있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자명한 사실을 피하려하지않고 상대방을 다같은 독일인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서로가 언어만 동일할 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될 것이다.

동포로서 서로 존경받고 있다는 만족감은 표정에서 흔히 읽을 수 있는 일이고 그 표정속에는 자랑과 고마움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다. 서독 외교관들이 서독정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 국가를 우월적으로 대변했을때 그들은—보다 더 좁은 한계에서 이지만—비슷한 경험을 했을것이다. 통행증 협상에 비회담때 당시 30대 말기의 "콜버"와 소련에서 15년간을 지낸 "고참 공산주의자"인 "벤트"사이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인간적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치적으로 딱딱한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게 되었으며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이익이 침해되는데 무관심하게 된것도 없었다.

독일의 불행은 양측의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직접 알지 못하고 말로만 듣고 알뿐이고 공보관들이 미리 작성한 설명이나 자주있는 왜곡된 보고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1967년 9월 "브란트"가 "루마니아" 당수 "치수큐를" 공식 방문 하였을때 비록 일곱시간이란 짧은동안이였는데도 어떠한 외교관이나 기자들이나, 정보원이나를 막론하고 그들이 도무지 해내지 못할만큼의 일을 해냈다는 것은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직접 회담이 얼마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를 지배하고 당을 지도해야하는 사람들의 위치는 특히해서 그들에게는 민족적 차이나 이념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공통성을 서로 갖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키징저"나 "슈토프" 혹은 "브란트"나 "원자"사이에 개인적인 이해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하자, 그러나 어쩌면 결합의 행운은 있을 수 있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좌우간 상호무지와 선입관과 불신이 하늘 높이 쌓여 시야를 막



는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접촉은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는 더 낮은 차원에서의 경험이 가르쳐 주고 있다. 여태까지 동독에서는 소수의 관리집단만이 서독대표들과 정식으로 접촉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외국에 오래동안 주재한 사람들이거나 통상관계로 공산국가군과 항상 접촉을 해오든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공평무사하고 개치가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데다가 자의식도 강하고 다각도에서 사물을 볼줄도 알고하여 자연히 자타의 이익을 이해하는데도 손색이 없다.

만일 서독에서 지난 20년 동안에 동방측의 이념보다도 오히려 그들의 심리학에 더 관심을 두었더라면 지금은 일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되었을 것이다. 서독이 동독에게 그들이 기대했던 동등권을 인정해주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감사나 우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만 결국부풀게 해 줄뿐이고 교만만 커질 뿐인 것이다.

그렇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열등감은 사라지게 되고 발작도 중지될것이니 이것이야 말로 "키칭거"의 말따나 연방정부가 도달하려는 단계인것이다. 법적제한을 제거하면 동시에 심리적 압박감도 제거 되는 법이다.

정상적관계를 점차적으로 회복함으로써 가중한 예절을 지키게 되고 신중성있는 행동이 표현될것이 분명한 것이다.

이익의 내림은 존속할 것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주저와

편협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게 하는 상태는 극복될 것이다.

옛부터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말과같이 자유로운 교육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의 부여에서 부터 오는 것이다.

동독정부의 건전한 자조심은 연방공화국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 II 주 민

### 난립된 서방측견해

승인과 단독대표권의 포기, 마지막 결정권은 이 문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민들의 손에 있다.

물론 동독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동독국민의 의견과 감정을 확인할 방법은 오직 그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경험과 인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아무튼 그 결과는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동독에 자주가서 면접함으로써 우연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가려낸다는 것과 제3자의 보도와의 비교대조를 통하여 알아 보는 것의 두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여러가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불론이다. 이때에 생기는 착오는 대개가 제부적인 면과 역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착오이다.

과거의 많은 보고내용이 너무 단순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보고는 부정적인 것은 과대평가되고, 부정적인 것은 간과되었다. 특히 ... 단지는 유성너비의 여행으로 그것도 ... 아마 공식적인 안내를 받아 가면 ... 선 행동할 수 있었든 ... 여행자에게서 그러했다. ... 사실 어떠한 사람 ... 이 어떠한 생각밖에 갖고 동독으로 ... 가느냐에 따라서 그 견해에 ... 은 영향을 미친다 ... 번함없는 ... 6월 17일의 분위기속에서 아직도 ... 줍주리며 압박을 당하는 국민들 마음속에 그리면서 동독을 방문한 ... 사람은 오히려 좋은 뜻에 의외의 서러움을 느끼고, 상당히 좋은 인 ... 상을 갖고 되돌아 올 것이다. ... 조금 정도의 외관상의 결점은 있을 ... 지라도 국민들은 대체로 만족한 상태에 있어 있을 것이라라고 생 ... 각하고 동독에 관한 사람은 기대에 어긋난 불결함에 찾아 돌아와서, ... 부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 흔히 의식되어 있지 ... 않지만 설정된 척도가 중요한 것이다. ... 1967년의 동독과 1962 ... 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사람은 많은 호전이 있었음을 알고 좋 ... 하게 평가할 것이다. ... 그와 같은 것은 대부분 동구외의 나라들과 비 ... 교해 볼 때 ... 적어도 물질적인 ... 정에 있어서 그렇하다. ... 그와 반 ... 대로 ... 구의 ... 생활수준과 ... 개인적인 ... 자유와 ... 비교하는 사람은 전체적 ... 으로 보아서 ... 딱딱하고 활기가 없으며 ... 침울한 분위기에 우울함을 ... 느끼게 될 것이다. ... 많은 ... 상반된 견해는 관찰자에 따라 다른 전 ... 계에서 ... 구형제 ... 표명된다. ... 구련나 장기간에 걸친 ... 자기사실 ... 경험 ... 으로부터 작성되는 동독에 관한 모든 보고는 사상적 기초와 여론 ... 형성에 대하여 광범위한 의견일치를 보여 주고 있다.

옛날에 동독의 국경을 한번 통과했다든지, 잠깐 다녀왔다든지 ... 하는 ... 사람들의 ... 말과 ... 겪었해야 ... 된난민들과 ... 주고 받은 것에서 얻은

지식들이 그 대부분인 것이다. 편견이란 어디서나 마찬가지로 실제상황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짐으로써 존재하는 법이다. 농독내에서의 변화된 상태는 1966년 이래 서독의 정치에도 영향을 끼쳤다. 옛날 논란의 주요대상은 주로 승인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식적 접촉, 더욱의 문화교류와 친선경기시합 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소위 저쪽 "정권"을 어느정도 상대한다는 것은 저쪽 독일인들로서는 배반으로 느껴질 것이다. 50년대말에 있었던 "에른스트 램머"의 "분호개방정치" 이래 이러한 논란의 해당범위는 아마도 실제적 근거에서 좁아졌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승인문제논의에 있어서도 그런 말은 찾기 힘들게 되었다. 그대신 동독에서 "국가감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는 근심섞인 말들이 전에 비하여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저편에 있는 동포들을 후견할 의사는 갖고 있지 않다는 「키진거」의 되풀이되는 성명은 이러한 근심에 대한 표현인 것이다. 동독인의 양해를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하는 의문이 "본" 정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특기할만한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불승인 정책과 단독 대표권 요구는 농독주민이 자체의 정부나 사회질서를 병혹히 거절하고 서독단이 독일인과 그들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합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관계

농독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동북에서의 "국가감정"이란 어떤 현명한 서독인이 "도대체 연방공화국에 정말로 국가감정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한 것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정의의 논쟁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까닭에 구체적 관찰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

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해서는 과거에 많이 보고되어 왔다. 그것은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서방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다. 동북은 세계의 공업국가운데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전은 주민에게도 큰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는 지금 "과식과동" 속에 있다라고 서방측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1967년에 나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미 높은 생활수준을 즐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역시 시골에서도 두수한 텔레비·안테나가 지붕위에 솟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실정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과는 달리 연금생활자는 상당히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은 사회주의하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그가 얼마나 돈을 가졌느냐에 달려있다. 잘 벌고 있는 상류사회, 무엇보다 예술가·의사·과학자·대기업체의 관리인은 서방측의 그런 사람들과 대차없는 생활양식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또는 사람이 그들의 가동차를 갖고 있으며 많은 차림이 스키 휴가를 즐기며 여름별장을 갖고, 승마도 곳에 따라 유행이 되고, 댁씨즌들도 여기 저기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지식계급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하고, 원하는 것을 읽고, 우리 원하는 자

동차를 갖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벌써 비물질적 소원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서방을 방문하려는 가장 강한 소망이 어떠한 농방여행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지양될 수 없는만큼 농구라 파지역에서 새로운 관광지가 설새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하겠다. 자연농경위, 감상위나 고취위, 탐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행동반경을 확장했다는 기분인 것이다.

서방과의 차단을 괴로와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들이 책코나 향가리류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된 후부터 그들의 불만은 약간 가시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변화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독의 대중은 오늘날 상당히 거리낌없이 그들의 국가나 미지의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때때로 공석상에서도 그런것을 볼 수 있다. 비틀즈나 반비틀즈들이 퇴폐적인 음악이 흘러나오는 트랜지스터들을 들고 거리들, 누비는 광경을 관광객들은 대도시에서 뿐만 아니라 소도시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속사에서 서방측 방송의 청취를 금하였는때도, 대개 이것을 지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당은 이전보다 태평하게 되었는지, 그렇잖으면 적어도 소심하게 된는지, 하여튼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힘은 사라졌다》라고 한 노쿠인이 벌써 수년전엔 말한적이 있다. 사적인 일의 영역에도 참여한다는 사회주의통일당의 간섭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 질량은 이전에 비하여 훨씬 신중하다.

이런경우 사건이 생기는 것은 대부분 지엽적인 곳에서 일어난다. 즉 그때그때의 관리의 열성도나 판단에 따라 다르고, 또 그의

도량과 재치에 따라 사건이 확대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일을 정상적으로 행하여 나가고 출세도 이력저력하여 탐내지  
만 않는다면 누구나 편히 살수 있을 것이다라고. 경제는 동족에서  
도 이념보다도 더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당지도층이 내적

안정성 그늘나름의 기준에서 이 위험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소규모의 개인기업에서는 그런 까닭에 소유권을 박

탈 당한다는 걱정은 감소되었다 할 것이다. 모든 이와 같은 변

화는 대개 4년전부터 알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

년초에 한 부인이 "우리는 침체하고 있다. 변화를 볼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서방측의

여행자들이 같은 해에 전하는 정치상태의 인상은 아마도 본질적으

로 동족의 발전상에 관한 설명일 것이다. 궁핍, 직접적인 정치

적 압력, 여러가지의 불패감은 이미 지나가고, 사람들은 수년래

로 이제 그런 환경에 익숙해져 온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까

닭에 조그마한 불편도 수만가지의 일상적인 번거러움도 이제는 침

지 못하게끔 된 것이다. 이제 만사가 정상화 회복되었지만만큼 완

전정상화에 조금이라도 결결이 생기면 더욱 그것이 확대되어서 인

식되게 되는 것이다. 생활상태의 일반적 향상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까지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요하게 됐다. 불신과 좋지

못한 체험들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발전상을 납득시키는데 방해

를 한 것이었다.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동방 제 국에서 자유화 현상이 표

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도 상당한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다. 발전의 속도는 느리고, 그것도 직선으로 뻗는 것이 아니었으며, 때때로는 후퇴까지 하는 것이었다. 어느정도의 완화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경직시국이 들어서서 이런 교대현상은 옛날과 하등 다름없었다.

사태의 광범위한 변화가 반드시 오리라는 전망을 대부분의 선진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은 현재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첩제의 인상은 특히 문화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다.

서적출판에 있어서는 여전히 당이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책들은 넘칠정도로, 국민대다수가 읽고 싶어 하는 책은 결여되고 있는 불균형상태에 있다. 책코의 한 당원은 동독의 문화정책은 오늘날 책코가 스탈린에 처해 있던 것 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좀 과장된 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편집, 기계적인 지식의 나열, 가장적 이념물의 출판물이 여전히 예술가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저자들은 번역이나 개작에 되돌아 가고 있다. 중앙위원회 전체회합이 있을 뒤 또 다음 회합이 있을 그 사이에 시국의 경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서방적 악역인 유행가에 대한 배척운동은 항상 새로운 문예운동을 불러 일으킨다. 동독의 신문수준은 외관은 고사하고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각급의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이념당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것이 실지생활에 어떤 의의를 갖느냐 하는 것은 다음 두 학생의 불운한 사적이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두 학생은 1957년 인민의회선거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



서 이제 학업을 그만 두어야 했고, 공장에 들어 가서 당의 감시 아래 정치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일할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이제 철저한 공산당원도 과거의 유물로서 판단하고 있고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로서 분제삼고 있는 것이다.

당원들과 전문가들과를 교체시킨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발전의 징조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대로의 어두운 면이 있다. 전문가가 꼭 필요하게 되면 그 전문가를 당원으로 만들어 버린다. 어느 정도의 능력과 근면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당에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다. 당신은 당에 가입할 의사가 없느냐고. 만일 당 지도부에 속하지 않으면 동료들이나 부하들이 그에게 대하는 태도는 안하무인격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다. 간부직이라도 갖고 싶으면 반드시 "동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모순은 이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지금도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당원 사람들로서는 근심할 하게 되고,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로부터 당에 대한 충성심을 억지로라도 강요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사회적 환경과 동일화 시키려는 과정을 그대로 달고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나는 5년동안 정기적으로 동독을 방문하고 왔지만 한번도 동방측의 사회주의적 단점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회주의통일당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그러했다. 모두 말하기를 학생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고, 수공업조합에서는 옛날처럼

법 고침의 획득이란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노동자의 해고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등등 어떤 분별있어 보이는 사람이 자기나라를 평하면서 "우리의 커다란 유치원"이라 했다. 이 말에 비웃는 기분은 없고 훨씬 호의적인 말투였다. 그가 뜻한 것은 국가란 항구적인 학교이고, 언제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1958년 "분첸"의 "인푸라테스트" 연구소에서 피난민노동자들에게 동독의 사회주의적업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적이 있었다.

이 조사결과는 서방측으로서는 실로 놀라운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조사대상자들은 업적을 "노동자·농민의 국가"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선전의 업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방측을 반대하고 서방측으로 온 이 노동자들로서는 동독의 사회주의적 업적이란 사회적 시설과 병가시의 금로지불, 공장내의 위생 시설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서독정부는 동독의 "날조한 업적"이라는 말을 삼가는 것이 현명하겠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1962년 나는 "라이프치히"에서 온 한 젊은 전문분야종사자의 이야기 해 본적이 있다. 그는 서방측의 생산품이 질적으로 우수한 것은 경쟁원리에 그 원인이 있다고 시인하였으나 서독의 경제체도에 대해서는 그 불안정성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에 그가 말한 불안정성이란 실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동독의 경제적 난관은 원료부족에서만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서방측에는 풍족한 원료가 그곳에서는 없어서, 그 대응을 찾기 위해 많은 경비들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서독으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는 동독의 경제

와 정치를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그는 말을 덧붙였다. 내가 그에게 그것은 동독의 국민으로서 원하는 것인지 혹은 독일인으로서 원하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그는 즉각적으로 독일인으로서 원할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그들이 겪는 고생을 이야기 하고서 그래도 동독을 10년 혹은 15년내에는 서독과 어깨를 겨룰만큼 되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사회주의통일당의 선전영향을 어느정도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또 여러가지 비판적인 언사에도 알 수 있드시 반드시 당에 맹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견해는 연료하고 교육받은 전문가들의 견해하고는 차이가 나지만 그것도 정도문제일 뿐이다. 요점은 모두 같고 '동독에는 공산주의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우리'는 정부의 교조로부터 독립해서 일하고 활동하는 '사크지방인' · '튀링거인' · '브란덴불거인' · '데크렐불거인' 들을 뜻한다.

이때에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당과의 내적거리감은 동독의 헌정권 통치기간중 출생하고 성장해 온 사람들 사이에는 전연 볼 수 없는 것이다. 1964년 '로오슈톡' 외항에서 일하는 어느 기술감독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당시 33세이었는데 일찌기 아버지를 여의고 수공업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노동학부에서 공부를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여기서 학위까지 받았다. 4년 뒤에 그는 동독정부사업계획중 가장 대규모적이라 할 수 있는 '로오슈톡' 항구의 기술감독이 되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말하였지만 확실히 이 사람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당원이 아니었다라면 그의 이와 같은 경력은 가망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경력과 당원이라는 사실의 상호관계를 여기서 말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적인 유능성을 설명하자는 것이다. 그의 말하는 태도로서 벌써 그가 객관적으로 사료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유형은 역시 '루우루'에 있는 대규모 탄광의 청년지도층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사실 '루우르'에 와서도 지도적 위치에 서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그가 동독에서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다른 곳에서도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주 냉정한 표정으로 확언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확신은 그의 생활체험에서 얻는 결론이 분명한 것이다. 이전에 있어서 어느 특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1962년까지 동독대학의 과반수 이상의 학생이 노동자나 농민의 자녀라는 사실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이와 같은 내정을 그렇게 정확하게 받아 들여서는

안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모든 학생이 공부를 끝내는 것도 아닐 것이다. 엘리트와 오멜라 사이를 자본주의가 지배했다면 동독의 상당수의 의사·판사·교사·기사들은 오늘에 있어서의 그들의 처지와는 전혀 다를 것이 확실하다. 출세를 한 사람들도 자기들이 잘나서 출세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덕분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연방공화국에 비교하면 확실히 자기들의 출세를 자기 자신 이외의 요소에도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화가 만들어 내는 것은 반대라기 보다는 체념인 것이다. 청년들이 사기를 잃은 것은 원리에 대한 회의라기 보다는 실현 방법에 대한 분노이다. 20년 이래 구세대는 사회주의통일당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사정하에서 그들의 삶을 영는데 익숙해졌다. 젊은 세대는 아무튼 어떤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동화되어 갈수록 더욱 더 강하게 연방공화국과의 소외감이 증가하는 것이다. 벌써 언어가 이러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동·서독인이 서로 만나면 서로 "우리가 있는 나라", "너희들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 양자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말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있는 나라"라는 그 말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상황과 어느정도의 동일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있는

나라' 라는 말에서 거리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 서독에 대한 태도

'나도 한번 저쪽으로 넘어가 보고 싶어요' 라고 나와 '마그네 불그' 와 '로슈투사' 에게 이 지점에서 반시간동안 차를 함께 탔던 한 젊은 여자노동자가 말하였다. 독일연방공화국을 뜻한 이 '저쪽' 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그 여자는 단지 매우 부분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었다. 그녀는 친척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던 서독의 옷감이 동독에서 보다 값이 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화가 지난 국민의회선거에 이르자, 저쪽에서도 역시 선거를 하느냐고 물었다. 동서간의 정치적 차이를 그녀는 고정된 사고로서 판단하고 있었다. 소련인은 전쟁을 이겼으니까 그들이 동독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그는 아주 객관적으로 말했다. 정치에 대해서 얘기 하려면 저녁 맥주집에서 조용히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녀는 계속 말했다. 서방측은 여기보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결과를 무서워 하지 않고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털어 말해서 그녀는 서방측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가능한 경우에 그녀가 연방공화국으로 이주하겠느냐고 묻자 그녀는 단호히 부정했다.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라는 것이고, 약간 먹을것이 있고, 값이 싸다는것 만으로는 충분한 이유가 못된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더 박식하고 더 세분화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나 거의 같은 내용의 말들을 모두 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다보면 이곳에서 머물고 있는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듣게 된다. 시찰하는 도중에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그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이고 그리고 낚시는 "만일 우리가 10년 전에 서쪽에 갔다면, 오늘 우리는 보다더 좋은 상태에 있을 터인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때에 흔히 자책 비슷한 말투도 섞여 나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사정하에서 그들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혈연의 결합이나, 직업상의 가능성, 결단성의 결핍으로서 서쪽으로 떠나지 못했던 옛날일에 대해서도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어떤 사람은 서방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수년동안의 괴로운 심정이 장벽이 생긴후 부터는 마음이 오히려 가라앉게 되었다고 고백까지 하고 있다. 때때로 기회를 놓쳤다는 감정을 반정치적 확신으로 합리화 하고 있었다.

서백림에 자기의 물건을 조금 두고 있는 사람이 8월 13일부터 현장수사를 받고서 2, 3년이 지난 후에 만일 그가 언젠가 동독 대표로서 연방공화국에 온다면 그는 거기서 동독을 의식적으로 대변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장차 동독에서 생활하기로 한 결심이 마지막으로 서게 되었다는 경향이 일반 사람들에게 많이 볼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결론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 들이다.

물론 상황이 바뀌어 연방공화국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변동시킬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확실한 해답은 할 수 없다. 물론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사회주의통일당이 이 점에서 (자신만 있었다면) 서방을 향한 폐쇄에 있어서 그렇게 가혹하지를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변함없는 장벽에 대한 재담이 성행하고 있는데 재미의 요점이 바로 장벽에 있는 구멍이다.

이 구멍을 향하여 밀어닥치는 군중의 열은 끝이 없으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줄은 백림에서 코트버스까지 이르고, 울브리히트만 할 밖에 서 있을 것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4, 5년전에 처음으로 들은 말로서 근래에는 모든 국민들도 자주 듣고 있는 아주 계몽적인 말이 있다. "내가 올 수 있으면 또 오겠다. 아마 다른 사람들도 대개 올 것이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되돌아 온다는 이와같은 작오는 하지만 역시 후에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할 조건하에서만 그 말도 실효가 있는 것이다.

이 두개의 발언을 일반화 할 수 있는 한 다음과 같이 그들의 현재의 태도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서방으로 여행 하려는 소망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전히 강하다. (그 대신 여행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이유에 대한)이해도 깊어졌다.

물론 어떤 사람도 믿지않는 선전적인 구실에 대한 이유가 아니고, 그들로서 소중한 전문가들이 다수히 탈주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는 정부의 딱한 입장에 대한 아해인 것이다.

"나는 물론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은 그 장벽을 찬성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립하게 된 이유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동독민중의 정치관은 어느 정도의 생활향상이나 연방공화국에 대한 차단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태를 고려해 보면 대체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10년전부터 재통일을 부르짖으면서 장벽이 생기자 그런 의무를 잊게된것, 6.17사건, 향자리 봉기의 좌절, 8.13사건을 일으키게 하고 스스로 괴롭지만 않으면 결국 그것으로 다행하다고 생각하는것, 그후 냉전도 화해도 적극적인 면이 없다는것,

때때로 "주도권"을 참는다 해놓고 기껏 말만 바꾸는 그러한 서방정치에 대한 깊은 환멸이 그들의 정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의 합리적인 면이 미치는 영향을 부인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독인의 정치적 자각에서 늦어도 60년대 중엽이래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변화는 아마도 정치에서 탈피하는 경향일 것이다. 장벽이 구축된때 부터 2년내지 3년간에는 잠시라도 정치에서 벗어난 무악무해한 일상적인 현실과 거리가 먼 일에 대해에 말 한다는 것은 저쪽에서는 친밀한 사람가운데서도 거의 불가능했다. 오늘날은 벌써 정치에 대화를 가져 가든지 혹은 화제를 정치에 관해 한정시킬려면 애를 써야 한다. 전에는 서독 방문객은 서독정치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오늘날은 서독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가 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대개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경우만 라디오를 듣는다, 가령 연방의회선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소위 사건들

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일 서독 TV에서 어떤 범죄영화가 상영되면 저녁에 한 약속이나 집회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많은 사람이 전혀 오지 않든지 혹은 후에 오든지 일찍 가든지 한다. 서독생활의 화려한 면, 생각도 못하는 편리성, 무한한 부는 여전히 일종의 강한 매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정치적 설득력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다. 동독당국이나 서독정부가 무슨 말을 하든 동독의 국민들은 그렇게 관심을 쏟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양편에서 가지는 견해차이가 수정의 방향으로 나가는 조금만큼의 정조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미 20년의 실패의 경험이 그 사람들을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여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을 불러 일으키기란 어려운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는 한 동독민도 서독민처럼 그 개인의 영역에만 관심을 가질 뿐인 것이다. 그러나 환멸과 체념속에 있는 경계선 내부에서도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빈약한 것이다. 강경한 태도로서 임할것을 독촉하고 동독의 모든 타협을 위협한 후퇴라고 저주하는 소리가 여전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노년층이다. 그수는 현저하게 감소 되었고 계속해서 감소될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총체적으로 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수로 떨어지고 말았다. 지난 5년동안 여론 변화는 다음의 예에서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동독을 신용대부로서 경제적으로 조력하려는 서독정부의 계획에 대한 노한 항의, 연방공화국이 도대체 신용대부나 혹은 교통차단 중에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빛날같은 질문, 동독의 미래에 대한 본질적인 결정이 연방내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통일당의 중앙위원회에 있다는 개념적 통찰 등이 그것이다. 만일 양정부가 공동로선만 취한다면, 전체 독일이 같길은 트인다는 생각은 동독으로서는 이미 낡은 것이다. 때때로 그러한 생각이 “제3의 길”이란 반관념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람들은 쌍방의 장점을 갖고 싶어 한다. 즉, 동독의 사회적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서독의 자유와 복지와 함께 일종의 합금된 이상으로 용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그러한 생각이 극단적이라 한다면, 타협만이 일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통일당을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은 '슈토프'를 대표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사람도 '슈토프'와 '키징거'간의 회담을 환영할 것이다. 법적인 제한과 차이에 대한 이해는 서독인보다 동독인이 더 모자랄 것이다. 동독은 그곳의 주민들에게는 항상 경험하는 괴할 수 없는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다. 서독이 이와 같은 현실을 역시 정식으로 이해하고 모든 동독인이 매일 그렇게 해야 하듯이 동독을 상대로 하는것을 서독이 하지 않는때 배해서 동독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보다 더 절대적으로 주권(절대권)에 대해 생각한다.

역사에 능한 한 부인이 1967년 여름에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역사가 지나감에 따라 알기 못할 이유에서 언제나 다시 국가

들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국가란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을 쏟을 것이 못된다”  
사람들은 동독에서 단독대표권과 불승인문제에 수반되는 유보들에 관한  
그 근원을 개인적인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1964년 여름에  
로슈투크 외항의 그 기술감독은 나에게 서구로 가는 동독인의 서구  
여행을 취급하는 서백림에 있는 연합국사무소인 “여행국”에서 그  
가 했던 체험을 이야기 했다. 자기가 특수시설을 사기위해서 프  
랑크푸르트에 갈려고 했다. 그는 결국 그의 여권을 입수했지만 그  
때까지는 그는 불쾌하고 온종일 여행국에서 굶주리고 기다려야 했  
으며 그 절차수속에 있어서 차별이 심한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기술감독에게 서독항구와 로슈투크간의 선편상태를 질문하였을때  
몇가지 기술적 접촉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때 비  
난쉬인 말로 덧붙여 말하기를, 프라테씨는 (함부르크 항구사무소장)  
최근에 동해안연변을 친선방문하였는데, 로슈투크도 동해안안에 있  
는데도, 잇었는지 오지몰 았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불평은 분명히 동독의 선전로선에도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의 정직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  
면 어느때 한번 자기가 그일을 당하면 그때는 정치나 선전이 문  
제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즉, 멸시되고 있는 것이 동독이 아니라 그의 자신인  
까닭이다. 그러한 경험은 역시 친구들이나 동료에게 그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 여행국이 사실 어떠하다고 하는 것은, 불란서로  
여행을 갔다온 그 기술장이 겪은 경험으로 나중에는, “로슈투크”

관리층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승인이 내포하는 뜻이 '프라테'가 '로슈토쿠'를 기항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릴때 국단적으로 표명된 것이다. 다른 한 예는 더 심한것 같다. 1962년 '쾌론'에서 국제 기문학회의가 개최되었다. 장벽을 구축한지 1년후, 해외여행허락을 받은 4사람의 동독 교수중에서 한사람이 그의 대학생활에서의 출세는 지나치게 심한 당의 충성에 기입한다는 고발을 당했다. '쾌론'경찰은, 그가 12시까지 그 도시를 떠나도록 요구했다. 그러자 다른 두세사람은 그들이 이런 경우에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모두 남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같이 떠나가겠다고 통고하였다. 당원아닌 구들중의 한사람이 나에게 이와같은 얘기를 해 주었다. 그가 취한 이러한 냉정한 행동현실은 그안에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이 숨어있는 것이고, 그러한 억울함은 그것이 있는 2년뒤까지 잊지 못했다고 한다. 그가 대화가 끝날무렵 갑자기 화체를 바꿔서 나더러 한번 동독에서 어떤 교수의 휴가생활에 대한 르포르타즈를 써보라고 권유했을때 그와 같은 사실은 아주 분명해졌다. 그는 그 교수의 휴가 생활의 주변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수에게는 여름 별장이 있는때 집안에는 T·V수상기와 병창고와 전기난방장치가 되어 있다. 집 가차이 그의 자동차가 서 있고 빙 둘러있는 집들은 여러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즉 금 세공사, 푸주간 주인, 신장, 두사람의 노동자 등이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4년에 걸쳐 스스로 지은 것이다.

그의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자 보시오, 우리도 무

엇인가를 이루고 산다 말어요, 우리도 잘해 나가고 있다 말이에요, 어느 한 계급만 아니지요, 우리를 동정하거나 비웃는 대신 좀 알아 달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기문학회와의 같은 사건이 오늘날 그 이상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동독 과학자들이 그 서독회의에서 취급받았던 유형과 분위기에 대한 원망 소리가 물론 아직도 잠잠한 것은 아니다. 1967년에도 한 대학교수가 지극히 환료주의적 대우와 무관심속에서 고통을 겪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마치 고백을 하드시, 그는 털어 놓았다. 나는 나를 독일인으로 생각하지, 동독인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연방공화국에서도 "홀랜드나" "노르웨이"에서 온 동료들처럼 존경되길 바란다. 내가 있는 곳에서 "발타 울브리히트"가 공격을 당하면, 비록 나와 그가 어떠한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내가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비난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동독안에서의 내 개인문제인 것이다. 얼마후 그는 다음과 같이 말을 덧붙혔다. 아마 우리가 너무 감정이 날카로워 졌든가 봅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그렇게 된것은 지난 오랫동안의 불화에서 오는 작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 동독이 서독에 대한 감정은 자존심의 상해라고 말하고 싶어요"

동독의 모든 주민이 그정도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욕당한 자만 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의심없이 서독의 소외감과 동독의

단결심의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지나치게 예민한 감정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동독의 교수들이 서독에서는 보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수 칭호없이 다만 씨라는 말만 이름에 붙였다고 해서 교수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 하나의 예일 것이다.

서독 방송국에서 어떤 특별시설을 갖춘 요양원에 관하여 해설을 할적에 스웨덴에서 영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의 시설은 다 비교하며 말하면서, 이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설을 갖춘 동독에 관한 말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 어느 의사가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

이 사람 역시 사회주의통일당의 열성분자일 것이고, 그의 정치적 동기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써 인정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동독내의 여러가지 시설도 무시하는 이유라고 믿는 모양이다. 그 결과 그가 하는일도 불승인정책의 희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감정을 위해 연방공화국은 수많은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운동경기문제는 그것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는코로 여기에 관련된 사건이 가장 심한 것이다. 신문을 읽는 모든 지식이나 모든 라디오의 운동경기, 방송,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식적(官)의 칭호는 "단독 대표권"의 우스꽝스러운 형식을 증명하고 있다. 즉 독일인은 언제나 서독인이고, 그밖의 다른 사람은 동독인이다. 사실 서독 선수만이 연방공화국에서는 독일 선수로 간주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 2

독일 텔레비 방송국의 청탁으로 실시한 "알렌스 박하" 조사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당신들은 동독출신의 탁월하고 유명한 운동 선수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73%가 모른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서술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내가 동독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서독이 그 표시나 계양에 있어서 일정하지 않는 태도는 어떤 때는 한 지방에서는 허용했다가 다른 지방에서는 금지하는 식이므로 항상 문제가 되는 동독의 문장, 국가, 국기에 관한 문제는 노련한 정치인에게는 마치 모래 상자에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한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 희생되는 자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

즉 이미 계획한 서방제국에의 원정중지, 동독선수의 현지 도착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한 경기를 중단하는 것, 이렇게 되면 동독선수들은 명예 획득의 기회도 잃게 되고 출세도 못하게 된다. 체육기자의 동반거절, 운동시합대신에 정치시합이 일어나게 되고, 육박전이 생기고 피해는 양측이 다입게 된다는 것 등이다.

1967년 봄 "뉴데리"에서 서독 대사가 동독 국기계양을 항의 했던 일은, 비록 서독정부가 지난해에는 많은 자제심을 발휘하였지만 결코 지나가버린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투쟁의 역사를 추구해 보는 사람은 연방 정부가 점차로 이 점에서 양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뒤고 싸우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국기표시문제를 고집하면 국제경기무대에 서독선수단이 참가할 기회가 상실될 것을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다. 모든 곳에서 그러 하듯이 동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경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동기는 눈에 띄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서독의 스포츠정책과 마찬가지로 독일분단의 현실을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뿐이다.

아무튼 20년 이래 여하한 동독인도 보지 못하고 있는 서독의 많은, 정책결정자들은 몇일 저녁만이라도 "점령지역 주민"의 동백림, "라이프짜히", "드레스덴", 혹은 "쉬베른"에 가서 분단된 국가의 일상 경험에서 전 독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배워 볼 것을 간절히 권하고 싶다. 아마 그렇게 되면 "단독 대표권"이나 "소련 점령 지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무심하게도 말할수 있는 용기가 좀 수구러질줄 모른다. 동독사람들은 아무도 단독 대표권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점령지역이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면 당치 않는 일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사람들은 물론이요 이상 소련 점령지역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그것이 더 중요하지만 이 이상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도 이와 같은 말이 서독 라디오나 TV의 거의 모든 뉴스 방송에서 울려 나온다. 오늘날도 "동부지역"이란 말이 서독 언어사용에서 동독에 대해 대부분 사용되는 칭호이다. 오늘날 수상 자신도 때때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공동 모욕이 될" "지역"이란 말을 삼가하지 않고 있다.

소외로부터 적대심까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은 서독인의 동독인에 대한 견해 조사에서 이미 표명되어 있다. 만일 연방 주민에게 동독 정부의 부정적인 모습이 동독 주민에게 대한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면, 반대 방향에서 그와 동일한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여기에 차이는 있다. 사회주의통일당 정부에 대한 일반 서독인의 감정은 극단적인 형식으로 해서 두려움과 증오의 개념에 귀착되며 동독인은 서독에 대해 배반 당했다고 느끼는 자의 분노에 이를 정도로 원한을 느끼고 있다. 아마도 서독인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반발은 더 강하고, 일치되고 비타협적이다. 그것에 대해 동독인은 여러가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편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들의 관계는 흔히 인간의 관계에서도 반영된다. 연방정부가 동독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것 처럼(적어도 1966년 가을까지는 그러했다) 서독국민들도 동독에 대한 기본지식이 대부분 결여되고 있었다.

제2 독일 텔레비방송국의 '한스 벨나 슈탈프'가 '알렌스 박하' 조사에 위탁한 여론조사는 대단히 계몽적이다. "저쪽에서는 아직도 생활용품의 배급제도로써 실시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인터뷰한 자의 거의 과반수가 대답하지 않았으며, 3분의1이 틀린 대답이었고, 나머지 3분의1이 옳은 대답을 하고 있다. "저쪽에서 서방측 방송의 청취가 금지되었는가 혹은 허락되어 있는가"라는 물음에 16%에 해당하는 사람이 옳게 대답했고, 60%는 금지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서독에서도 서방영화가 상영되는가"라는 물음에 39%가 그렇다고 하고,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정치적 사정에 대한 정보는 이와 비슷했지만 부분적으로는 더 나쁘기도 했다. 시민당과 사회주의통일당, 그리고 후에 '카징거'와 '슈'

토프가 공개적으로 서신왕래하기 전인 1966년 1월 질문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칼 맑스가 과거 '캠니쯔'라고 말할 수 있었고 6%만이 빌 슈토프가 누구라는 것을 알 뿐이었다. 3분의 2는 동독내 각수반에 대한 물음에 전혀 대답하지 못했다. 과반수 이상이 동독에 단 하나의 유일한 정당이 있다고 말했다. 저쪽의 성인의 몇%가 사회주의 통일당원인가 하는 물음에 질문을 받은 39%가 동독인의 과반수 혹은 그 이상이 당에 속했다고 믿고 있었다. 장벽을 구축한 5년 후인 1961년 8월 1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 보았다. 44%가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모호하든지 (1%) 혹은 틀린 (2%) 진술을 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특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거의 과반수)의 높은 비율은 주목할만 하다. 또 한편 많은 부정확한 의견이 아주 부정확한 것은 결코 아니다. 동독에 많은 당이 있지만 온전한 말 뜻으로 보면 결정적인 정당역할을 하는 것은 단 하나 뿐인 것이다.

서독방송의 청취는 금지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겨 날수도 있는 것이다. 가령 서방측 방송내용을 남에게 이야기 한다든지 함께 방송을 듣기 위해 초대하든지 하면 몇년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체포당했을 것이다. 조잡하고 부정확한 지식이 동독인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완전한 무지에 못지 않게 차단하고 있다. 서독인의 동독인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는 결과란 심히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무례와 결합되어 있다면 특히 그러하다. "라이프치히에서

온 한 노부인이 신문에서 커피를 사려고 했다. 그녀는 얼마 되지 않은 서독 '마르크'를 셈하면서 자기가 온 곳을 말해주고, 커피 값을 물라 물었다! "값싼 것으로 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하는 것이 여점원의 대답이다. 한 로스독카출신의 의사가 같은 주간에 서독인을 만났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담배를 권하면서 "어디 한번 좋은 것을 한번 피우시렵니까"라는 말을 하였다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저쪽에서는 "굶주리는 지역"에 배를 채워주기 위해 보내지는 메귀리나 설탕 꾸러미에 대한 보고와 같이 자주 끊이없이 듣고 있다. 이와같은 경우들이 전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이 아마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것으로 느끼게 된다. 무지와 무관심, 이해심 부족, 더해가는 자기도취 등은 동독인의 눈에 비치는 서독인들의 특징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자신있게 해소시킬 수만 있다면 서독에서 보기도문 우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인에 대한 비난도 결국은 접촉을 원하는 마음의 모순된 표현인 것이다.

이와같은 소망은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이 감퇴되어 간 것 같다. 그 대신에 많은 자신이 국민간에 쌓인 것 같고, 그것이 그들의 거만해진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라이프치히" 출신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발트블그' 자동차를 몰고 있다. 고속도로에서 두툼한 서독 자동차가 내 곁을 지나가도 나에게 하등의 감명을 주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 차를 위해서 그것들 보다 더 많은 돈과 노력을 소비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적모임에 흥분된 논쟁이 극도에 달하자 한 친구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이제 올만큼 왔다. 너희들이 벌써 20년동안 우리없이 해오듯이 우리도 너희들 없이 해 나갈수 있다." 동독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 서독의 여자가 우울하게 자기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저쪽의 그들은 이미 우리들을 사절하고 있어요" 꼭 같은말인 "너희들은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사절했다"라는 말을 나는 처음으로 1948년 '슈베린'의 한 의사로 부터 들었다. 50년대에서 60년초에 이르기까지, 동독인들이 서독의 동포들로 부터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소외 당했다는 실망을 표현하는 말이 꼭 같이 이런 말이었다. 지난 수년동안에는 이와같은 불평은 드물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그런 불평을 하게 되었다.

상처받은 자존심과 어떻게 하든 승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동독의 정부나 국민이 모두 갖고있는 심정이다. 형식과 정도와 기원(起源)은 제각기 다르더라도 마지막 동기는 마찬가지다. 서독으로서는 "울브리히트", "슈토프" 그리고 "호비카"를 위한 동등권이 아니고, 동독의 동등권이 논의대상인 것이다. 장차에 있어서 서독정부와 정당들이 이 동등권 본제를 영구화시킨다면, 양정권간의 적대행위를 더욱 조장시킬뿐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보아 동서독인의 적대감 정도 역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THE UNIVERSITY OF CHICAGO

PHYSICS DEPARTMENT

PHYSICS 354

LECTURE 10

STATISTICAL MECHANICS

ENTROPY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LECTURER: JOHN H. COLEMAN

DATE: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REVISION: 1954

## 다섯째 이유

동독을 승인하는 이유는 동독을 부인함으로써 야기되는 전략상의 손실을 보상하는 길일 것이다. 서독정부의 대동구정책과 독일정책은 승인함으로써 그 기동력이 배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66년 12월 이후 동독과 협상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정부로서는 서독에서 처음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동독을 승인하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독은 스스로를 폐쇄시키고, 고슴도치처럼 몸을 도사리며, 냉전의 절정기와 하등의 다름없는 자세로서 논전을 벌인다. 그래서 양독간의 관계는 수년 아래 볼 수 없었던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키징거' 수상이 그의 취임초의 정부성명과 1967년 초 취한 조치에서 이미 명백하게 된 일련의 서독정부의 대동구정책을 고려에 넣는다면 해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연방정부는 동구에서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 청력적인 출발을 시도했지만, 동독에 대하여는 애매한 접근태도만을 보여 주었을 것이다. '폴란드'와 '불가리아' 국가간에 개척된 나라들에게만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운위되었을 뿐이고 동독에 대해서는 단지 부분적인 관계부처의 접촉만 언급되고 단독대표권 요구의 강조만을 되풀이하곤 하였다. 연방정부는 동구제국에 대하여 폭력 포기선언의 교환을 제외했고, 이때에 동독은 다만 제3자로서 언급되는 정도였다.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은 동독을 동구진영에서 소외시키려는 옛 계획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안상을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서독정당들은 이러한 협의를 오히려 시인하는 언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루마니아'와의 대사교환 협의시에 '키징저' 수상은 의회에서 이 조치가 사실 어떤 자에게도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또 그는 연방공화국만이 전독일국민을 대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 라는 법적견해를 강조했던 것이다. 시민당 대변인 '마티크' (Mattick) 는 동구제국에 대한 서독정부의 관계개선은 소련정부를 곤경에 빠트리고자 하는 의도가 전연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독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리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자민당 당수 '미시닉' (Mischnick) 는 오히려 단독대표권요구는 동구에서 관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기민당 원내총무 '발젤' (Barzel) 은 독일에서 소련의 외국 통치인 '울브리히트' (Ulbricht) 파에 대항해서 모든 세계 공산주의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 당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말하였다. '발젤' 은 서독정책의 전략적인 의의만을 시인함으로써 동독의 중도적 세력을 약화시키고 실망을 주게 되었다고 사회주의 통일당이 품고 있는 불신을 그대로 말하였다. 즉 '우리들의 합법적, 도덕적 역사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들의 방법은 때에 따라 변경될수도 있고 또 변경해야만 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것이 동독정부에게는 일종의 경고로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다. 연방외상 '슈뢰더' 가 동구라파에 최초의 통상사절단을 파견한 이래 동독정부는 '고립정책' 에 관한 악몽에 괴로워 하고 있었다. 서독의 내동구정책은



서방측과 마찬가지로 후진국원조와 결부되어 있고, 이것은 동독측을 끈경에 빠트리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소련권내에서의 이념적 단결을 해이시키고, 동구제국내의 자주성을 강화하여 동서화 해무드를 조성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만일 연방공화국이 동구에서 외교적으로 뿌리를 박을뿐 아니라,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성공한다면 동독은 자기측 진영내에서 서독이라는 강적과 맞붙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서독정부의 월등한 경제력은 다른 나라를 이끌어 드리는 데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각국은 자기 나라의 권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나갈 것이 분명하며 공산권의 결속력은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이 동독정부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동독의 특이한 입장을 고려해 보면 보다 더 잘 이해될 것이다. '폴랜드'에서 '불가리아'에 이르는 국가들의 집권당들은 그들이 1956년 이후에 점진적으로 얻은 영역을 국내외의 정책에서 이용하고 있다. '루마니아'인은 우선 국제적 활동의 자유를 마련했으며, '헝가리'인, '폴랜드'인과 '체코'인은 약간의 자유화와 내정에서 더 많은 개혁을 단행했고, 많은 나라들 특히 '폴랜드'에서는 발전이 침체되고 후퇴하기까지 했다. 동독도 이러한 추세에 참여는 했지만, 그 규모는 작은 편이었다. 다른 공산국가들도 자유화정책과 소련에 대하여도 국가이익을 대표한다는 신임을 획득함으로써 민중속에 기반을 구축하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분단된 국가의 착고 약하고 가난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사회주의 통일당은 양면으로 부터 길이 막히고 있었다. 동독의 외교정책은

독일통일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하는 것이며 동독국체와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통일당의 집권이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어떠한 구라파 공산당도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만큼 공산주의의 국제성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독일공산당으로서도 민족적인 문제보다 계급적 문제가 더 앞설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자신을 유지하려면 통일보다 사회주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밖에 없다. 허지만 제2독일의 존재는 역시 동독공산주의자들의 국내정치의 활동범위를 좁혀주고 있다. 보다 부유하고 자유로운 연방공화국과 영구적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민중의 소망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공산주의 정부보다도 동독으로서도 더 많은 곤란을 느낄 것이다. 서독의 생활수준과 서방적인 자유와 비교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만의 싹을 뿌리는 원인이 될 것이다. 사회적 요구가 세빨리 국가적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6월 17일의 교훈에서 알 수 있다. 그러한 사건들의 반복은 또 있을것 같지 않지만 1953년의 경험이 일종의 열등의식으로 굳어져 있다고 하면, 동독 정부로서 가장 명심해야 할 일은 내정의 안정이라는 것일 것이다. 자유화에 있어서도 동독에서는 다른 동구 국가 보다도 그 범위를 더 좁게 잡아야 하는 것이다. 또 민주화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독일연방공화국에 대한 자기주장은 이로서 동독의 정치적 근본원칙을 형성한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자기들의 힘의 집중적인 배양에 절호한 기회가 될 수 있을 시기를 택해서만 서독과 협의하려고들

한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언제나 광범위한 대결을 피하여 왔고, 만일 서방측이 체제에 대한 경쟁을 진지하게 시작하면, 분호의 폐쇄로서 방위수단으로 삼고 왔다. 베르린 장벽은 여전히 사회주의통일당의 선전의 공격적이지만 그들의 정책은 수비적이란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1963년 이래 독일민주공화국은 내적으로 상당히 안정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을 정도다. 이것은 사회주의통일당과의 서신에서 곧 나타난 것이지만, 사민당원들이 인민전선 정치에서 실패하였다는 것이 사회주의통일당이 연사교환을 거절한 이유 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독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독정부에 대한 비방이 동독의 내외정책의 존재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단지 동독이 서독의 부흥주의자들과 제국주의자들의 유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맹국들은 동독이라는 '평화애호국'과 굳게 뭉쳐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화려한 서독의 생활수준의 이면에는 전쟁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동안은 동독의 서방측에 대한 왜곡정책은 합리화될 수 있다.

대연립정부의 정책목표가 화해와 조정과 평화로 결정되었을 때 동독당국은 당황하게 되었다. 긴장해소도 동시에 안정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동독을 오히려 약화하려고 위협할 것이다. 이 안정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동독승인을 서독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동독이 '키징저'의 제안에 응했다면 경제적 이익은 차지하고 규율은 해를 특별히 입었을 것이다.

서독정부의 대동독접근계획은 동독을 약화시키는 위협성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 이때에 동독은 —사회당과의 대화에서 이미 많은 경험은 얻었지만— 서독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것이다. 동구유럽 제국에게는 독일인들이 이제 협정중이고나 하는 인상을 줄 것이다. '루마니아' 뿐만 아니라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저항해 보았자 별 수 없이 '폴란드' 까지도 연방공화국과 유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유럽에서 평화 파괴자라는 낙인으로 부터 서독이 벗어나는데 성공하면 할수록 더욱 더 동독은 그들로서는 위협한 유화무드에 휩쓰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지 혹은 자기들 스스로가 평화파괴분자가 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는 궁경(窮境)에 빠지고 말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 정부는 그 동맹국가들 잃을 뿐 아니라 더우기 그 압력 밑에 놓이게 될 위험마저 생기는 것이다. 이 압력은 동맹국가들과 국민들로 부터 받는 압력이 될 것이다. 국제적 승인에 대한 전망은 결국 현저히 감소될 것이 확실하다. 1967년 초부터 동독이 전개하고 있는 정력적인 활동은 그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폴란드'의 도움으로 소련의 원조를 얻는데 성공했으며 양국의 지지로 서독의 동구제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방해공작의 요인이 되는 조건들 즉 핵보유금지 와 '오벨-나이세' 국경과 동독의 승인이라는 조건은 계속해서 서독의 동구 외교정책을 봉쇄했다. 독일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동독의 승인이라는 요구조건으로 경제문제를 비롯한 자기들

의 관심외에 있는 모든 문제해결에 대한 접촉을 폐쇄하고 말았다. 동독 내부에서는 결국 국가재건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독의 국적문제,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헌법은 별 의심없이 훨씬 이전에 성안을 보았겠지만 급히 의결되었다. 그들은 또 국가적 허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당논과 당운동의 핵심으로서 '사회주의조국' 문제를 등장하게 했으며, 사회주의적 의식이 후퇴된다고 생각되면 공동체험과 공동성취만이 인류의 공동사회를 건설하는데 항구적인 요인이 된다고 호소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정의 노력은 서독에 대한 외교에서 승리를 얻고져 하는 동독정부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키징거·브란트' 정부가 동독에 대한 동등권을 거절하므로서 동독에게 그들의 공격적인 유화정책을 피하고 동구로 향하는 서독의 진로에 정치적 장벽을 구축하게 하는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다.

승인요구는 분명히 전략적인 목적으로서 하는 것이고, 또 서독도 이 점에서 그들이 승인을 사실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어디서나 동등권을 가진 독일국가로서 취급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동독정부 수립 이래 줄곧 간직해온 그들의 태도인 것이다. 만일 동독이 이와 같은 노력을 포기한다면 이 정부는 자기를 포기한 것과 같다. 사회주의통일당 정부로서는 서독정부로 부터 승인되는 것보다 국제적으로 승인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리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 생각은 이 점에서 잘 본 것이다. 서독정부를 제쳐놓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방법이 이상적인 길일는지 모른다.

적어도 공산당 정치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서독정부에게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어려움을 견머지기 보다는 차라리 당분간 승인문제를 포기한다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동독으로서는 해로운 것이 서독에게는 이로울 수 있는 문제다. 승인은 서독의 대동구 외교관계 수립에 대한 동독의 방해공작을 약화시킬 것이고 서독측의 외교정상화문제 논의를 거부하게 한 동독측의 논거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물론 어떠한 큰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 동독정부가 독일 연방공화국과 마련할 수 있는 협정에서는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다.

1. 무엇보다 동독에 이익을 줄 협정 (경제와 상업)
2. 동독에 똑 같이 손해와 이익을 줄 협정 (우편, 교통 이와 비슷한 것)
3. 동독정부에 대해 실질적이며 또한 가상적인 위협을 내포한 협정 (신문, 더 자유로운 서적 교환, 동서의 여행 왕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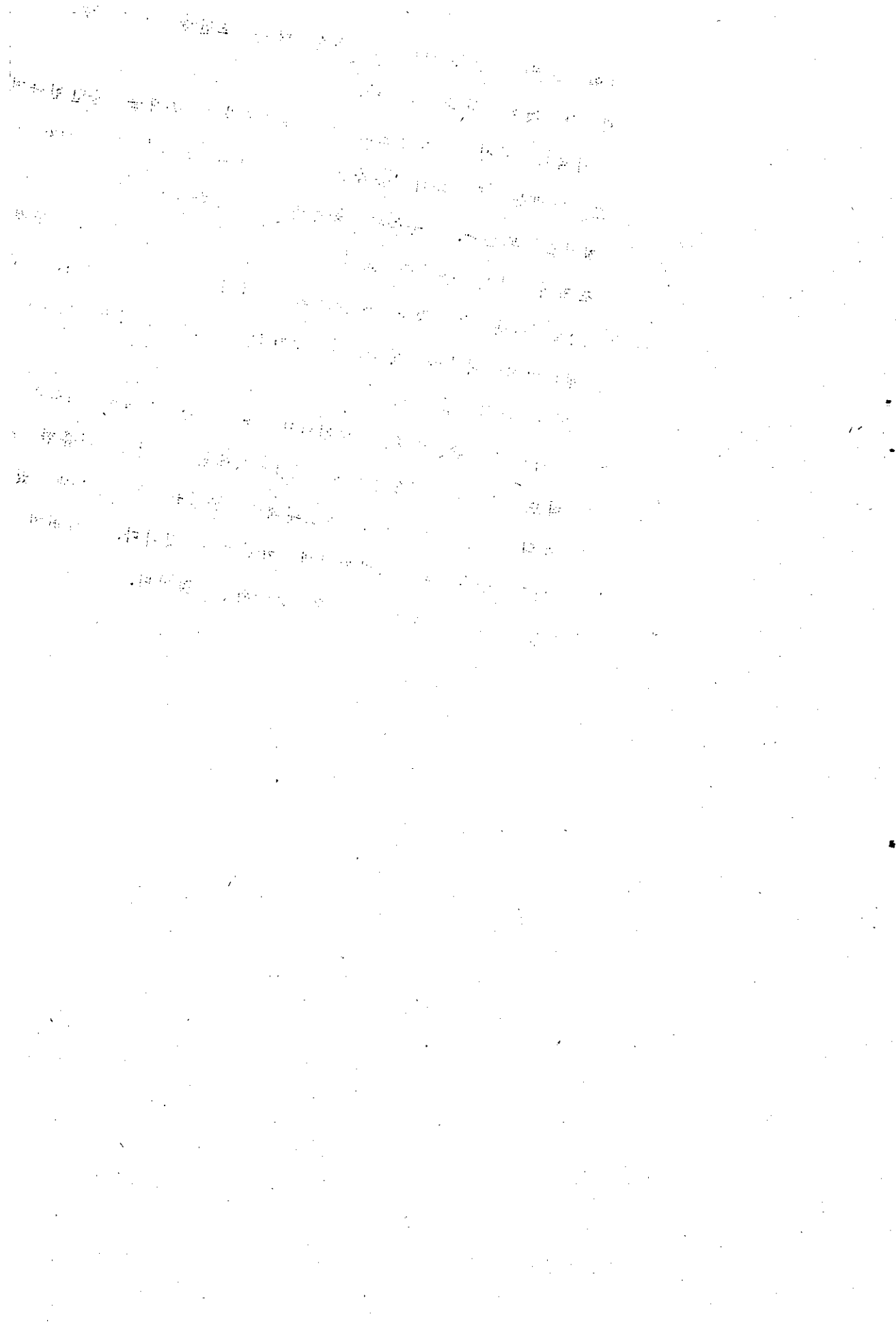
첫째와 둘째에 속하는 협정은 승인문제가 해결되면, 또는 그 간접적인 여파로서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동독정부는 — 적어도 현재의 편제로서 — 자기들의 '위협성'을 표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동독과의 많은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동독정부는 역시 서독의 양보를 보고서 그들도 양보를 하려고 할 것이다. 동독정부는 이제 독일국민당의 불인정과 공산당의 합리화라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추가시키고 있다. 이제 당과 정부는 승인의 조건으로서 마련할 때로 다 마련했기 때문에

만일 그것이 충족되면 또 무슨 다른 조건을 내어 놓으려고 해도 재출판 것이 없을 것이다.

서독이 완전한 형식으로 제 2 독일국가의 존재를 승인한다면 동독도 이제는 '서독이 동독을 합병하려고 든다'고 하는 억지 추장을 그칠지도 모른다. 동독에 동등권을 인정하므로써 서독이 긴장해소와 조정에 대한 용의를 표명한만큼 이에 대하여 무조건 부정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것은 동독으로서 극히 어려운 일이다. 연방정부가 재치있게 대책만 세운다면 동독은 국내외의 압력 밑에 서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서독이 승인문제를 해결하므로써 얻을 전략적 이득과 높은 기동력도 협정의 제 3 유형에 도달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다. 동독의 서방측에 대한 문호폐쇄는 승인을 못 받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동독내의 일반정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를 기하는 방법이 이제 요구되는 것이다.





## 여섯째 이유

승인으로 인하여 독일 민주공화국은 국내적인 발전의 가능성과 연방공화국과의 이해를 마련케 하든지 적어도 촉진시킬 것이다.

### 독일 민주공화국의 공고화

누구든지 동백림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강구하고저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역설적인 사태로 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동독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내부적으로 대단히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약점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란 소련이 동독과 독일통일사회당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에 유래한다. 여러 가지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동백림 지도층은 어떠한 압박을 느끼게 되면 그럴수록 반발심은 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방측과는 단절을 꾀하려고 든다. 이러한 동백림의 열등적 지위가 상호 이해를 하는데 방해물이 되어 비록 그것이 유화정책적인 형식을 취하는 때라도 연방공화국의 우의를 꺾기 위하여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강구한다. 독일통일사회당이 "키징거" 정권을 그 전임자들 보다 더 약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대로 진실된 면이 있다.

사실 1967년 이래 "본" 정부는 실질적이고 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동부백림의 통치자들을 약화시킬려고 하였던 것이다.

동독정부내에서 유화 정책을 수립하도록 만들고 점차적으로 서방측에 대한 돌파구를 가능하게 하는 긴장해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독일통일사

회당의 지배력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그들이 지금까지 불안속에서 수행할 수 없었던 일을 수행하겠음 하고 또는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동독내의 자유화는 동독의 안전화를 필요로 한다. 독일에 있어서의 해빙(解氷)이 위험뿐만이 아니라 이득도 기대할 수 있게 될때 우리는 동백림측으로 부터 보다더 많은 접근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대에 중요한 것은 양쪽이 모두 손실을 예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열세의 위치에 있는자로 하여금 협상동력이 있겠음 만들므로써 협상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므로써 꼭 같은 결과를 인도해 낼 수 있다.

독일국민은 당분간 두개의 국가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독일정책은 되도록이면 양국가간에 밀접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작센인(Sachsen) 쥘링거인(Thuringer) 브란덴부르크인(Brandenburger) 그리고 메크렌부르크인(Mecklenburger)들은 독일민주공화국에서 사는 것이고 그들의 생활권리도 또한 속에서 충당되어져야 한다. 비록 그들은 원치않더라도 독일민주공화국의 시민인 것이다. 그들의 시민증은 동독의 시민증이며 그들 자신도 이 세계속에서 독일민주공화국이 갖는 가치만큼 가치를 갖게되는 것이다. 이 독일민주공화국은 공산주의 정신하에 있게되며 또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이 민주공화국은 그들 시민의 참가없이 복지 및 명예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시민들도 그들이 속하는 나라가 얻는 것이 없을 때 그들도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연방공화국이 그들 동포에 행복을 주려 한다면 그들 동포가 살고있는 그 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이때까지 "본"에서 부분적으로만 실천되어 왔다. "키징거"는 독일사회당과 자유당의 정치가들이 이미 했던 것처럼 동독의 경제적인 발전을 환영하였고 그의 정부계획에 관대한 경제적 협조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본" 정부는 정치적으로 경쟁의식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동독 혹은 그의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저하고 혐오하였으며 비록 반대 급부를 해야 할 경우에도 마음에 없는 듯 실행하였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안전화를 자체목적으로써 긍정한다는 결정적인 단계까지는 "본" 정부로서는 아직 이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조건이 되는 것은 동독국민이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독일민주공화국이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유고슬라비아" 정도는 되어야 동독을 승인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훌륭한 태세와 발전에 대한 보상으로써 승인이란 말인가?

여기서 "본" 정부의 유혹과 동백림의 실적사이에 하나의 기계적인 연관성을 세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동독의 자주적인 발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과할 수도 있는 것을 조건으로만 취급한 전통적인 "본" 정부의 오류에 빠지기 마련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공고화에 서독이 기여하므로써 만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동독으로 하여금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도록 도와 그들의 힘을 실질적이고 위협에 관한 오산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방위력에 정력을 소모하지 않으며 사회주의의 자유스러운 가능성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데 있다. 그리고 그들의 시민에게 만족스러운 생활조건을 이루게 하며 서방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하고 서독에 있어서나 외국에 있어서나 그들 독일인이 열등하다는 감정을 갖지않게 하므로써 연방공화국과의 동등권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자격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 승인의 목적

우리가 독일민주공화국을 승인하므로써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승인을 하지않는다는 원칙은 소련이 동독을 포기하므로써 재통일이 기대할 수 있었던 시기에 세워졌던 것이다. 독일 민주공화국은 소련의 점령지역으로써 머물러 있어야 했고 자유선거를 통하여 연방공화국에 합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50 년대의 중반기 늦어도 후반기이래 독일민주공화국을 국가로써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림을 약화시키고 연방공화국의 우의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버리지 아니했다. 보수적 정치가들은 우리가 승인을 하게되면 연방공화국은 동독에 있어서의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다고 말한다. 라 되오와 T. V 선전을 제외하고서 이러한 가능성

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인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럴것이 이러한 가능성이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10년 사이에 성취할 수 있었던 일이란 인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실천하였다던지 가족들을 만나게 한다던지 체포된자를 석방시켜 주었다던지 하는 일이었는데 이때에 성공을 거두기란 반드시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부와 협상하는 것으로서 만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언제나 단독 대표권요구를 강조함으로써 해를 입어왔다. 이제 서로 "대립적 입장" 이 아니라 서로 "상호적" 인 입장이라는 견해에서 "본" 정부가 계획을 추진하면서 승인을 보류한다는 것은 연방정부의 정책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완전한 평등권을 인정하지 않고 두 국가의 "상호적" 인 입장이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기서 독일민주공화국의 승인에 대한 첫째 목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뒤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정책을 청산 해야 하는 것이다.

승인을 기피한다는 것은 국내외의 정치에서 동부백림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본" 정부에서 원하는 상호협조 라는 것은 강화된 독일민주공화국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이로써 승인은 동독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서독측의 기여행위로 봄이 옳다.

이 조치의 두번째 목적은 조만간에 독일민주공화국이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적기에 준다는 것이다.

해국정책(결국 체념만을 불러일으킨다)의 탈피, 생활수준의 향상, 부분적인 자유의 증가(불만의 축적을 적게한다) 등과 같은 울부러

트정책의 계속이행은 장기적으로 보아 동독국가를 내부적으로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 정부로서는 독일민주공화국이 외부에 대하여는 연방공화국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만족한 상태까지 도달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강화할때 까지 기다릴 것이나, 혹은 그들을 방조할 것이나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본" 정부가 첫째것을 결정한다면 독일민주공화국의 안정화는 저해될 것이고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더욱더 적대적인 위치에 서게되고 그 주민들을 점점 소외 할 것이다. 오늘날 까지 동독의 주민들은 연방공화국의 도움없이 그들의 현지를 구축하였고 혹은 대부분 연방공화국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들의 현지를 구축해 나왔다. 만일 그들이 또 다음 목적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행취하는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그 분할은 완전한 것이 되어 버릴 것이다. 만일 "본" 정부가 두번째의 길을 택한다면 독일의 공동성을 어느정도 구할 수 있고 대립을 협조로서 완화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스스로 신병성을 얻기 위하여 주력한다는 것은 필요하다. 책략과 선진만 보고 "본"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침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결론짓는 것은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공산주의자에 대한 서독정치가의 불신은 동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자들의 신의에 대한 회의는 서독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 못지않는 것이다. 스스로가 위협속에 있다고 믿는자는 상대방도 같은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잘

밀으며 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순환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강자의 입장에 서 있는 서독측에서 먼저 깨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정부와 동백림당국 사이의 상호신뢰는 구라파의 동서양진영 사이의 어느곳 보다도 중요하다. 상이한 양 사회제도의 대표들은 독일대표들 보다는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그 접촉이 용이하고 보다 덜 유보적이고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독일에 있어서 처럼 이념적 차이에 동족적 적대의식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백림(자칭 진정한 독일국가라고 자부함)이 연방공화국에 느끼는 날카로운 경쟁의식은 “본” 정부가 민주공화국(동독)을 국가로서 그 자격을 의심하는데서 온다. 양측의 정부는 모두 자기들의 지역 내에서 전독일의 미래를 상징하는 모델을 형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적대의식은 승인으로서는 불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통일에 대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인은 정식으로 발설될 것이고 양측의 정치가들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오래전 부터 두개의 국가론을 미구에는 서로의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의 원칙으로서 받아드리는 용의가 있다는 데에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독일 통일론은 구라파통합론 처럼 먼 장래에 미루어지고 두 독일은 동서구라파의 다른 국가들 처럼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가능성을 마음껏 품게 되었다. 승인의 결과 하나의 독일이 다른 독일에게로 합병될다든지 그러므로서 하나의 독일이 약체화 될다든지 하는 근심이 적어지면 적어질 수록 국가적 공통성이 양독일의 접근을 이때까지 처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는 갈스는 더

많아질 것이다.

민주통일공화국이 필요로하는 것은 연방공화국으로 부터의 존속보증인 것이다. 만일 동백림에서의 모든 지도층 인사들이 독일인이라기 보다는 공산주의자라 하는것이 더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는 공산주의자로서 위치가 확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일인으로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 구애를 받지않을 것이다. 동독이 국가로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때는 비로소 그들이 원하는 하나의 독일국가로서 점차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1968년 3월이래 "키징거"가 동백림에 대하여 담판하려는 폭력포기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존속보증이 실현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것이다.

폭력포기란 문자 그대로 보아서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단념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단념한다는 것은 아니다.

폭력포기란 사실상 "본" 정부가 독일민주공화국의 존재를 여전히 회의하고 외국에서 동백림정부가 동독을 대표하는 것을 계속 저지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존속보증으로서는 모든 법적유보를 포기하므로써만이 확실해 지는 것이다.

조속한 성공을 희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독일의 사태는 철저한 변경이란 도무지 바라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있다. 승인도 역시 기적을 낳을 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양독관계와 동독인들의 현실을 자동적으로 개선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된 정책의 결과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자



제심을 갖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 이러한 정책일 경우 승인한다는 것은 가장 으뜸가고 결정적인 조치가 된다. 결정적이라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모든 문제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증하는 기대

동방측 사회주의의 변화는 혁명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만이 가능하다. 이는 오늘날에서는 증명을 불필요로 하는 것이다.

인민에 대한 압박은 그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당의 진보적 세력에 의한 개혁은 그것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자의 참가없이 혹은 그들에게 반하여 착수된 일은 당의 각부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였을 경우 잘 해야 간접적인 효력밖에 나지 않는다. 동방측에 있어서는 당의 반대파는 서방측에서의 원외반대파보다도 성취가능성이란 더 희박하다. 가장 근래의 일로서는 1968년초의 포란드의 학생시위와 체코당의 개혁자들이 관철한 괄목할만한 변화가 가장 좋은 증거가 된다.

이러한 경험은 독일민주공화국의 불안정한 사태속에서 더욱 적절하게 통용된다. "본" 정부가 승인이라는 행동을 취하므로서 하필이면 당과 국가안에서의 자기의 지위때문에 서방측과의 회의(和議)를 고려하지 않는자들의 체면을 세우게 하기 때문에 승인을 주저한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렇다고 이해력 있는 단체가 집권할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결론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않고 원인에 있다.

독일사회주의 통일당은 다른 공산당과는 달리 어떤 이유 밑에서 일정한 인물이 집권하게 되고 또 집권할 가망을 갖게되기 때문이다.

동독의 내부적 안정이 표면상 위협받게 되는 동안은 신중론자와 보수주의자들의 안보론의를 진지한 개혁안에 대한 반대(경제문제는 차한에 부재함)라든가 연방공화국에 대한 관계완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반대가 판을치게 된다. 1953년에 그러했다. "싸이사"와 "헤르슈타트"가 탈권당하였을 때가 그러했고 1957년과 1958년에 "실데반"(Schirdewan)이 "울브리히트"(Ulbricht)와의 오랜 싸움끝에 패배하였을 때가 그러했다. 강연초청의 거절이 있었을때도 비슷한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또 "키징거"가 "슈토프"(Stoph)의 첫 편지를 놀랍게도 무시하지 않고 답신을 주었을 때에 동백림에서의 안보파들과 들은 이 통신을 즉시 중단하고저 했던 것이다.

만일 동백림으로 부터의 정보가 정확하다면 1966년의 "본" 정부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주도한자 중에 "울브리히트"가 끼여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민주공화국의 창설자는 그 당시 자기의 나라를 충분히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이 사태는 "우리로서 고려해" 복잡한 일이다. 왕년에 "후르사초프"가 "아베나워"를 서독의 대양방정책의 키를 잡는 "본"에 있어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신임을 하였든 것과 같이 "울브리히트"도 모스크바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안에서 불안을 야기함이 없이 새로운 대양방정책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만큼 누구보다도 실력과 명망을 갖춘 사람이다. 만일 "본" 정부가 이미 5년전에 "울브리히트" 밑에 있는 독일민주공화국의 승인을 결심했다라면은 독일 사태는 좀더 낫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증명은 전연 되지않는 일이지만 그럴수도 있는 일인 것이다.

다음의 동백림 정부의 당과 국가의 원수가 누가 되든 그의 지위는 필신 약화될 것이며 따라서 그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운 것이다. 하여튼 독일 민주공화국의 안보가 제법 보장되지 않는한 — 적어도 승인을 얻을때까지는 — 독일사회주의 통일당 내에 「본」 정부에 대한 자유로선의 찬동자나 개방된 정책은 기회가 그리 없을것이다. 이에 반하여 승인후에는 구름이 형성되든지 더 강하게 육성되든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기대는 첫째 동독의 경제적인 필요성에 그 근거가 있다. 경제적인 성공은 동독으로서는 아마도 다른 어떤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 동백림이 외국에서 기반을 구축한 것이 이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증가일로의 경제적인 잠재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의의깊은 것은 경제적 발전이 내부적 공고화에 기여한 일이다. 국가적 외교정책이 불가능하고 자유화강제 제한되어 있는 곳에는 적어도 물질적 환경만큼은 만족스럽게 만들야 할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1면종의 충성과 협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현재로서는 동독이 동방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생활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장차에도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동독과 그 지도층으로서 철대적으로 필요하다. 동백림 당국으로서는 안부분제 다음에 경제문제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모든 문제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에 뒤따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양독과의 환계에도 중요한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

안보 문제가 보증되면 경제문제가 선두에 나서게 된다. 동독의 경제적 발전에는 여전히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대규모의 신용대부를 해줌으로서 동독경제를 지원해 줄 사람은 누구일까?

과거에는 소련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관심사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동독의 서방측과의 통상은 60년대초 부터 상승되어 왔으나 서독과의 통상량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장차 더 확장될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동독은 서방측에서 얻을 많은 외국환을 동방측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동독과의 통상을 경제적 시점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비경제적" 신용거래도 할 수 있는 나라는 오직 연방정부 뿐 일 것이다.

동백림 당국은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에서 서독과의 거래관계에서 자주성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이 노력은 성공되지 못하였지만 상급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서독과의 연관성에서 되도록이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동독이 서독에 대하여 품는 불신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본" 정부가 동독을 서독에 의존하게 하고 그 지배하에 놓고져 하는 정치적 의도의 실패를 경제적으로 성취해 보겠다는 것이 그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까지 이 불신은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 지기만 하면 동독의 경제적 요구는 점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통상만 강화된다고 해서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기초는 마련될 것이다. 어느정도 까지 경제적으로는

협조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대치적 입장을 갖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승인이 있은 뒤 동방측의 태도변화를 기대할 두번째 이유가 또 있다. 대내유화정책과 대서방측과의 개방을 촉구하는 것은 동독국민 뿐만이 아니라 1956년 이래 동구라파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진전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의 외견상의 평온은 그 표면밑에서 있을 동요를 은폐하고 있었던 것이다.

1968년초에 있었던 체코에서의 놀라운만한 사건과 폴랜드의 학생시위는 가장 근래에 일어났던 실례이다. 공산주의자들도 무제한으로 인민의 의사에 반하여 통치할 수 없다. 특히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초인간적인 근거를 갖고 있고 소위 현대산업사회의 요구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지연시킬수는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저지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동독도 이미 언급한바 있었지만 예외가 아니다. 그들은 백림장벽 구축후 동독의 내부강화에 필요한 잔인하고도 결정적인 요건을 마련한 뒤에 처음으로 크게 발전하였던 것이다.

만일 동독이 국제적인 승인을 획득하므로서 더욱 공고한 입장에 서게되면 개혁과 동서완화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발언과 입장은 점점 약화될 것이 틀림없다.

적어도 사회통일당의 간부들 중에서 청장년 세대들은 오래전 부터 동독이 동구추세에 적응함으로써 얻는 것이 많으리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 세대들은 구세대들 보다 원한감정의 계약을 훨씬 적게받고 있다. 이 세대들은 착실한 업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들의

자신에는 부자연스러운 곳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현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국가는 소시민적인 독단론이 아니라 현명한 합리성으로서 건설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객관적 태도와 개혁에 젊은 세대들이 기여한바가 컸으나 정치분야에서는 아직도 정치가특유한 편견이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소심적 태도와 고루성은 사회주의적 국가를 포함한 전세계가 변하는 마당에서 오래 유지될 성질이 아니다.

1968년 4월 동독의 신 헌법에 관한 투표가 행하여졌을 때에 처음으로 사회주의통일당 지도층은 94.5% 라는 찬성으로 만족하였던 것이다. 어느정도의 진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작된 스탈린식의 99%에 보다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진실성에 대한 갈망은 서독보다 동독에 있어서 몇배나 강하다.

1967년 연방공화국에서 일어난 대립은 독일민주공화국내에서도 은폐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있었다. 거기서도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신구의 차이와 체제와 체제에서 소외 당한 자들의 각축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서독에서 민주파와 비민주파와 갈리듯의 동독에 있어서도 이러한 문제가 핵심이 되는 사회주의의 관료적 권위적 지배체제를 옹호하는 사회주의와의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다. 서독의 민주주의 처럼 동독의 사회주의도 다른제도의 도전속에서 견뎌나감으로서 가장 훌륭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양측 모두 이러한 도전을 위협한 것으로서 느끼고 있다. 동독에서는 사회적 평등을 더 내세우고 있고 서독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자유를 무엇보다 앞세운다.

사회주의통일당이나 기민당이 일정한 원칙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성은 다른 한쪽의 발전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화와 보완만을 요구하게 된다. 사회주의란 민주주의를 빼고서 생각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또 사회적 전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치적 변화없이 동독에 사회주의가 있을 수 없고 서독에서는 사회적 변화 없이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1968년 1월의 여론조사는 대단히 계몽적이었다. 통일된 독일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서 서방적 질서체제를 찬성한 사람이 27%였고 양방체제의 평화적인 공존을 원하는 사람이 22%였으며 39%가 상호접근과 동화를 택한 사람들이었다. "체제의 각축"은 전 구라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독일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얻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이상적인 혼합체가 곧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동서간의 차이가 사회적 정치적 성격을 띄는한 이것을 하나의 총합으로서 극복한다는 것은 구라파 국가중 동서경계의 양측에 위치하고 그럼으로서 더 좋은 여건을 갖는 단 하나의 국가인 독일로서 가장 보람있으면서도 아득한 목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먼 장래를 두고 하는 생각들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국가적 경쟁이 그 지배자적 역할을 상실하였을 때에 비로서 실천적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의 가장 우수한 세력이 이때까지 일선에 나오는 기회가 적었다는 것은 다분히 서독의 정책으로 인한다.

1966년말까지는 "본" 정부의 편견이 동백림정권의 편견을 뒷받

침 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에 서방측에서 약간의 진척을 보였을 때 이것은 동방측의 교조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기는 했으나 이성을 갖인자들에게는 행동의 기회는 주지 못하였다. 전적인 진척만이 사태를 추진하는 힘이다.



## 일 곱 짜 이 유

승인은 동독의 외교정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련영향권 내에서 동독의 자주적인 발전을 용이하게 하고 또한 비로소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서독의 단독대표권 요구는 동독이 가장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곳에서 아무런 효력도 나타내지 못한다.

즉 사회주의 제국가 특히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동서독 경계선이 구라파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을 형성하는 한에 있어서 동독의 외교정책과 외교통상은 대부분 동구라파권 내에서 행하여 진다. 동독의 부장여하는 동독이 동구라파 내에서 강하나 약하나 하는데 달려 있다. 백림정부와 당 지도층이 동독의 권익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면 동독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서독정부가 대표할 수는 더욱 없다. 엘베(江)와 오달(江) 사이의 1,700만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올바르게 계획된 통일정책의 목표라면 이러한 정책은 동독으로 하여금 동독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데 있다. 흔히 말하는 비난소리로서 "울부리히트"와 그의 추종자 틀이 소련의 이익과 자기들 지배세력의 확보를 보다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정황을 잃은 것이다. 모든 제도는 그 자체의 존재로부터 나와 자체의 이익을 향하여

발전해 나가는 법이다. 여기에 스스로를 독일의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믿어지게 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증가한다. 역시 동독의 각료들도 소련과 경계 협상을 할 때에는 동독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소련영향권 내에서 소련에 대항하여 자기의 국가적 소원을 관철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유일한 국가에 "루마니아"가 있다. 처음에는 경제적 문제에 관한 것이었고 다음에는 "루마니아"의 자주적인 외교정책의 관철에 관한 것이었는데 모두 그것으로 인하여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의심받을 단계까지는 가지들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동맹국들 내에서 행동의 자유를 유발하기에 이르렀다. 실로 이것은 몇해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가능하리라고는 생각 못하였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루마니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다. 그 나라에 있어서의 고조된 민주주의와 정치적으로 탁월한 지도가 이를 가능케한 원인이 된다. 이에 반하여 동독은 민족적으로는 유난히 약한 편이다. "루마니아"가 동맹관관계의 이완을 꾀할 때에 동독은 항상 결연히 이에 반대 하였고 사회주의적 단결을 위하여 소련측 입장에 동조하였으며 되도록이면 경제적 통합에 대하여 옹호하는 입장에 섰다는 것으로 보아 동독이 얼마나 민족적 의식이 희박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유별난 충성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사회주의 통일당(S. E. D) 지도부의 이해 관계에서 나왔다 할 것이다.

구라파 정치가 민족국가간의 전치로 행하여지면 행하여질 수록 동독의 입장은 더욱 더 약화된다. 구라파에서 일어나

는 일이 확립된 양 "블록" 사이에서 협상되고 실천되는  
일이면 그럴수록 동독의 입장은 안전하여진다. 동독의  
소련에 대한 정책목적은 과거에 있어서나 현재에 있어서나 소련으로  
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소련에게 필요 불가결한 존재가 된다는 것에  
있다. 이 원칙이 얼마나 명백한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 제정된  
동독의 헌법이 잘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단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외교적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즉 "소련과 다른 사회진영국가와의 전면적인 협동과 우호" 라는  
구속이 그것이다. 만일 동독과 소련사이에 어떠한 의견차이가 있다  
고 하면 그것은 소련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동독이  
서독에게 강경하게 나갈려고 하는 때이다. 중·소 분쟁은 다른 공  
산주의자들에게 그들의 독립을 쟁취하는데 기회를 주었는데 동독의  
정치국은 소련이 서독에 대한 동독의 입장을 더욱 결정적으로 지지  
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이 얼마나 주요했는지  
는 아직 미지에 속한다.

동독의 대동구정책은 서독이란 위협적인 존재에 의하여 좌우되는것  
같이 보인다. 만일 서독과 소련의 외교관들이 어떤 구수회의를  
하면 동독에서 나타나는 초조감으로 사태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은 쉽사리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또 승인한다  
고 해서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승인이 첫째가  
될 것이고 결정적인 처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불승인 한  
다는 것이 바로 "본" 정부에서 불승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  
라고 하는 것 즉 소련에 대한 존재를 더욱 강화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을 국가로서 국제적인 승인을 얻도록 돕고 또 도울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은 소련뿐이다. 또 동독의 국제정치무대로의 통로를 막는 유일한 나라는 서독이다. "본" 정부가 동독을 어떠한 형식이든 인정한다 하면 두개의 결과를 수반하게 할 것이다.

독일 공산주의자들은 첫째로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갖고 소련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동독과 서독사이의 긴장은 해소될 것이다. 동독의 외교정책도 역시 서독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이 경감될 것이다. 제3세계에서는 지위와 포식과 명칭을 위한 싸움도 원조문제들이 싸움에 이용하던 일들도 이제 하지 않게 된다. 동독은 이제 동맹국들과의 통상 혹은 거래관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왜냐 하면 자기의 이익에 반하는 여러가지 원칙에 더 이상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동맹국중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인데 모두 소련의 지원으로 간신히 하나의 결합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동독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득은 소련과의 관계이다. 물론 승인받은 동독은 제2의 루마니아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서독으로 부터 오는 위협을 더 이상 견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소련에 대한 권익주장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갈수 있을 것이다. 1965년 기획실장 "아펠"(Apel)이 자살을 감행하였는데 이 일은 그것이 일어날 그때가 소련과의 장기

경제협정을 체결할 때였든 만큼, 동독과 소련과의 경제적 이해에 관한 마찰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측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한 사건을 문제시 할 수는 없다. 다만 동독의 대외무역이 즉시로 극단적인 변화를 일으키리라는 가능성은 그리 없을 것이고 또 희망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독의 75%에 달하는 동방측과의 통상과 20%에 해당하는 서방측과의 통상관계는 동독통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동독의 당지도자들은 동독의 경제학자들과 국민들에게 소련과의 경제적 유대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인가를 설득시키기에 열중하고 있다. 다른 공산권경제회의의 제국들 처럼 동독도 역시 기계창의 현대화를 위하여 서방측과의 통상과 서방으로 부터의 "크레디트"를 더욱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논의할 일은 소련과의 경제적 상치뿐만이 아니다. 앞장의 끝부분에서 동독의 발전가능성에 관하여 말한 모든 내용이 그 범위가 확대되면 외교정책적인 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소련이 1967년 이래 "프라그" 와 "프레쓰볼그"에서 행한 민주화 실험에서 불러 일으킨 영향은 소련이 또 동독에서 훨씬 온건한 개혁을 시행하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짐작케 한다. 만일 동서독이 이때에 더욱 긴밀한 경제적 협조를 하게 된다면 소련의 동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맹목적인 동서독의 적대시가 가끔 소련으로서는 귀찮을 때가 있을지라도 동서독인들이 서로 잘 상통한다는 것은 소련으로서 원하는 바가 아니다.

내적으로는 내폭적인 자유화를 이루고 서독에 더욱 접근한다는 것은 동독이 좀더 소련에 대하여 열한 태도로 임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을때의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본"정부가 내 결은 언론자유와 민주적 분위기 조성 적어도 "유고스라비아" 정도의 민주화, 라는 승인조건은 하나의 환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서구측에서 그 지위를 의심받는 동독은 소련영향권의 위헌경계에서 수정적인 정책이라는 경거망동으로서 소련을 자극시키는 일은 도무지 하지를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국외적인 정책에서 동독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주성을 다만 계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의 지도층이 승인을 얻음으로서 입을 혜택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특히 "본" 정부의 동구에 미칠 영향이 커짐으로서 동독이 입을 손실에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결과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 정부의 승인과 안정화 정책은 동독의 타산적 입장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안보문제의 필요성이 동독의 지배적 입장을 상실하게 하면 할 수록 동독의 외교정책은 더욱 더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동맹권의 완화와 동서구의 접근은 어떠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척을 보게될 것이다. 장차에 있어서 동서독 모두 방향결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것이다.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독에 있어서도 우세한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동맹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기는 지났다. 동서독 모두가 이제는 구라

과 국가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주장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구라파에서 행사하지 않으면 안될 때가 올 것이다. 지금 놀라운 일이 내일이면 호기(好機)로서 간주될 것이다. 독일인으로서의 자부와 자각은 이미 동구권 속의 동독에서 몇년전 부터 울트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강화한다는 것이 필요하며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추세인 것이다.

사실 구라파에 있어서의 지향은 민족국가의 형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극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과지점으로서의 그러한 현상은 대륙의 동부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곳에서는 민족주의 회복에 대한 필요뿐 아니라 대국의 영향권 속에서는 국가적 주권의 강조단이 이념의 무차별주의로 부터 탈피하고 자체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방의 길을 동독국민들에게도 트이게 하고 탐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서독의 동독에 대한 승인의 목적이 아닐까 한다.





## 여덟째 이유

동독을 승인함이 없이 소련과 기타 동구제국과의 화해와 광범위한 협조작업은 생각할 수 없다.

소련의 대독정책

소련의 대독정책은 네가지 주안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 독일인에 대한 불신 (특히 분단된 후로는 이 불신을 소련으로부터 아무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서독인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핵무장을 갖춘 세계 2위의 강국인 소련으로서 이제도 그런 불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수 없겠으나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독이 어느때는 미국을 미국이 원하는 원치 않은 핵전쟁에로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다 라는 의심을 예나 지금이나 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심은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세계에서 이 의심을 불식하기란 아직 멀었다. 소련이 서독에 있어서의 극우적 경향을 평한 날카로운 경고는 외교적 선전적 여론조성 이라고 간단히 취급해서 안 될 것이다.

나. 1955년 여름 이후의 소련정책은 독일의 분단을 전제로 하고 나온것 같이 생각된다. 그동안 시간이 감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달하려고 한 목표는 서방측으로 하여금 독일에 있어서의 두개의 국가를 정식으로 인정시키는 것에 있었다.

동독의 존재를 승인한다는 것은 소련에게는 엘베강까지 갖는 소련의 영향권을 승인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소련이 동독의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동독을 국제연합기구 가입에 진력한다는 것은 소련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독이 바르샤와 동맹의 난절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알고보면 크레믈린의 가장 중요한 이익에 기여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다. 1967년 명백하여진 것과 같이 소련의 구라파 정책은 구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미국영향으로 부터의 이탈경향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서독은 서독의 정치가 들에게는 구라파 대륙안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교두보로서 나타나고 있다. 구라파에 있어서 서독을 고립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드폴적 정치노선을 답습할 때 까지) 소련 정치의 하나의 요구가 되는 것이다.

라. 소련이 구라파 대륙의 서방에서는 장려하려고 하는 것을 동방에서는 막고저 하는 것이다. 용화는 북대서양조약기구만 하고 바르샤바 조약은 해서는 안된다는 격이다. 동구라파 제국의 서방측에 대한 상당히 활발한 접근시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나온 것이 너무너무 없게 과장된 서독의 '보복주의'라는 귀신화했다. 사실 서독이 평화적이며 상호 이해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 나타나자 동방측동맹기구에서의 군사력 강화와 정치적 숙청은 그 변명의 실마리가 없어졌던 것이다. 그리고서는 소련은 "바르샤바" 조약에서 같은 결과가 (평화적 상호이해) 나타날 것을 두려워

하지 않을수 없게 되고 이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소련의 압박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네가지 동기는 왜 소련에서 키징거-브란트 정부의 대 동방정책에 대하여 아무런 반향을 보이지 안있던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동구와의 외교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서독의 노력을 동독과의 관계정상화라는 조건으로서 저지해 보겠다는 결의는 사실 소련의 동독의 안정화에 대한 불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소련이 폭력포기성명에 관한 협상에서 서독도 동시에 꼭 같은 내용의 성명을 동독과 교환할 것을 강요한 때에서 나온 것이다. "키징거"는 1968년 봄 이 요구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이 폭력포기수단이 소련의 정치적 장벽을 파괴하는데 충분하였느냐 하는것은 문제시 된다. 확실히 이와는 반대로 소련은 서독이 제2의 독일 국의 존재를 승인하도록 하는 요구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서 서독의 대동방정책을 장애에 있어서도 방해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만들 것이다.

실로 한 동방측 국가가 반강제적인 연합을 끊고 "본" 정부와 관계를 맺을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전혀 허무한 일은 아닌것이다.

동독이 서독의 모든 새로운 유화포명이 나을적 마다 보이는 신경질은 동독의 당지도층이 그의 동료들에 대하여 그렇게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진전이 사실 목표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진전은 대동독적인 것일 뿐 아니라 대바르샤바적인 것이고 특히 대소련적인 것이 되며 동방측에서는 그러한 시도를 사회주의적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될 것이다.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서독은 원하지 않는 의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루마니아와의 관계를 성립하고 난 뒤에 있었던 것처럼 소련의 저항이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서독이 동구라파에서 부분적 성공 이상의 것을 거두려면 소련의 양해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동독을 승인함으로써 지금까지 길을 막고 있던 결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술(戰術)만이 아닌 것이 승인은 타협없는 양해정치로서 소련의 이익범위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동독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것은 소련의 불신을 불식하는데 도움을 줄것이다. 이것으로서 서독이 서독으로서의 국가적 목적보다 동구의 인접국과의 화해와 협조를 더 중요시 한다는 증명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와 동시에 필요한 것은 "오텔 - 나이세" 국경의 정식인정과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원자무기의 확보와 혹은 공동관리를 최후적으로 포기 한다는 것이다. 서독정부의 양보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것은 서백림과 연방공화국의 내부적 질서에 저촉되는 문제이다. 서백림에 대한 조정없이 승인이란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 관해서는 아홉번째 이유). 그리고 독일 민족당의 금지(NPD) 혹은

독일공산당의 부활은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서독의 국내정책에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때 만이 거론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서독의 대동구정책에 대한 신빙성을 상실하는것은 원치 않는다. 신문과 라디오 방송에서 "폴란드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이라는 말을 아직도 하고 있고 각종 지도와 심지어는 "텔레비"의 기상예보도에서도 매일 밤 수백만의 신청자들에게 이미 없는 그리고 돌아오지 않을 독일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장을 국가의 돈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정치가는 현실적인 사실 보다는 원한감정을 더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서독정책의 성실성에 대한 의혹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하여 놀랄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른 여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독에서도 어쩔수 없는 완고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불신을 갖는 외국사람들에게 설명될 수는 있겠으나 위험천만한 망상을 국가의 지원으로 유포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해를 초월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계여전 하에서는 이런것 들도 많이 신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극적인 변화는 동독과 "오렐 나이세" 국경의 승인으로서만이 불가능 할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관(官)과 반관(半官)의 모든 기관이 언론을 변하게 할 것이고 정부측의 견해와 각단체의 사적 견해사이에 분명한 한계선을 설정하게 할 것이다.

나. 동독의 승인으로서 소련은 10유여년간 애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륙동방부의 중추권은 서방측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 소련이 언제나 미국에 대한 서독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나  
이러한 관계의 완화는 긴장시 보다 유화무드가 지배할 때에 가능  
하다는 것은 소련도 이해할 것이다. 동독의 승인은 독일과 구라  
파에서의 유화를 뜻한다. 만일 소련이 서독에 있어서의 "드골"  
방식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승인이 있고난 후 생길 기회일 것이다.  
라. 승인이 소련에게 갖다 줄 불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샤  
바" 조약제국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독일에 대한 공포감을  
이제 더 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데 있다. 오늘에 있어서도 서  
독의 보복주의를 선동하는 사람들이 그린 만화가 너무 과장되어  
있으며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아직도 진지하게 생각되는 경  
향이 있다. 지금도 소련과 동독은 독일민족당(NPD)의 예를  
들고서 선전을 위한 일종의 정보부서를 신설하려고 하나 만일 서  
독이 상호양해를 위한 노력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소련의 이러  
한 움직임의 성공가능성은 희박하여질 것이다. "루마니아"는 이  
미 1967년 이래 서독정책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을 거부하여 왔  
고 "프랑크"에서는 1968년 봄에 태도를 변경하기 시작하여 당  
의 행동강령에서 서독의 현실적 세력들을 지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소련도 이들 동맹국가들의 요청에 호응하여 서독을 포함한 서구와  
의 관계를 점차적으로 완화해 주어야 할 것이리라는 생각을 배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타린"의 사망이후 동구의 눈에 띄이는  
독립성은 소련이 자기의 영향력을 자기의 우위성에서가 아니라 동  
독이익이라는 점에서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은 장차에 있어서도 더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산정부 간에는 예나 지금이나 소련을 지도자적 역할을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단결이 존재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정치적 동맹관계에 유익한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아마도 신중하게 제시되었겠지마는 여기서 능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동독의 승인은 소련에게는 손실보다도 이득을 더 많이 갖다줄 것이라는 것과 소련의 서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리라는 것이다. 사실 수 10년의 불신이 한해에 불식될 수는 없다. 소련에서도 이득이 될 점은 이용하고 손실이 될 점은 피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일거양득되는 일은 지금까지 드물게 일어났던 일이다.

여기서 「폴란드」와 「불가리아」양국의 이익문제가 대두된다. 이 나라들의 서독에 대한 관계는 그들의 지리적 위치와 독일과의 역사적 관계에 많은 관련이 있다. 유브사항이 가장 강한 것이 「폴란드」이고 체코가 다음이고 가장 적은 것이 동남구라파이다. 서방국경 계속유지에 관한 「폴란드」정부의 독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것으로서 「폴란드」정부의 서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폴란드」가 벌써 서독과의 관계를 수립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울브리히트」와의 동맹관계는 동선해빙이 「폴란드」의 내정에 있어서 가져다 줄 경화완화라는 위험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프라고」나 「부다페스트」나 「소피아」정부는 소련의 항의가 아니었다라면 서독과의 관계를 정상화 시켰을 것이다. 루마니아는 개의(介意)할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에게 이로

은 것이라면 실현하였던 것이다. 만일 "폴란드"의 내정적 유보 사항을 도의시 한다면 동구제국의 대독 이해는 두가지 문제로 제한된다. 즉 독일이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과 친구라파의 공동작업에 있어서의 발전을 방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다. 이 두가지에 얽리는 동독을 승인하므로써 최대한도로 해소된다. 그리고 이러므로써 소련동맹국가들에게 야기될 활동의 자유는 소련안에 동방진영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시키게 하고 첫 단계로서 지배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어찌했든 서독으로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가. 블승인은 "바르샤바" 기구내의 제국가간 단결을 가일층 소련으로 하여금 촉진시키게 한다. (따라서 내정적 침체의 불변동을 돕게 된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나. 서독이 시행하는 평형(平衡)정책은 그 자유선택이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이 동독의 승인으로서 폭력포기성명제한 보다 훨씬 강한 정치적 도구로서 등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동구라파와의 화해는 조속히 실현될 수 없는 문제다.

동독을 승인한다는 것은 전술상의 문제이상의 것을 갖고 있다. 승인은 여기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서독이 동구에 대하여 정치적 강화체결(講和締結)을 하자는 제안이다. 서독의 대동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목표가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동독의 승인이라는 것은 서독에게 하나의 큰 희망을 안겨 주는 것이다. 즉 동구에서는 이제 독일에 대한 불신이 필



요없게 될 것이고 서독은 사회주의진영과 사실상의 정상적 관계를 맺을수 있을 것이며 아무 이유없이 유화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동독은 그의 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을수 없게 될 것이고 이때에 필요한 조건과 분위기조성을 돕게될 것이며 서독과의 협상을 성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영속성을 갖게될 수 있는 것이다.



## 아홉째 이유

서백림의 생존능력은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다만 동독과의 합의에 의해서 만이 그 생존능력은 장기간이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동독의 증인이 전제가 되고 이러한 일에는 희생이 또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1. 서백림사태

주둔군의 이해관계 :

1958년 11월 “후르시초프”가 마지막으로 서백림의 지위를 문제시 하였을 때 미국측은 시의 사명을 유지하기 위한 세가지 필수조건을 전개시켰다.

가. 서방측 3개국의 군사주둔

나. 백림과 서방측의 왕래의 자유

다. 시의 생존능력

첫째의 조건은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었다. “찰폰드경의 경솔한 발언과 몇가지의 (틀림없이 근거없는) 불탄서군 철수문제에 관한 소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필요할 때까지 백림에 주둔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주둔하는 본래의 목적이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1. “크레이”장군은 1948년 폐쇄조치가 있을 초기에 이미 “백림이 함락되면 서독도 함락될 것이다.”라고 쓴 일이 있다. 백림에

서의 양보는 당시 서방측의 관심사였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재를  
취태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어느 때에나 성립  
된다. 연합군의 백림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연합국측은 정당성  
을 믿었다— 서독국민의 신뢰와 동맹으로서의 충성을 굳히고 서방  
측의 희생위에서 동방측과의 협정을 피하는 “라파로” 경향을 말살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2. 서방측이 이제 백림에서 주둔하기로 한 이상 백림의 자유화  
보는 동독의 안전이 소련에게 체면문제인 것처럼, 서방측으로 봐서  
도 명예에 관한 문제가 된다. 이 백림이란 점으로 부터의 철수  
는 미국의 보증에 대한 신빙성을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서 잃게할 것이고 냉전이 격화되었을때 소련으로 하여금 다시 다  
른 곳에서 정치적 공감을 시도하게끔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3. “케네디와 “후르시초프” 이래 또 다른 사태가 발생하고 있었다.  
세계 양대강국의 대립이 심각화 되어가고 백림에서 양국이 직접적  
으로 대결하고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있어서는 그들의 백림주둔이  
불상사를 막는데 가장 좋은 보장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몇가지는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분명한 것이다. 서방측의 백  
림에 대한 관심은 간접적인 것이다. 서방측으로서는 아무런 소득  
도 없는 오히려 쓸쓸한 의무만 있는 것이다. 방어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  
나기 때문이다. 소련은 여기서 제나름대로 결론을 얻어 적어도  
두번은 이 결론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이다. 즉 소련은 자키들의

독일정책이 전면 진보되지 않자, 백림을 제멋대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스탈린의 백림폐쇄로서 연방공화국의 성립을 저지하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10년후의 “후르시초프는 서백림에 대한 협박으로서 “두개의 독일”을 서방측으로 하여금 인정하게끔 강요하였던 것이다. 소련이 1961년 이래 백림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후르시초프의 이때의 실패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특히 소련은 아마도 두가지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베트남문제로 인하여 커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할 것과, 백림불안으로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새로 재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내일이 되면 소련의 이해관계도 정반대로 변경될런지도 모른다. 서백림은 그가 갖는 지리적 위치덕분에 구라파에 있어서 서방측의 약점이 되고 있다. 소련으로서는 백림을 하나의 이상적 “누를 단추”로서 취급한다. 미국과 서구제국을 협상이나 양보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싶으면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것이다. 또 백림은 이 도시가 갖는 무수한 변칙때문에 각양각색의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많이 가짐으로써 생기는 책임으로 부터 면제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행동을 절대 필요불가피하는 사항에만 한하게 하는 일이며 이러한 일은 주둔군의 본시 갖는 목적과 부응한다.

그러나 백림은 위험하제 노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3국 모두 꼭 같이 구라파에서 성취하려는 동화정책을 교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해역할이 오래가면 갈수록 서방측은 소련과 어떤 합의를 보고저 하는 유혹은 더욱 더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합

의는 “세네벨젤”시청과 “샤움블그,궁전”에서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서 취급되었던 사항을 포기함으로써 만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위험은 운위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여기에 관해서 그러한 일이 안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1958년 이후에 일어난 위기의 기간에 서방측은 장기간에 걸친 백림문제 때문에 “지쳐버리고 제네바협상에 있어서 몇군데 양보할 움직임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서백림으로서 아주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연합국들이 가질 이익순서를 들 수 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취급되어야 하는 것에 평화와 안정과 보안문제라는 것이 있다. 만일 소련측이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회를 이성적으로 제공하여 준다면, 이 문제는 동맹국가간의 단결이라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안정이 오래 계속되면 될수록 백림의 보호국들이 이 도시를 군사화 해야 한다는 상징적 힘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이다.

#### 교통왕래

두번째 필수조건인 교통왕래의 자유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받고 있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국간에 체결된 조약상의 협정은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만일 소련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폐쇄조치와 같은 제한을 피한다고 하더라도 동독은 백림의 교통왕래를 여러가지 계획으로서 방해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느 일정한 방해단계까지 도달되면 서방측은 이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 서지 않는한 서방측은 그 해결을 서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희박하다. 1963년 성신강임제날 고속도로에 차열이 완전히 뻗혔을때 전독장관 그당시 “라이나 발젤”은 노골적으로, 그러나 분명하게 만일에 방해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동독과의 교역을 꼭 같이 방해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속효를 보았다할지라도 오늘에 와서도 역시 성공하리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동독은 그 사이 서독과의 교역량이 그때보다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동독은 자기들의 자유재량의 범위를 1968년초에서 부터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독일민족당의 당원과 지지자의 왕래를 금지하였고 그 뒤에 “다음조치가 있을때 까지” 서독의 각부장관과 고관을 그리고 4월에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서백림시장 “슈즈”의 왕래를 금지하였다. 이 조치는 신중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제적, 문화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해당되는 인사는 수적으로는 극히 적다. 또 서방측으로서도 극우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연합국들도 연합국이 서백림에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관심있는 일이 아니다. 이리하여 서방제국은 항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서독은 신중한 태도만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1968년 6월 동독정부가 패스와 비자를 요구하게 되고 상당한 요금인상을 서백림 왕래에 과하게 되었을때 서방측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었다. 조치의 범위가 이것을 무시할 수 있을만큼 되어 있지 못했다.

또 한편으로는 교통이 사실상 방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라고는 할 수 없었다. 서독은 이로서 다음과 같은 반응조치로서 머물었다. 추가된 부담을 국가재산으로서 보상하여 서백림 주민의 경제와 주민왕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수상과 기민당의 원내지도자 “바겔”은 의회에서 연합국의 도움으로 방해제거에 영향을 행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연합국은 크게 관여하므로서 사태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대항조치만 할 뿐이었다. 그러나 별무효과임은 8월 13일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대항조치란 다른 것이 아니라 동독의 “기관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가맹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수속요금의 인상이라는 미온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독에 관한 규정의 수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은 법내용에 어떤 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될 것이 아니다. 시민교통에 대한 동독의 검열은 불법이고 소련의 지시로서 행하여진다는 서방측의 견해는 너무 건강부회한 점이 많아 사실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판명되었다. 동백림은 이제 소련이 배경에서 지원만 하던 서독과 백림의 교통은 방해할 수 있다는 그들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1966년말까지 다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된 것이 이제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말한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1968년초 이래 사회주의통일당 지도부의 가중되어가는 조치는 서백림의 최대약점인 교통의 민감성을 조직적으로 이용하여 보자는 목적인 것이다.

절차적인 면에서의 부담가중과 일정한 제한과 같은 또 있을 수



척분야는 그 범위가 넓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공중수송이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해서 심리적 영향이 크지 않으리라  
고 할 수는 없다. 비록 동독이 당분간 혹은 장기간에 걸쳐 행  
동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변경시킬 수 없는  
불안한 상태가 나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백림의 생존을 위해  
서는 반드시 변경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서백림과 연방과의 관계

세계 필수조건은 특히 1961년 이래로 크나큰 관심사로 되어  
있다. 연합국은 백림의 외면적인 보안과 서방측과의 안전한 접촉  
이외는 백림을 보장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백  
림이 그대로 생존해 나가느냐 혹은 생명을 잃고 형체만 남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독일이 겨야 할 문제인 것이다.

본토에서 170키로나 격리된 이 정치적 고도는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고 서독과의 관련성에서만이 그 존재가 가능할 것  
이다. 기본법에서도 백림은 연방공화국의 일부로 되어 있다. 이  
때에 연합국의 유보로 어느 정도의 제약은 받는 것은 사실이다.  
백림이 연방공화국에 속해 있다는 것은 1958년사이의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에서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었다. 연방당국의 몇  
성(省)이 (물론 중요하지 않는) 백림으로 옮겨졌고 연방대통령의 둘째  
번 관방이 백림에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연방의회는 매년 두번씩  
백림에서 주간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동독은 이와 동시에 동백  
림을 동독의 수도로서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서독의 이러한 움직

입을 아무런 항의도 없이 받아들였다. 1949년 공산당은 주요한  
 연방정부기관을 백림으로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사회주의통일당이 연  
 방국회가 백림을 방문할때 환영을 표시한 동독신문의 기사를 문서  
 로서 제출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후르시초프가 자유시로서  
 의 서백림을 주장하면서 부터 달라지게 되었다. 이때 부터 소련  
 과 동독은 함께 서백림의 연방공화국소속을 두고 이론을 제기하였  
 고 서독의 주장과 그들의 주장이 맞서 다투게 되었다. 1967년  
 12월1일 인민의회에서 행한 “울브리히트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동독 영토위에 있는 서백림은 법적으로 동독에 속한다는 것이  
 다. 서방측이 독일수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말하면 말할수록(재  
 통일문제는 점점 퇴색되어 간다)동방측은 “동독의 수도”에 관하  
 여 더욱 배대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동독의 강화를 촉진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양측이 모두 그들의 주장을 연합국측에게 유리  
 하도록 보류하는 것이다. “본정부로서는 만일 현재의 법적지위(협  
 정에 의하지 않고 점령으로서 이루어졌으니 기한부도 아니고 공포  
 할 수도 없는)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 서방측이 가장 서백림  
 을 잘 보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동독측은 현재의 지위가  
 서백림이 서독에게 편입하는 것 보다 더 좋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회주의통일당은 장차에도 두개의 독일이 존속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  
 에 서백림이 열한번째의 연방이 된다는 것은 수정 불가능한 사실  
 이 될 것이요 동독으로서는 계속 국내의 외국영토로서 취급해야  
 할 부담을 저야 하는 것이다. 점령법령은 그 성질상 임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 효력이 있는 동안은 서백림의 장래는 미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통일당은 한번은 정치적 현실을 무시한 지리적인 입장을 관철해야겠다고 희망할 것이다. 서백림과 서독과의 관계에 관한 양측독일정부의 끈질긴 외교적, 선전적 각축은 여기서 그 마지막 이유가 나타났던 것이다.

양 대결자는 이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 동독이 그의 동맹국들로 하여금 그의 백림정책을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최소한도의 손해로서는 동구라파 제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마당에서 “호전적인 독일놈”들 때문에 방해받게 된다는 귀찮은 생각에서 조금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서독으로서는 대동방정책이 백림문제 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백림약관(約款)이 있는 협정(서백림도 조약에 포함)만 서명한다는 의무는 많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든지, 지연시키든지, 혹은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런일 때문에 1961년 이래 소련과의 문화협정, 그리고 1964년이후의 통상협정의 기한연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시 다른 동구라파제국에 있어서도 서백림을 명확하게 조약속에 삽입하자는 것은 그사이 통하지 못하는 것으로 됐다. 그후로는 백림이 언급된 이전의 협정을 앞세우는 방편을 써서 어떻게 꾸려나가도록 하였던 것이다

연방정부와 상원은 서백림의 연방소속을 제도적으로나 시위적으로나 밝혀 보려는 그들의 노력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르시초프의 최후통첩이 있는 뒤의 긴장사태는 이제 서방측으로 하여금 긴장을 가속시킨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일도 이를 피하게 만들

었다. 1959년 소련의 각서 한장으로 연방공화국의 방송시설인 “독일방송국”이 백림에 설치될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1959년과 1964년 백림에서 행한 연방대통령선거를 위한 연방의회를 제외한다면, 항에로라도 국회는 연합국의 항의를 부딪쳐 실패하고 말았다. 다만 1965년 봄에 연합국은 마지 못하여 한번 의회총회를 서백림에서 개최하게 하였다. 소련은 이에 대하여 외교적인 방법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인 항의를 개시하였는데 제트기를 의회소재지 상공에 저공으로 비행시켜 폭음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봉쇄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합국은 미온적인 항의만 할뿐 곧 자기들의 그 주장도 철회하고 말았다. 정치적 내용도 없는 시위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다. 그뒤에 백림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참의원은 그 대로 “본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연방의회는 또 백림에 간 일이 있었지만 이때에는 총회가 아니고 분과위가 아니면 각과 대표회의 뿐이었다. 사실 참으로 가슴 아픈 타협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것은 서백림의 서독에 대한 관계가 아직 완전한 것이 못된다는 것으로서 일종의 치부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연합국은 서백림의 완전한 소속관계를 부인하고 있음이 틀림없는 일이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합국은 1967년 5월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백림은 연방공화국의 영토가 아니며 연방공화국이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은 연합국의 시종일관된 의사이며 견해이다”라고 하여 왔다. 연방정부와 상원은 이 서한에서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이제 할일은 연방내에서의 서백림의 통합적 지위만을 확보하는 것이

고 확대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다.

### 경제적 상황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든지 혹은 후퇴하리라 하는 인상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 즉 경제분야에서 그 인상이 가장 크게 노출된다. 1967년 가을 부터 특히 연방공화국에서의 후퇴가 양 백림에게 까지 파급되었을때 여기에 관한 논란은 더욱 활발해져 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백림의 고립상태가 시작한 이후부터 따라 다니는 문제이다. 이제 새로 대단히 엄려스러운 통계숫자가 나와 있다. 이것은 가장 많이 열거되는 대비문제인데 백림시의 파국적인 인구구조가 그것이다. 연방지역에서는 때 5명중의 한명이 연금이나 보조금을 탄다고 하면 백림에서는 3명중에 1명꼴이 된다. 1961년에서 1966년 사이에 취업가능년령이 주민수에서 8만이나 감소되었고, 1980년까지는 더욱 14만 5천명의 손실이 예상된다. 납세선위와 기타의 특권(결혼 및 출산보상금)은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자들을 서독에서 서백림에 끌어들이기에는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서백림의 노쇄현상은 곧 경제사정과 그 전망에 영향을 던지고 있다. 1961년 이래(1965년은 제외하고) 주민들의 수입은 서독보다 훨씬 느리게 상승하고 있다. 벌써 50년대 부터 시설 투자범위는 서독지역보다 뒤 떨어지고 있다. 기술부문의 개혁은 따라서 그 실현이 완만하고 낮은 장비로서는 이미 변모된 수요에 본조를 맞추지 못하게끔 되었다. 모든 대규모의 콘체른지휘본부는 하나를 제외하고서 모두 서백림에서 서독으로 이전하였다. 이와

꼭 같은 현상이 여러 연구소와 여러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업이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갖는데 서백림의 위치는 이러한 각도에서 난점이 많다는 것이다. 관변측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구실로서 간주하고 참된 동기는 경영의 내부적 합리화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수의 감소는 불충분한 성장과 대조된다. 1965년 연방 공화국에서 새로 설립된 산업회사에서 백명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서백림에서는 다만 14명뿐이었다. 1955년과 1957년 사이에 그 비는 100 대 87이었다.

1961년 이래(1967년은 제외) 백림에 대한 연방정부의 원조는 증가일로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심각한 것은 수량문제보다도 질적문제가 여기에 관련되고 있다는 점이다. 백림이 연방공화국의 연장된 작업대로 낙하하리라는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상원의원인 "셀러"가 표명한바 있었다. 서백림은 지도자 쇠퇴로 곤난을 겪고 있다. 비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그렇다. "브란트"와 "셀러"가 대연립정부의 각료로서 "본"으로 떠난 뒤에 서백림은 일류급의 정치가를 한명도 갖지 못하고 있다. "하인리히 알버트"가 직무를 감당못하고 자리를 물러나게 되자 다음 시장은 "본"에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직의 과중한 직무는 그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수 없었다. 서백림에 간다는 것은 야심있는 정치가로서는 출세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 되었다. 이와 꼭 같은 것이 예외는 제외하고 모든 분야의 전문, 지도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과 혼

련단지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었다. 출세하고 싶으면 서백림에 있는 것 보다 서독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다.

만일에 여기서 취업가능성과 더불어 수익성과 출세기회도 증가된다면 사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많은 투자를 왜 서백림에 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엇때문에 “컴퓨터” 제작과 같은 소위 미래산업을 백림에 유치하는 희망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전망이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서독의 산업이 서백림에 생산공장을 설치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중요공장은 전부 서독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리하여 백림의 장벽이 생긴 후 부터 경제적 중요성을 가진 공장이 하나도 서지 못한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백림의 기업가들이 8월 13일 이후 연방공화국에 어떤 기반이라도 잡으면 그 기반이 중심적 기반이 되는 이유도 무엇일까?

백림에 대한 서독인의 견해는 어떤가? 이 물음에 대한 부분적인 답변이 몇개가 있다. 남세선위의 시간적계약이라든지 이 선위가 백림의 불리한 지역적 위치를 흔히 균형있게 조정시켜 준다는 경험,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자극도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등이다. 모두 정치적 불안이라는 주된 요소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과 어느 정도 관련된다고 보아지는 실례에서 알아 보기로 하자. 1967년 12월 7일자의 “남독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된 적이 있다.

## 동독내의 수로항행을 방해

어느 선원의 말에 의하면 동독당국은 서백림으로 가는 수로상의 모든 서독출신선장은 항행때마다 2시이전에 정박소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다. 이 조치는 수문의 막힘으로 인한 것이라 한다. 동독과 동방측 제국의 선박은 그 항행에 아무런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서독측 세관당국에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이러한 조치로서 장차 "류엔에서 동독을 지나 서백림으로 가는 항행이 이틀이었던 것이 닷새나 걸릴 것이라 한다.

여기서 확실한 것은 수년전 부터 되풀이 되는 이와같은 지연공작으로서 서백림과 서독간의 운수가 예기하지 못할 위험이 수반되리라는 (정치적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인상을 관계인사들에게 준다 하는 것이다. 즉 오늘 사흘을 소비하던 운수공급이 내일이면 몇 색나 열흘이나 소비하게 될른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 교통이 갑자기 한달 동안이나 두절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만일에 서독의 기업가들이 공급경영자를 백림에서 찾지 않고 공급일자와 공급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함부르크에서 구한다면 사람들은 그 서독의 기업가를 잘못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이러한 불안감은 바단 교통수송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다. 백림장벽이 생긴후 어느 "푸랑그푸르트"연구소에서는 백림에 대한 투자를 솔직히 경고한바 있었다. 그것은 정치적 불안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떠한 유리한 투자분위기도 조성될 수 없다는 주지의 사실에서 그렇다는 것이었다. 사실 현재로서 이러한 불안이 백림에



서 감돌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백림의  
이러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3, 4 년안에 소각되는 투자는 세금특  
혜로서 이득을 기대할 수만 있다면 서독실업가들은 이를 맡을 것  
이다. 그러나 백림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장기간에 공한 증자이고  
10년의 상환기간이 있어야 한다.” 고 말하였다. 백림의 문제를  
푸는 말이란 “장기간”이란 말이다. 진지한 사람치고 백림이 하  
로 아침에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하  
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가 계획하는 10년 혹은  
20년이란 장기간 동안에 서백림이 어떻게 변할런지는 아무도 모  
르는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위험에 대한 불안은 아직도 극복못하고 있는 것  
이다. 여기에 대한 실례를 우리는 서독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병에 대한 이상하리만큼 무지한 실정도 이 불안  
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제2 독일텔레비방송국의 위탁을 받은  
“알렌스박하” 조사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는 답변자의 반 이상이  
서백림과 동백림 사이의 왕래가 “까다롭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1961년 8월 13일이 지나서 5년이 지나간 후에 이날에  
있었던 알을 이미 잊은 자가 43%나 되었다. 그 사건이 있던  
직후인 1961년 늦여름에 서독에서는 흔히 동독지구의 폐쇄는 서  
백림에 대한 공격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서독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아테나워쉴상까지도 이날에는 그렇게 서두는  
일이 없었고 다만 본주재의 소련대사에게 서독과 소련사이의 관계  
악화를 문의하는 정도였다.

그 이후 비교적 안정된 해가 계속되자 안정된 무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1962년에서 1967년 사이에 서독인의 방문은 34만명에서 60만명에 까지 달하였다. 그러나 며칠 동안 흥미로운 도시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극적인 장벽을 구경한다든지 동방지역을 관람하는 기회를 얻는다든지 하는 것과, 백림에 주거하기를 결심하든가 동방측과 관련을 맺기 위하여 이 도시의 미래와 더불어 사업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1967년 여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대백림공포증은 새롭고도 상당히 특이한 동기로 부터 나온것 같다. 학생소요, 언론기관, 루디 두르케, 프리즈 토이펠과 제1자치구등의 사건은 보수적인 소심과 무지가 공존하는 곳에 다음과 같은 상상을 일으키게끔 하였다. 해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질서를 위협하느니 만큼 위기는 목전에 박두하였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더욱 뒷받침한 것으로 1967년의 소위 "그리니카결의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백림의 사민당 사람들이 항례적인 형식적 관여를 참작하지도 않고 동독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다가 동방측과의 통상요구와 더우기 서백림의 경제사정은 동방측과의 협동작업없이는 풀리지 않는다는 수차에 걸친 견해같은 것은 더욱 이러한 위기감을 조성하였다. 독일연방공업조합의 조합장인 "프리즈 벨그"를 날카로운 어조로 이를 경고하였고 동조합의 백림원조를 위임받은 기독교민주동맹의 국회의원이며 조합의 총무인 "구슈타프·슈타인"에게도 서면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추분의 양을 감소시키면 된다. 그러면 그들도 다시 정신을 차릴

것이다"라고.

틀림없이 이러한 말속에는 정치적인 술책이 약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기독교민주동맹에 의하여 채택된 서독의 동방정책의 한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실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진지한 우려에서 오는 위기감이란 한다면 그것은 사태를 잘못 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특정한 단체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숫자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 견해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체독일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식어감에 따라 백림에 대한 태도도 그 중요성과 관심이 또한 줄어들었던 것이다.

국민들의 시국에 대한 참여의식도 해를 따라 식어 갔으며 적어도 외부적인 정상화는 무시못할 결과를 남겨 하였다. 과거 모든 백림위기는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백림의 군사화를 촉진하였는데 반하여 안정감은 불안감을 감소시킨 반면에 군사화를 감소시켰다.

이 경우 객관성이 신화를 배재하였다는 점에서는 이러한 사태는 환영할 수 있다 하겠다. "슈타터" 외무상하의 외무성은 대동방정책(백림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는 가치)을 백림조항의 안전화를 강요함으로써 받게 받아주는 것이 되겠다는 것, 아랍제국으로 부터의 원수방문사 백림장벽을 시찰시켜서 해원된다는 것, 경제적 효과를 노린 연방의 재정원조를 재검토한다는 것 등에 대한 사항에 고려할 점을 느꼈다는 것은 변화된 사태에 대응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정부의 백림항공에 대한 보조금을 취소한다는 1967년 당시의 의도는 이와 달랐다.

1967년 10월 “크라우스 슈즈의 정부성명의 한 구절은 커다란 놀라움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 백림의 경제는 안정되어야 한다. 백림은 사실상의 주체적 활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상적(商敵)의 특혜를 줄이겠다는 협박이 없이도 경쟁에 이기도록 되어야 한다. ”

“슈즈”가 여기에 시사한 사태경위는 확실히 일반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한 것은, 연방공화국에서는 점점 백림에 대한 현실적 사고방식이 (세월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 간다) 더 커간다는 것은 틀림 없는것 같다. 그뿐 아니라 이 현실주의가 백림문제에 대한 실증을 국민간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다른 진영으로 부터의 비판은 이미 이 백림을 하나의 이상으로는 취급하고 있지 않는것 같고 오히려 많은 평론가들은 이 백림이라는 성우에 가벼운 발길로 차 보는 쾌감이라도 갖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서독인들에게는 이제 백림이 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주변이라는 인상밖에는 없는것 같다.

백림인의 백림에 대한 견해

서독보다는 백림자신이 백림에 대한 운명에 더 민감한 법이다. 결국 백림의 생존능력은 그 주민의 생활의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서독과 비교하여 여기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항상 수반하는 위협이 백림인들에게 반항력을 강화시켰고 주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반면에 상대적인 안정이 침체를 초래하여 용기를 빠지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서백림에 있어서는 외부적인 위협만 사라졌다는것 뿐이지 융화무드는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접에서 이해할만 하다. 특히 심리적 조건이 중요한것 같이 보인다. 과거 20년간 백림은 이 심리적 조건 밑에서 살았던 것이다. 폐쇄조치이후 서백림은 서방측의 영웅적 대상이었다. 장벽구축 이전까지는 백림은 독일통일의 징검다리요 경고의 상징이었다. 재통일이 목전에 있다든지, 적어도 가망속에 있게 되는 동안은 백림은 독일의 수도였다. 이러한 요구의 근거는 축일식사(祝日式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실제적인 경험이 뒷바침하고 있는 것이다. 동방측의 사람들이 한번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싶고, 질 좋은 물건을 사고, 다른 신문을 읽어 보고, 취미에 맞는 영화를 관람하고, 또 동독을 이제 완전히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서백림으로 왔다. 다른 면에서 서독이 그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이란 별로 없다. “본”이란 소도시는 “스프레강변의 대도시”에 비하면 항상 하나의 수도회화로 밖에는 보이지를 않았다. 그래서 “본”에서 생산되는 대 동방정치는 백림사람들에게는 유치하고 불안스럽게만 여겨지고 전독일을 대표하는것 같지가 않는 것이다. “본”의 정치가들이 백림방문이나 기타의 강연회에서 하는 전독일에 관한 연설은 허황된 소리로 들리었으며 심지어는 비웃는 경향까지 생기게 하였다 (동독의 라디오강연도 예외는 아니다). 연방공화국금고에서 백림으로 흘러 들어가는 수백만 마르크라는 금액을 백림사람들은 선물이나 혹은 희생적인 돈으로 보지 않고 비정상적인 부담에 대한 권리요구로서의 부채보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호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곳에 오히려 전독문제에

대한 "본" 정치가들이 저야 하는 책임감을, 돈으로 무마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낳게 하는 것이다. 천독정책에 관해서는 서독인보다 백림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백림사람들은 믿고 있다. 천독문제의 발동력은 "본"에서가 아니라 백림으로 부터 온다는 신념은 50년초이래 백림당국 뿐만이 아니라 백림전체가 품고 왔던 사실이다. 성공적인 통과증실험까지도(여하튼 새로운 정책의 첫 단계이었다)이러한 확신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상처 노출"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통증유지)이라는 "프란츠 암렘즈"의 대차이론 까지도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냉전계속론자와 화해주의자를 막론하고 갖가지 견해의 소유자들에게 모두 공통된 감정을 낳게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한 원한감정과 수도로서 갖는 자부심의 혼합이 시간이 지날수록 백림사정에 대한 여러가지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어가게 되었으나,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었던 것이다. 백림의 기능이란 언제나 변함 없이 수도, 전위도시, 서방측의 소-원도우, 동방측으로에 대한 교량이라는 것으로서 바로 이것이 백림이 갖는 사명인 것이다.

모든 이러한 것들이 상벽의 구축으로서 급격한 충격을 고했던 것이다. 동독과의 폐쇄가 백림과 서독과의 관계를 역시 변경시켰다. 항상 동서독간의 제3자란 감정속에 있었던 서백림인들은(동독과 마찬가지로 서백림인에게 서독은 "피안"이다) 점차로 자기들이 천독의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독에 속한 존재일뿐이라는 자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실망과 자각과정 단계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서방측의 방위보증은 전백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백림에만 한한다는 것은 정치가들에게는 명백한 것이었지만 한번도 이야기 된적은 없었다. 연합국측이 동방구역의 폐쇄조치를 아무런 항의도 없이 묵인할 때의 놀라움은 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불안감이 전도시를 휩쓸때 이것을 재빨리 간파한 것은 서독정부보다도 미국측이었다. “아테나워”가 이 사태를 그 당시의 선거전에서 “브란트”에 대한 공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을 때, “베네디”대통령은 그의 부통령 “존슨”을 백림을 방문하게 하였다. 이때에 그때까지 백림을 방문한 어떠한 외국귀빈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던 백림인들은 백림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믿을만한 곳은 “본”정부보다는 “워싱턴정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6년뒤에 “카이저”제방을 “아테나워제방”으로 명칭변경을 할려고 할때에 이에 대한 항의결의문에 14만명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한적이 있었다. 이리하여 결국은 명칭변경은 보류되었지만 이때의 사건은 왕조적 혹은 정파적인 감정을 갖고서는 해명할 수 없는 오히려 라인강 좌변의 인사들에게 대한 분노가 그 주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벽에서 오는 이러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1961년이 지나자 상원은 서백림이 가질 새로운 사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빌리 브란트”는 백림을 각국민간의 경제와 정신생활과 우의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선포하였다.

그는 문화와 국제적 학문의 중심으로서 독일의 가장 크고 또 더욱 발전해 가는 공업도시로서 미래공업의 소산지로서 동서간의 회전축으로서의 배림을 그렸다. 그 당시 여러가지 안이 속출하였다. 그러나 6년이 지난 뒤 총결산의 결과로서는 사실 많은 것을 시도하였고 또 많은 결과도 낳았으나 애초의 큰 꿈으로 봐서는 실현된 것이란 거의 무에 가까웠다. 그리고 중소정도의 규모를 가진 의도도 그 결과에서 현상유지의 범위이사로 나타난 것이 별로 없었다. 1959년 이래 시로서의 고질적인 위험이라 할 수 있는 위축과정은 다만 연기되었을뿐 정지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었다. 이러한 사태가 점차적으로 널리 인식되자 두번째의 실망감을 야기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은 그것이 현실에 대한 적응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필요하고 또 유익하나 시의 활력을 멸살한다는 점에서는 위험천만스러운 것이다. 1967년부터 시작한 여러가지 사건들, 학생들의 초기의 과격함 소요, 학생과 주민들간의 대치, 사회민주당의 분열, 그로부터의 “하인리히 알버쯔”의 실각과 의결대립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하나의 위기의식의 표현으로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알버쯔”의 후계자 「크라우스슈쯔」는 1967년 10월말경 그의 정부성명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는간에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의 경제와 모든 정치지도자에 대한 신뢰상실과 결부된 배림의 정치적 위치에 불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배림과 연방공화국 사이에는 언제나 한가지 중요한 차이



가 있다. 서독인들에게는 배 동방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자기의 미래와 관련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나 서백림인들에게는 지극히 중요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리하여 서독인보다도 서백림인이 훨씬 그 대극화가 강하다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정책의 정체, 상원의 수동성, 통과증 시행의 계속실행을 방해한 “본” 정부의 소아병적인 형식주의 등은 뜻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절망케 하도록 하는데 충분하였던 것이다. 백림의 대다수 주민들은 “브란트”의 통과증 정책을 환영하였고 그것이 가져다 준 여러 가능성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서방국에 있어서의 고조된 비판과 냉담, 연방공화국에 대한 소외감의 증가 등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폐쇄조치가 있을 후 많은 시련을 이겨내었고 어느 누구보다도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과 반항이 강해졌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이제 백림인들의 면전에 대두된 문제는 어떻게 장차에 있어서 백림의 생명력을 존속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후르시초프”의 최후통첩이 있을 뒤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8월 13일이 지나자 사회에서도 널리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결 론

서백림에 대한 새로운 규정

서방측이 동독을 승인하는 것과 결부되는 목적이란 서백림이 장차 올 10년간에 확고한 생활의 계기를 가질 수 있고 조약상 확정될 수 있는 서백림에 대한 전체규정일 것이다. 이 조약의 참가국 —혹은 조약제도— 은 동서 양독과 서백림주둔 4개국과 전체 구라과 제국일 것이다. 주도권은 “본”정부가 가지며 다른 광범위한 대동방정책과 마찬가지로 서방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제 2 단계는 동백림과 소련과의 접촉이다. 이때에 소련에게 항상 정보가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백림측에서 “본”정부의 백림문제협상에 대한 자격 합의를 온다면 이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고 백림상원을 협상대표로서 내 놓을 것이다. 그러나 “본”정부를 국외자로 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결국 동독의 승인에 대한 결정은 “본”정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단계에서 서방측 혹은 서방측의 일원이 소련과의 회담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순전히 전략상으로 결정될 문제이다. 서백림과 경제적인 관련성을 희망하는 구라과제국과 어느 단계에서 접촉을 하는가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인 것이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행의 외교적 일치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본사상은 이성적 백림안의 근거가 되었던 사상과 일치하게 된다. 즉 동서이해관계의 합의점 위에서

성립되는 백림시의 안보인 것이다. 이 정책의 두번째 전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격리된 백림문제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언제나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1959년의 4국협상에서 실증이 나도록 확인된 것이다. 과거의 백림사태는 동서관계의 여하에 달려 있었다. 즉 동서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동서독의 관계가 좋았고 그럴수록 서백림이 좋았던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여기서 전개하려고 하는 문제의 도달점이 유도된다. 즉 서독과 동독은 서백림이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나 더 이상 위협상태에 놓이지 않고 또 서방측이 서백림에 있어서의 방위의무를 풀 수 있도록 양측이 어느 정도의 이익합의와 협동을 서로 유리한 방향에서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달점은 아직 요원한 곳에 있다. 현재로서는 양측에는 모두 깊은 불신이 지배하고 있으며 서로 상대의 불리한 점을 노리는 형편에 처해 있다. 또 현재로서는 미국이 물리적인 힘으로서 서백림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에서만 안정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들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얼키고 상호불신이 해소되어 가면 점점 변하여 갈 수도 있는 것들이다. 독일인 스스로 자기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그러나 세가지는 확실하다. 그러한 상태가 가장 자연적인 상태라는 것(외국군대가 영구 주둔한다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한것), 그것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만이 그러한 상태를 실현케 된다는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겠다는 결의라는 것들이다. 현재의 사태의 영구화를 저지할 목적이 어떠한 서백림정책에도 서방측이나 동독이나 모두 협조할 용의가 충분히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불란서인들도 백림에서 그들의 부담을 체면손상없이 벗어나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것이며 동독도 점령군의 여러가지 특권으로 부터 해방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것이다. “본”정부가나 서백림당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태가 주는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서 동독인들에게 완화 의지를 더욱 고취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그것이 가져다줄 이득은 서독이 이제 백림의 안보를 위하여 연합국의 도움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외교상의 행동자유가 어느정도 증가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정책은 먼저 에티켓의 변경이 요구된다. 동방측의 태도 변경을 서방측이 요구할 수는 없으나 서방측 스스로의 태도를 통하여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이며 이성도 서로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나 저자세가 되어 “울브리히트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서백림 자체로서도 불리를 초래하지 않고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령 난민동맹의 시위행진이라든지 연방의회의 서백림개최라든지, 서백림의 언론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이 반공선전에 너무 주력한다든지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불필요한 도발과 언론자유와 자체사이에는 커

다란 간격이 있는 것이다. 언론의 신중성이 곧 겸손이요 현실감각이지 결코 소신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가들과 언론인들이 미국의 힘을 믿고 미국보다 더 사납게 행동한다면 소련의 배경을 믿고 날뛰는 동백림의 선동분자들과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1967년 가을 「아놀드 쯔바그」 사건에 관한 서독전체를 모욕되게 만든 오보때문에 「타란텔」 신문사가 발간 중지된 일은 시대착오 정신의 제거이지 항복을 뜻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다만 자유백림이 시의 자유권익을 위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하나의 환경적응의 실례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울브리히트」는 정치적 범죄자라기 보다 동독의 국가의회 최고 의장이라는 것이요, 한 도시가 환경을 무시하고 무한정인 존속을 원할 수는 없는 만큼 동독과의 협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요, 서백림의 장래는 적을 파아트너로 만드는데에서 보장된다는 것들이다. 많은 경험이 증명해 주는 것처럼 이러한 환경적응은 동백림측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환경적응을 위한 노력의 긴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다.

여러 사실이 변하면 분위기도 점차로 변할 것이다. 조정해야 할 내용목록은 많다. 그러나 아마도 우선적으로 할 것은 연방공화국과 서백림과의 관계일 것이다. 법적으로 서백림은 동독에 속한다는 사회주의통일당의 주장은 서백림이 소련의 점령지역부분이 된

일이 없으므로 근거를 잃고 있다. 1945년 소련이 백림을 정복하고 점거한 것은 전쟁협상경과에서 나온 결과이다. 여기서 소련이 전체 백림에 대한 제1차적 권리를 유도한다는 것은 미국이 1945년 정복한 "라이프치히"와 "뉘른겐"의 제1차적 권리를 보유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1944년 9월 12일의 합의사항인 것이다. 이 합의에서 분명히 백림은 동방구와 분리시켜 놓고 있으며, "특수점령지역"으로 규정지워 놓고 있는 것이다. 양측은 모두 전쟁종료후에도 이 합의를 준수하게 되었다. 즉 미국은 그들이 점령한 소련지역 부분에서 철수하였고, 소련은 서백림을 서방 3국에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동독의 서백림계승권은 이것으로서 근거없음이 밝혀졌다. 또 역시 서독이 서백림의 귀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서독법에 의한 것이지 장차의 백림귀속에 관한 해결원칙이 될 수 있는 상위법인 4국협정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우선 서백림은 애초의 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즉 동독영토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독의 일부도 아니라는 제3의 형태이다. 근간에 백림에서 운위되고 있는 무명인사의 한 발상은 실제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즉 연방공화국과 상원(주권이 없는 만큼 점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함)은 현재 양국간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를 규정짓고 확인하는 하나의 조약을 체결한다. 이로서 서백림이 "주체적인 정치단위"라는 것이 표명되었으므로 동방측의 주장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것이고 또 서독측으로 봐서도 실질적으로는 서백림이 여전히 서독의 재정적 경제적 법적 구조속에 머문다는 현실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본”정부가 계속하여 외국에서 서백림을 대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상원이 조약상으로 서독에게 그 권한을 인정하면 된다. 이러한 예는 “스위스”가 “리히텐슈타인”의 권익을 외국에서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혹은, 또 비슷한 구조는 소련과 동독으로서 용납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동독과 소련은 이때까지 서독과 서백림의 우호관계를 반대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서백림이 서독의 일부라야 한다는 —서방 연합국의 견해와도 정도적으로 차이가 있는 주장— 점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구조는 서백림상원이 서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독과 협상할 수 있다는 것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물론 연합국의 주권유보로서). 서백림은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양독일국가와 동등한 관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동백림은 오래전 부터 요구하여 왔던 것이다.

서방측에게도 이러한 규정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서백림과 서독과의 귀속관계로 동방측과 야기되었던 분쟁은 종말을 고히게 되고 이로서 정책수립상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서백림상원의 동독에 대한 정책에서 그렇고, 서독측으로서도 항상 백림조항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어야 할 동구라파측과의 협상문제도 여유가 생

질 것이다. 또 서백림의 변화된 지위가 다른 분야에서도 여러가지 유리한 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독과 동독과의 협상 사이에서 제3자적 위치에 있다는 것이 서백림으로 하여금 동서독 양측을 연결시켜 주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러한 연결이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제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제3자로서의 서백림이 맡는 역할은 서독으로서 하등의 불리한 점이 없을 것이며 동독으로서도 반드시 손해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희망과 위험

백림문제의 합의에 대한 전망은 기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두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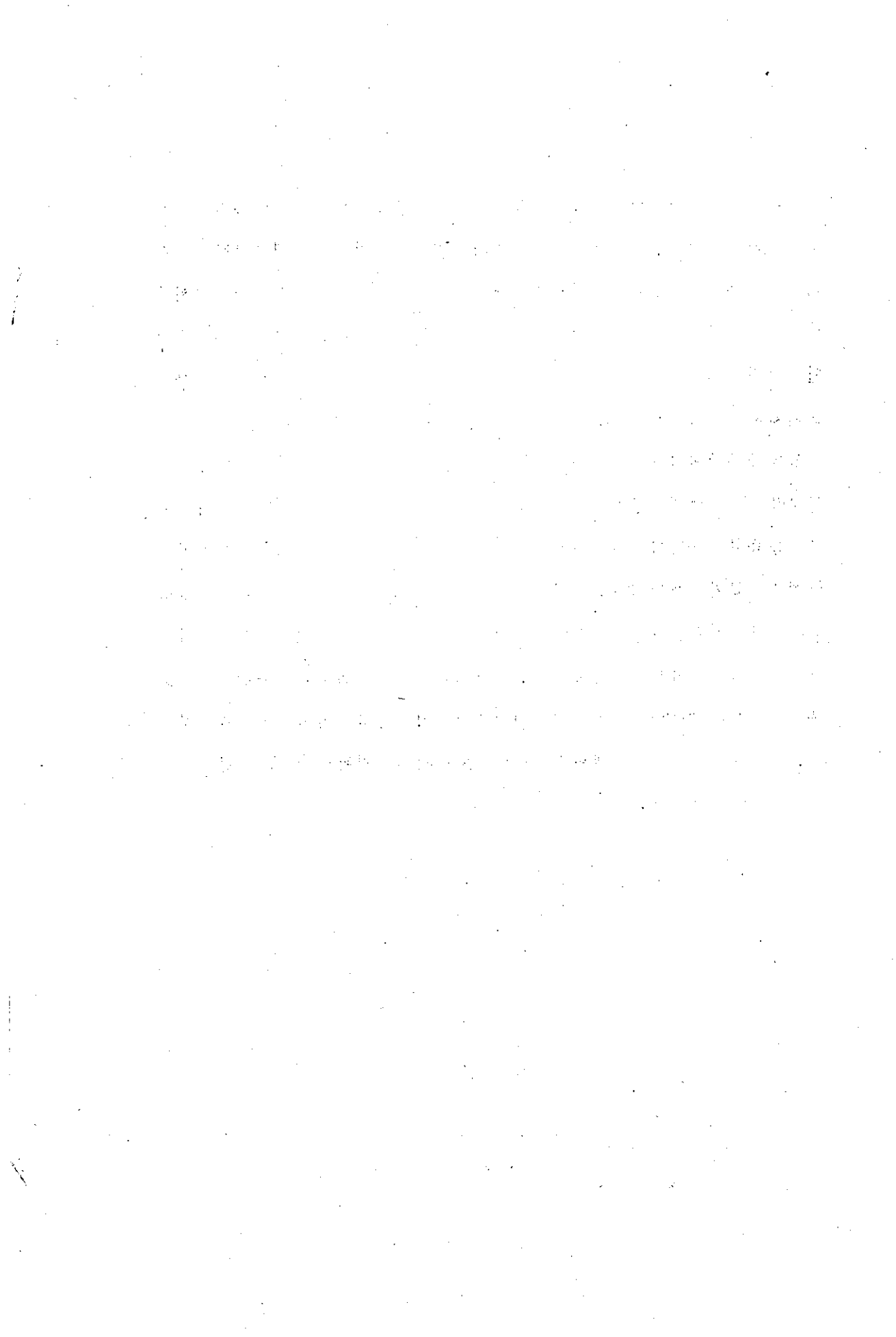
1. 비록 소규모적이고 세심하게 처방된 새로운 백림위기라 할지라도 곧 협상 분위기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고 서백림의 장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할 것이다. 서방측은 백림의 외부적인 안보는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시의 생존력은 오히려 약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적어도 상대적인 안정이 있을 때에 협상하도록 해야 한다.

2. 동독의 승인으로서 기대되는 유일한 보람있는 반대급부란 향상된 서백림의 지위이다. 이 기대는 승인이란 댓가가 동백림과 소련에서 어떻게 그들의 이익을 불러 일으키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 댓가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하게 그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이것은 동백림이 국제외교에 등장하여 취해지는 하나 하나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 서독의 각 정당들은 당내적인, 국내정치적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환경적응을 수행해 나갈 것인데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승인은 실질적인 정치분야에서 서서히 인식될 것이고 일반은 그 영향을 정확히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연방공화국내에서 대 동방정책과 독일문제가 시한적이라 한다면, 전략상의 고려가 무책임하게 되기 쉽다고 한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도 동독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그것은 오로지 서백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도시가 제기하는 문제는 오직 손실만 있고 이득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독일정책에 관한 문제들과 엄밀히 구별되는 이유이다. 주저하고, 연기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서독의 여러가지 가능성을 희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백림으로서는 치명적인 결과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열 제 이 유

만일 동독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가로서 동·서구라파의 화해교섭에 참가할 수 있다면 구라파의 분열상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진척되면 그럴수록 동서독간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다.

1945년 독일의 무조건항복이 있을 후 자주적인 독일정책의 가능성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연방공화주의자들은 열열한 구라파주의자들이 되었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히틀러, 휘하의 나치스는 그 잠재가 끈질기게 벨치도록 할만큼 악독한 것이 었다. 그래서 서독의 정치가들이 50년대에 주권의 포기과 초국가적인 기구의 가입을 정강으로 삼는 것은 군색 속에서 나온 미덕이랄 수는 없었다. "드골"은 먼저 서구라파통합문제에 종결을 지어버리게 하여 이로서 서독으로 하여금 민족국가적 정책을 채택하겠금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서독이 민족국가 라는 것을 정치의 "최상가치"로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구라파의 이익을 위하여 독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희생한다는 것은 정부나 대다수의 정당과 국민이 이미 작오하고 있음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태세는 다만 서구라파의 관계에서만이 해당되는 문제이다.

서방측에 대하여는 초국가적인 정책으로서 임하고 동방측에 대하여는 민족적 정책 (개 통일요구의 형성 과정에서)으로서 임한다는 모순은 자주 거론된바 있지만 이것이 초래 할 결과에 대해서는 언

급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렇다면 구라파의 분단은 독일의 분단 상태를 승인하는 경우에 극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륙에 존재하는 양진영 사이에서 성립되는 어떠한 협정과 상당한 범위의 양해도 "두개의 독일"이라는 힘의 균등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서독의 정부와 정당들도 이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 "브란트" 외무상이 말 했듯처럼 구라파가 진력하는 구라파의 평화적 질서는 국가적 통일에 대한 평화적인 전망의 고려를 필요로 한다. 그런고로 전 구라파 문제는 전 독일 문제보다 시간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위에 속하는 문제이다. 기독교사회주의동맹과 자유민주당의 당수인 "슈트라우스"와 "셸"은 보기 드물게도 의견을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나는 독일민족국가의 재건이란 믿지도 않는다(슈트라우스)" "19세기식의 고전적 민족국가로서 재통일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정치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셸)".

국내정치적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비논리성을 갖고 기독교사회주의동맹은 동독과의 관계를 조정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맹렬히 반대한다. 이에반하여 자유민주당의 원내총무 "겐세"는 동독은 "독일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구라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역할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 구라파의 발전은 모든 다른 구라파 제국과 동등권을 누릴 수 있는 승인된 동독을 전제한다는 논리는 이때까지 어떠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정치가도 발설해 본 일이 없다.

이미 상술한바와 같이 "본" 정부는 한때는 어느 결정적인 사태발전 단계에서 동독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예

측할 수 있는 어느 강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하는 것 보다는 서독이 구라파적 정세를 슬기롭게 판단하여 자주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구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간에는 과거 10년간 모두 국제관계를 개선한바 있었는데 유독 독일만이 대륙의 한복판에서 냉전의 고도로서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공동번영을 위하여는 동서독의 대립은 하나의 중요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그들의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서방측에 대한 활동의 여지를 주어야 할 소련을 도외시 한다면 구라파에 있어서의 관계정상화를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는 나라는 서독을 제외하고서는 없을 것이다.

동독의 승인은 전구라파 대륙의 앞날을 위하여 가장 유익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현재 화해를 곤란하게 하고 더우기 부분적으로는 저해까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유해한 구실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승인은 이미 서독이 1949년 서방제국에 향하여 시작한바 있는 시종일관한 정책수행을 동방제국에 대하여도 할 수 있겠음 할 것이다.

동독을 구라파의 이익을 위하여 승인 하라는 요구는 비록 승인이 양독의 이익에 반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50년대의 양자백일, 재통일이냐 구라파 통합이냐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는 어느정도의 제한을 받고 있다.

늦어도 60년대 중반기 부터는 어제의 모순이 내일의 종합으로서 발견될 수 있게 되었다. 서독이 전체 구라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동독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㉑. 모든 다른 구라파인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사람도 그들의 힘을 합치면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으로 지방화 되는 것으로 부터 면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㉒. 전체 구라파의 공동작업이 발전적으로 진척이 되면 서백림도 그 기능과 생명력이 가장 잘 보장 될 것이다.

㉓. 이러한 공동작업이 진척되면 될 수록 동독을 더욱 밀접하게 끌여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고립화 하려는 것은 어느정도는 근거 있으나 또한 어느정도는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동백림의 경향은 동독이 구라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의무의 정도에 따라 이 경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또 감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와 교통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㉔. 이것은 또 후일에는 양독이 요구할 검열과 감시가 필요하게 되는 군사적 협정에도 해당된다. 이제 까지 구라파의 안보를 위한 총체적인 규정이 다만 안(案)으로서만 있었지 조치로서 있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양측에 상호간의 신뢰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것에서 온다.

군대감축, 군비감시, 비 군사화는 해빙의 시초가 아니라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만일 우리가 그러한 발전의 소망되는 마지막 지점을 가정한다면 가장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마지막 지점에서는 소련이 동독에서 그의 군대를 철수 시킬 것이고 모든 구라파 국가들은 동독을 주권국가로서 승인할 것이며 내정적인 변화가 외교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만큼 공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없는 한 소련은 동독에 있어서의 군사화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여기에는 소련이 구라파 안보체제를 위한 그들의 제안이 공적으로는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서방측에서는 이때까지 한번도 제안이란 해본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 양측에서는 모두 군비감축을 통하여 화해를 진척시켜 보겠다는 세력이 있다. 구라파의 사태가 안정되면 될수록 강대국은 이러한 추세를 외면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또 외면할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진전이 처음에는 보잘 것 없고 점령군이 독일에 주둔하는 기한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오래 계속되는 상태가 아닐 것이다.

군사적 화해는 반드시 정치적 결과를 수반 한다. 독일땅을 물러나는 모든 군대는 서독과 동독사이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강대국이란 배경이 희미해지면 희미해 질수록 동독과 서독은 상대적인 강화를 위한 세력의 필요성이 적어질 것이다. 모든 외국군대의 완전철수는 독일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전제가 될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한번은 독일사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동서독의 존속보장과 구라파에 있어서의 의무로 동서독이 결합되는 체계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이 결과는 더욱 고조된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될 것이다. 이 자유는 동서접근에 직접작용은 안 할지라도 용이하게는 할 수 있는 것이다.

5. 독일의 국가적 통일에 대하여 현재 "본" 정부에서는 두가지의

전해가 있다.

동독의 승인은 반대하고 구라파의 평화질서는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는 동독이 다른 구라파 국가와 마찬가지로 똑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구라파 질서(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전연 불명확한 것은 동서독이 서로 동등권을 갖추지 못한채 어떻게 동서독 사이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독에서는 오래전 부터 이러한 환상을 그리려는 자가 어떤자 인가를 알고 있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의 의사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원하는바를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단일 동서독이 관이한 양측의 국가적 사회적 질서를 결합시키코저 한다면 상호간의 화해는 어렵고도 장시일에 걸쳐 과정을 밟고 승인이라는 것이 없이는 도무지 유도될 수 없는 일이고 하물며 목표달성에 있어서는 더욱기 불가능 하다. 결국 승인은 통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이 한번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가능의 첫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독일국가동맹 으로서만이 실현된다는 전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이 논의되는 국가연방문제는 동서독간의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서 답변될 수 있는 독일에 관한 문제이요 또 구라파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면적인 안보체제와 새로운 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는만큼 동서간의 차이를 감소시킬수 있을때 비로소 강대국과 여러 구라파 제국의 이익은 양독간의 긴밀한 결합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전제가 되는 것은 동서독중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  
를 국가로서 불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분단상태의 인정만이  
그 분단을 완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